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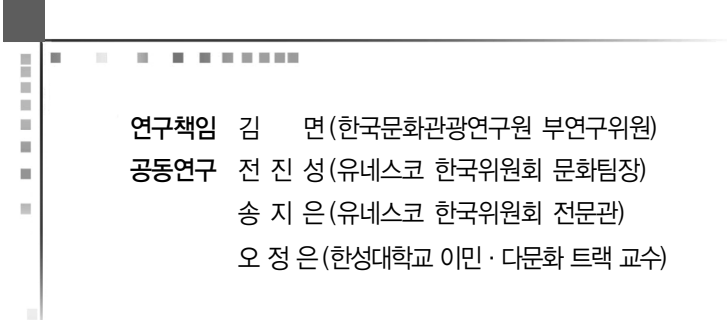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회원국의 역할과 과제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전 진 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송 지 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문관)

오 정 은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 트랙 교수)



## 서 문

우리나라는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태다양성처럼 인류에게 문화다양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2005년 협약이후 세계 각국은 지구촌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창의적 활동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사회 내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문화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가치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존과 통합을 이끌어낼 문화다양성 정책을 기획,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문화 정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서 역할과 과제를 파악하고자 기존 국가 간 협약 이행 및 협력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증진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도출한 내실 있는 협력 및 발전방안이 중앙부처는 물론 많은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다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8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정 만



## 연구개요 ●●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 한국은 2017년 6월 12~1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 본부에서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원국에 선출되었으며, 2021년 6월까지 4년간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활동함
- 이로써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국가경제규모와 국제영향력에 부합하는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이슈 발굴과 전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문화산업 분쟁 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하고 시장의 논리가 아닌 문화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이 요구되기에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목적

- 유네스코 기구 내 입지와 위상을 강화할 전략 마련이 중요한 바, 우리 실익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이슈들을 글로벌 아젠다화하고 전략적 비전을 제안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보다 균형있는 교역을 촉진하고자 국제이슈나 규범형성에서 중재와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가교국가(Bridge State)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함
- 아시아태평양 위원국으로서 지역을 대표하여 주도적인 의제 발굴 노력과 내실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문화외교 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음

## 다. 연구의 범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총회 및 정부간위원회 보고서를 수집·분석하고, 협약 이행에 있어 국외 주요위원국의 운영사례를 검토
- 문화다양성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 및 글로벌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당사국 총회 결의안 및 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이행 혹은 지원되는 개별 사업의 현황을 분석대상으로 함

## 라. 연구 방법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체부 등 중앙부처 관련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한 협약의 이행 방향에 대한 주요 성과검토 및 향후 계획 공유
- 문화다양성 협약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 시민사회, 민간단체의 관련 활동에 대한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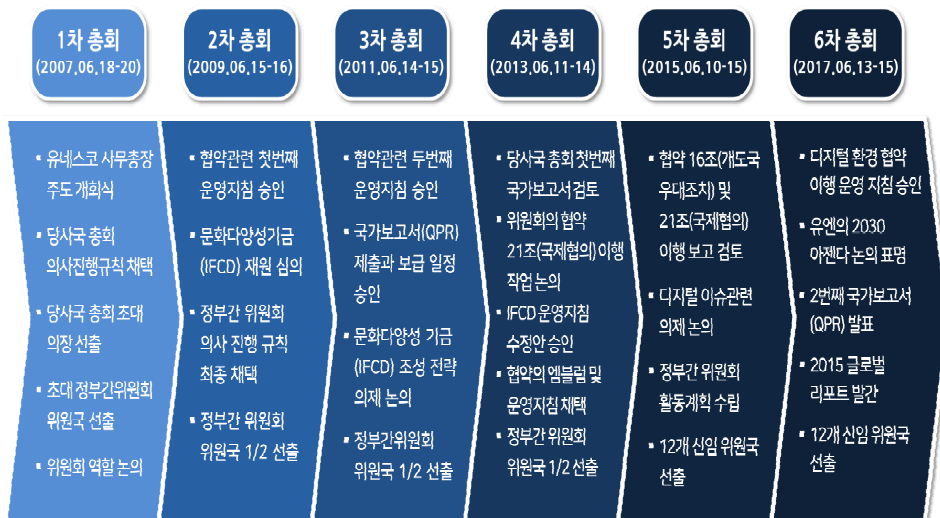
〈표 3〉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 구 분   | 유네스코 국제교류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  |
|-------|---|---|
|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li> <li>•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대상(40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결과 및 향후 과제추진관련 면담</li> <li>•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10명)</li> </ul> |
| 조사 내용 | 문화다양성 협약 인식, 국내이행운영 평가, 국제교류평가, 위원국으로서 역할 및 향후 정책추진방향(23문항)   |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이행평가 및 향후 위원국으로서 과제추진 논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의견  |

## 2. 유네스코 체제와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분석

### □ 협약 당사국총회의 동향분석

- 모든 협약 가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이며, 협약 관련 전체회의이자 최고기구(제22조)로, 매 2년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하고, 협약 이행과 적용을 위해 정부간위원회가 준비한 운영지침을 승인하며, 협약관련 취해진 조치에 대해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함(제18조4항, 제22조4항의 b)
- 2005년 10월 채택된 동 협약에 145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당사국 총회와 11번의 정부간위원회 및 두 번 비정규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음



[그림 7]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제 발전과정

### 3. 정부간위원회 협력활동과 주요의제

〈표 4〉 정부간위원회 주요 논의안건(종합)

| 위원회 회차                      | 주요 사항   |
|-----------------------------|---|
| 제1차<br>정부간위원회<br>(2007.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대 의장단 구성</li> <li>- 정부간위원회 개최장소 ‘프랑스 파리’ 확정</li> <li>- 협약이행 가이드라인 준비과정 논의</li> <li>- 문화다양성기금(IFCD)사용 가이드라인 논의</li> <li>- IFCD 분담금 1% 자발적 기여 제안</li> </ul>   |
| 제2차<br>정부간위원회<br>(2008.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촉진에 대한 운영지침 초안 논의</li> <li>- 지속가능발전에의 문화통합 운영지침 초안 논의</li> <li>- IFCD 활용지침에서 개도국 대상 사용 합의</li> <li>- 개도국 우대조치 의제 토의 및 5년 이후 재정비안 논의</li> </ul>   |
| 제5차<br>정부간위원회<br>(2011.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CD 관련 당사국의 보다 많은 자발적 기여 요청</li> <li>- IFCD 시범사업 신청심의 및 17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li> <li>- 협약당사국 정기보고서 제출 언어 ‘영어’, ‘불어’ 사용 확정</li> <li>- 여타 국제기구에서 문화다양성협약 인용 및 이행주시 주목</li> <li>- 협약 엠블렘 제작 논의 및 차기 위원회에서 제출 결정</li> </ul>                      |
| 제7차<br>정부간위원회<br>(2013.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기술과 문화다양성증진관계 보고서 반영 권고채택</li> <li>- IFCD 신청심의 및 10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li> <li>- 아태지역(그룹 IV) 참여부진 보고 및 비준활동 권고채택</li> <li>- 정기보고서 제출상황보고 (2012.8-13.8; 20개국 제출)</li> <li>- 사무국에 시민사회참여 관련 정보분석 요청</li> </ul>                                |
| 제10차<br>정부간위원회<br>(2016.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이행 모니터링체계 4대 주요목표 보고</li> <li>- 시민사회 참여방안 의제포함에 대한 위원국 동의</li> <li>- IFCD 신청심의 및 6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li> <li>- 디지털 이슈 운영지침 초안채택 및 의제배경 설명</li> <li>- 정기보고서 제출접수(33개) 및 글로벌리포트 발간활동 보고</li> </ul>  |
| 제11차<br>정부간위원회<br>(2017.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CD 신청심의 및 7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br/>(2010~, 총 51개 개도국의 90개 프로젝트에 630만불 지원)</li> <li>- IFCD 외부평가 실시 &amp; 21가지 권고사항 제시</li> <li>- 시민사회단체 70개 가구의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설명</li> <li>- 제2차 글로벌리포트 발간소식 보고</li> <li>- 협약 모니터링 목표달성 상황 및 신규 비준국 보고</li> </ul> |

#### 4. 주요 위원국 정책 현황분석

〈표 5〉 위원국별 정책추진사례

| 위원국                      | 정책추진사례   |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문화 프로그램: 이주민과 사회통합정책</li> <li>· ‘움직이는 MENA’; 예술가 이동성증진 기금</li> <li>· 예술가의 사회보험기금(KSK)</li> <li>· 디지털환경의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법의 재정</li> <li>· 조약과 협정의 시민참여활동</li> </ul>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간 이동성 프로그램; 해외예술인방문지원</li> <li>· 조약 및 협정의 시민참여활동</li> <li>· 정부의 문화산업지원; 온타리오음악기금, 크리에이티브 서스캐이원, 퀘벡 디지털문화계획</li> <li>· 예술인 지위에 대한 법률제정</li> </ul>              |
| 오스트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D 플랫폼 플리밍과 ORF 간 관민 파트너십</li> <li>· 여성영화제작자 육성지원책</li> <li>· 조약 및 협정- 시민사회참여</li> <li>· “성장: 함께-예술과 통합” (2016)</li> </ul>                                     |
|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민족 언어 및 문화증진 정책</li> <li>· 성소수자의 권리증진</li> <li>· 국제개발협력기구(SIDA)</li> <li>· 영화계 50-50 성평등 정책</li> </ul>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유럽협력</li> <li>· 사미족(Sami)문화지원-위기에 처한 문화적 표현보호</li> </ul>   |
| 스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크라우드펀딩 지원</li> <li>· 헬베티아록(Helvetiarockt): Jazz, Pop, Rock 여성음악인지원</li> </ul>  |
| 중남미 지역권<br>-아르헨티나, 멕시코 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베로 아메리칸 프로그램을 통한 이동성기회</li> </ul>  |
| 아프리카 지역권-케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성 우대조치</li> </ul>   |
| 아프리카 지역권-세네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 예술가의 자유와 지위</li> </ul>   |
| 아시아 지역권- 인도네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전략을 위한 창조경제위원회 설립</li> </ul>  |
| 아시아지역권-베트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 2030, 2030년까지 영화산업 발전전략</li> </ul>   |

○ 서구 선진 국가들은 이미 문화다양성 협약 이전부터 지역 내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들로 발전시켜 문화정책 토대

를 갖추었으며, 사례에 예시된 주요국들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협약 주도국가들임

- 국제 협력추진에서 민간인 차원, 특히 예술가 및 문화활동가의 이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행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음

## 5.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정책성과와 진단

### 가. 문화다양성 협약관련 설문조사

- 문화다양성 협약관련 이행 및 교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전략을 수립하고자 문화정책 및 국제교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내용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목적,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 및 운영평가,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현황 및 개발전략, 문화다양성 위원국으로서 실행과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됨

〈표 6〉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설문조사 개요

| 항목 | 설문 내용   |
|----|---|
| 목적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책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 대상 | 문화관광연구원(8), 유네스코한국위원회(7), 문화예술위(4), 대학교수(9), 국책기관 연구위원(2), 민간·시민단체(5), 문화재단·지역협의체(5)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인식 (3문항)</li> <li>• 유네스코 협약 국내이행·운영 평가 (10문항)</li> <li>•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평가 및 추진방향(6문항)</li> <li>• 위원국으로서 역할·향후 정책 추진방향 (4문항)</li> </ul> |

### 나. 전문가 심층인터뷰

- 문화다양성 협약 협력사업 실태파악 및 향후 위원국으로서 효과적

인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 자문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그룹에는 대학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련 공무원, 지자체 관련부서 담당자, 유관기관 연구위원, 문화정책분야 문화기획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표 7〉 전문가 자문조사 개요

| 항목 | 내용  |
|----|---|
| 목적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협력사업 성과 및 위원국 역할 자문           |
| 대상 | 대학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책 연구원, 문화기획가, 공무원, 현장전문가 |
| 내용 | 문화다양성 국제 협약 이행평가 및 향후 위원국으로서 과제 추진 논의       |
| 방법 |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3차)                          |

- 자문회의의 경우, 문화다양성의 협력사업 운영현황,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평가, 국내 정책사업 이행의 진단, 아태지역 위원국으로서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방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음

## 6. 정책사업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 가.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그림 8] 협약 위원국으로서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나. 정책단계별 실행과제 구상

|  |   |
|--|---|
| <b>1. 유네스코 국제기구 내 역량증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 주도적 참여 및 정보공유 확대</li> <li>▪ 범정부적 협력체계 및 통합연계성 제고</li> <li>▪ 아시아의 문화다양성 정책 가치정립 및 중심의제 발굴</li> </ul> | <b>2. 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장기전략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지역기구의 활용 및 중장기 전략 추진</li> <li>▪ 아시아지역 개도국 문화 ODA 추진 확대</li> <li>▪ 문화다양성 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li> </ul> |
| <b>3. 문화 다양성 협약 국내 이행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li> <li>▪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li> <l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국가보고서 작성체계 구축</li> </ul>    | <b>4. 민간부문 교류 활동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이행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li> <li>▪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문성 제고</li> <li>▪ 국제기구에 대응하는 민간협약체 구성 및 민간단체 자원 방안</li> </ul>  |

[그림 9] 정책 단계별 실행 방안 구상

## 7. 결론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문화다양성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과 위상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 의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아시아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아시아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안목과 비전을 가진 통합적인 국제기구 전략을 수립하고 유네스코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다른 부서들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소통체계의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시 정부 주도의 성격을 벗어나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 공유 및 정책 마련을 상호 협력하여 진행해야 함



|                                   |           |
|-----------------------------------|-----------|
| <b>제1장 서론</b>                     | <b>1</b>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 1. 연구 배경                          | 3         |
| 2. 연구 목적                          | 5         |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7         |
| 1. 연구 범위                          | 7         |
| 2. 연구 방법                          | 8         |
| <b>제2장 유네스코 체제와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분석</b> | <b>11</b> |
| 제1절 문화다양성 논의의 발전과 유네스코 협약         | 13        |
| 1. 문화다양성 협약 배경과 국제적 논의            | 13        |
| 2. 문화다양성 협약의 특징                   | 16        |
| 제2절 협약 당사국 총회의 특성과 동향분석           | 19        |
| 1. 당사국 총회의 구성과 운영                 | 19        |
| 2. 총회의 주요안건 및 논의사항                | 20        |
| 제3절 유네스코 협약과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 29        |
| 1.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전                 | 29        |
| 2.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 31        |
| <b>제3장 정부간위원회 협력활동과 주요의제</b>      | <b>37</b> |
| 제1절 정부간위원회의 특성과 동향분석              | 39        |
| 1.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39        |
| 2. 위원회의 주요안건 및 논의사항               | 41        |
| 제2절 정부간위원회의 핵심의제 분석               | 64        |
| 1. 문화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                 | 65        |
| 2. 문화상품·서비스의 균형적 이동과 문화교류         | 71        |
| 3. 지속가능한 개발체제로의 문화통합              | 75        |
| 4. 인권과 기본적 자유증진                   | 80        |
| <b>제4장 주요 위원국 정책 현황분석</b>         | <b>83</b> |
| 제1절 주요 위원국 국가보고서 정책 사례분석          | 85        |
| 1. 당사국 제출 국가보고서 구성개요              | 85        |
| 2. 서구 주요위원국 정책추진사례                | 86        |

|                                       |            |
|---------------------------------------|------------|
| 3. 기타 주요위원국 정책추진사례 .....              | 96         |
| 제2절 국내 문화다양성 협약 협력현황 .....            | 101        |
| 1. 한국의 협약이행성과 추진사례 .....              | 101        |
| 2.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협력 지원 .....            | 105        |
| 3. 아태지역 위원국으로서 활동 .....               | 109        |
| 제3절 정책적 함의 .....                      | 111        |
| <b>제5장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정책성과와 진단 .....</b> | <b>113</b> |
| 제1절 설문조사 .....                        | 115        |
| 1. 설문조사 개요 .....                      | 115        |
| 2. 설문 결과분석 .....                      | 116        |
| 제2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                   | 135        |
| 1. 전문가 자문개요 .....                     | 135        |
| 2. 전문가 주요 의견 .....                    | 136        |
| 제3절 종합분석과 시사점 .....                   | 140        |
| <b>제6장 정책사업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b>    | <b>145</b> |
| 제1절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 147        |
| 제2절 추진전략 설정 .....                     | 148        |
| 1. 거시적 국제기구 전략 수립 .....               | 148        |
|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협력 환경 조성 .....           | 149        |
| 3.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인프라 구축 .....           | 150        |
| 제3절 정책 단계별 실행 과제 구상 .....             | 151        |
| 1. 유네스코 국제기구 내 역량증진 .....             | 152        |
| 2.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의 장기전략 수립 .....        | 155        |
| 3.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 활성화 .....          | 157        |
| 4. 민간부문 교류 활동 강화 .....                | 161        |
| <b>제7장 결론 .....</b>                   | <b>165</b> |
| <b>참고문헌 .....</b>                     | <b>170</b> |
| <b>ABSTRACT .....</b>                 | <b>173</b> |
| <b>부 록 .....</b>                      | <b>175</b> |

## 표 목차

|  |     |
|--|-----|
| 〈표 1-1〉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                        | 9   |
| 〈표 1-2〉 사례연구 수행 방법 .....                             | 10  |
| 〈표 2-1〉 문화다양성 8가지 원칙 .....                           | 18  |
| 〈표 2-2〉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 20  |
| 〈표 2-3〉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 22  |
| 〈표 2-4〉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 23  |
| 〈표 2-5〉 제4차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 24  |
| 〈표 2-6〉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 26  |
| 〈표 2-7〉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 28  |
| 〈표 2-8〉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유 .....            | 30  |
| 〈표 2-9〉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교(1차, 2차) .....                | 31  |
| 〈표 2-1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주요내용 ... | 33  |
| 〈표 2-1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법적근거 정비 내용 .....         | 34  |
| 〈표 2-12〉 무지개다리 사업 성과추이 .....                         | 35  |
| 〈표 3-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2005) ...     | 40  |
| 〈표 3-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및 정부간위원회 현황 .....       | 41  |
| 〈표 3-3〉 정부간위원회 주요 논의안건(종합) .....                     | 62  |
| 〈표 3-4〉 시민사회의 미래행동계획을 위한 13가지 권고사항 .....             | 70  |
| 〈표 4-5〉 국가보고서의 구성내용 .....                            | 85  |
| 〈표 4-6〉 문화정책 항목 기입내용 .....                           | 102 |
| 〈표 4-7〉 국제문화협력부문 기입내용 .....                          | 102 |
| 〈표 4-8〉 개발도상국 지원 기입내용 .....                          | 103 |
| 〈표 4-9〉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 국제적 차원 기입내용 .....               | 103 |
| 〈표 4-10〉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 국내적 차원 기입내용 .....              | 104 |
| 〈표 4-11〉 문체부: 유네스코 신탁기금 연차별 지원현황 .....               | 105 |
| 〈표 4-12〉 2018년 문화다양성 관련 대표사업 .....                   | 105 |
| 〈표 4-13〉 2014-2018년 한국의 자발적 기여 추세 .....              | 107 |
| 〈표 4-14〉 2017년도 자발적 기여 순위 .....                      | 107 |
| 〈표 4-15〉 국내 공여 주체별 자발적 기여 규모 .....                   | 108 |
| 〈표 4-16〉 분야별 자발적 기여 규모 .....                         | 108 |

|                                  |     |
|----------------------------------|-----|
| 〈표 4-17〉 인력파견 .....              | 108 |
| 〈표 5-1〉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설문조사 개요 ..... | 115 |
| 〈표 5-2〉 전문가 자문조사 개요 .....        | 135 |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제 발전과정 .....          | 19  |
| [그림 3-1] 2005 협약 실행 목표 .....                   | 64  |
| [그림 3-2] 협약 이행 절차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과정 .....          | 70  |
| [그림 3-3] 남·북 예술가의 이동성 불균형 .....                | 72  |
| [그림 3-4] 지역별 이동성 기금 프로그램(2017) .....           | 72  |
| [그림 3-5]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유통 불균형 .....               | 73  |
| [그림 3-6] 문화다양성 기금 지역별 지원 비율 .....              | 77  |
| [그림 3-7] 2015 문화 ODA 원조 수여국 상위 10위 .....       | 78  |
| [그림 3-8] 문화분야 대표직군 성별 비율 .....                 | 80  |
| [그림 3-9] 예술표현 침해(2014-2016) .....              | 82  |
| [그림 4-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 및 미가입국 .....        | 110 |
| [그림 5-1] 응답자의 협약 관련 내용 인식정도 .....              | 116 |
| [그림 5-2] 국민의 협약 관련 내용 인식 정도 .....              | 116 |
| [그림 5-3] 협약 관련 핵심 내용 .....                     | 117 |
| [그림 5-4] 협약의 국내 문화정책발전 기여 정도 .....             | 118 |
| [그림 5-5] 협약 관련 내용 구현 정도 .....                  | 119 |
| [그림 5-6]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마련 정도 .....             | 120 |
| [그림 5-7] 협약 이행 시 주요 주체 .....                   | 121 |
| [그림 5-8] 협약 실천 시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보장 정도 .....     | 122 |
| [그림 5-9] 협약 이행 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             | 123 |
| [그림 5-10]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기존 다문화정책과 구분 정도 ..... | 124 |
| [그림 5-11]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목할 점 .....             | 124 |
| [그림 5-12] 협약의 가치 확산을 위해 주력해야 할 활동 .....        | 125 |
| [그림 5-13]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관련 개선점 .....           | 126 |
| [그림 5-14] 협약 관련 국제 활동 주체 .....                 | 127 |
| [그림 5-15] 국제교류사업 관리 전담부서 .....                 | 128 |
| [그림 5-16] 국제교류 관련 애로사항 .....                   | 129 |

|   |     |
|---|-----|
| [그림 5-17]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강조할 부문 .....     | 130 |
| [그림 5-18] 협약 위원국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범위 ..... | 130 |
| [그림 5-19] 국제협력 정책 수행 시 주력사항 .....       | 131 |
| [그림 5-20] 위원국으로서 수행 역할 .....            | 132 |
| [그림 5-21] 위원국으로서 역할 수행 시 애로사항 .....     | 133 |
| [그림 5-22] 위원국으로서 정책 추진 방향성 .....        | 133 |
| [그림 5-23] 위원국 활동을 위해 강화할 부분 .....       | 134 |
| [그림 6-1] 협약 위원국으로서의 목표 및 기본방향 .....     | 147 |
| [그림 6-2] 정책 단계별 실행 방안 구상 .....          | 151 |



제1장 ●●

## 서론







##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1)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서 정책의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성

- 한국은 2017년 6월 12~1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 본부에서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문화다양성 협약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와 협의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음
- 문화다양성 협약에는 14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위원회는 대륙별 6개 그룹, 총 2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간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활동함
- 한국이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국가경제규모와 국제영향력에 부합하는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이슈 발굴과 전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와 유엔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2) 유네스코 국제기구 및 문화외교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기구 내 역할, 집행수단,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사업과 협력방안을 찾고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문화산업 분쟁 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하고 시장의 논리가 아닌 문화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이 요구되기에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의 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남부지역의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세계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 글로벌 공동책임을 함양하는 방향이 중요시 되고 있음

### 3) 지속가능한 문화 분야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지원 필요

- 유네스코는 그동안 문화유적, 문화적 관습 및 문화적 표현의 보존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이제 국외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환경 관련 기술들이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 생산유통 및 소비방식을 크게 변화시켜온 바, 시장 환경 변화들을 모니터링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통해 아태지역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문체부 정책담당자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2. 연구 목적

###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서 역할과 과제 도출

- 유네스코 기구 내 중견국으로서 입지와 위상을 강화할 전략 마련이 중요한 바, 우리 실익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이슈들을 글로벌 아젠다화하며 전략적 비전을 제안하고 이행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WTO규범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보다 균형있는 교역을 촉진하고자 국제이슈나 규범형성에서 중재와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가교국(Bridge State)역할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함

### 2) 유엔과 국제기구에서 문화협력 네트워크 확대 추진

-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지원, △문화상품/ 서비스의 균형적 유통과 예술가의 자유로운 이동, △지속가능한 발전체제에서 문화통합, △인권 및 기본적 자유증진이란 4가지 목표에 대한 비전 및 전략적 사고를 모색해야함
- 국제기구 주요의제의 국내확산 및 정책연계가 다소 미흡하여, 주도적인 의제 발굴 노력과 내실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한 문화외교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3) 아시아태평양그룹 위원국으로서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

-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중 아시아태평양 IV그룹은 비준국이 14개

국에 불과하며 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기에, 지역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약의 홍보 및 국제적 적용 노력을 통해서 향후 유네스코 협약에 많은 국가들의 가입과 국제회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문화다양성 가치의 국제적 확산을 이끄는 역할이 요구됨

- 국제기구에서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위원국으로서 이슈개발 및 정책제안을 통해 서구와 차별화된 문화다양성 가치체계의 정립을 이끌고, 우리 현안만의 문제가 아닌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국제사회 내 이익을 대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함

#### 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및 정책의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 유네스코 기구와 문화다양성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범정부차원에서 전략부분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는 바, 업무협력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재고하고자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강화 및 인력의 현실적인 통합과 조정이 요구됨
-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국가정책결정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육성과 이들의 국제교류협력 지원이 필요함

##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총회 및 정부간위원회 보고서를 수집·분석함
- 국내 관련 부처의 경우 문체부를 중심으로 하고, 외교부, 법무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 자료를 수집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에 있어 국외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문화다양성 협약 아시아 태평양지역그룹에 있어 동북아 회의를 중심으로 국가위원회 협의회 의제 및 관련 전문가 활동 사례를 집중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나. 시간적 범위

- 문화다양성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및 정부간위원회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함
- 국내 사업 활동은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이후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주요한 연구범위로 설정

## 다. 내용적 범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당사국 총회 결의안 및 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이행 혹은 지원되는 개별 사업의 현황을 분석대상으로 함
  - 글로벌 역량 개발 전략 이행을 위한 사무국 활동보고서
  - 국제 문화다양성기금(IFCD) 및 기금모금 외부평가 사무국 보고서
  - 정책 모니터링 활동 및 4년제/ 2년제 정기 보고서
  -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에 관한 운영 지침 구현 및 활동목록
  -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간 대화 및 문화협력 보고 결과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관련하여 제 13 조, "지속 가능한 개발에 문화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조치
  - 개도국 제작지원, 파트너십 증진, 국제정보교환센터 증설방안 외

## 2. 연구 방법

### 가. 문헌연구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및 정부간위원회 보고서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이행 관련 정책 보고서 수집 정리
- 기관별 문화다양성 이행 정책 자료, 포럼 자료집, 세미나 및 회의 자료집 등 수집 및 정리(인터넷 자료 포함)
- 국내 민간 차원 문화다양성 협의, 회의 및 실행 자료수집 및 정리
- 국외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정책 비교 분석

## 나. 사례조사

- 최근 제출된 주요위원국의 국가보고서 조사·분석

## 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업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외교부, 문체부 관련 부처 담당자와의 협업으로 협약의 이행 방향에 대한 주요 성과검토 및 향후 계획 공유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및 다문화정책, 인권정책, 문화산업정책, 창조경제, 문화ODA, 무역협정 등 협약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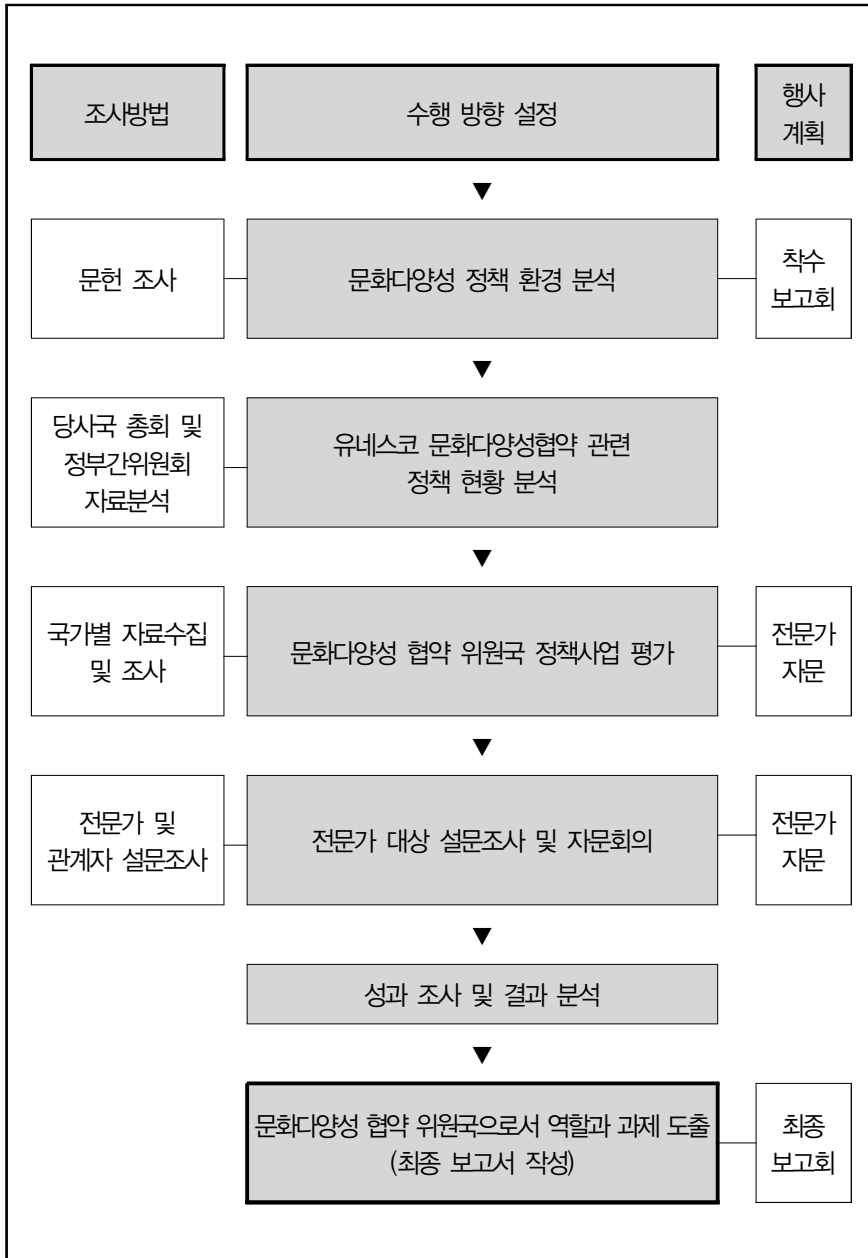
## 라.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조사

- 문화다양성 협약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 시민사회, 민간단체의 관련 활동에 대한 간담회 개최

〈표 1-1〉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 구 분   | 유네스코 국제교류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  |
|-------|---|---|
|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li> <li>•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대상(40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결과 및 향후 과제추진관련 면담</li> <li>•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10명)</li> </ul> |
| 조사 내용 | 문화다양성 협약 인식, 국내이행운영 평가, 국제교류평가, 위원국으로서 역할 및 향후 정책추진방향(23문항)   |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이행평가 및 향후 위원국으로서 과제추진 논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의견  |

〈표 1-2〉 사례연구 수행 방법





제2장 ●●

유네스코 체제와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분석





## 제1절

## 문화다양성 논의의 발전과 유네스코 협약

## 1. 문화다양성 협약 배경과 국제적 논의

## 가. ‘문화적 예외’ 패러다임 형성과 유네스코의 역할

- 198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 협정의 추진과 단일 시장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였고, 프랑스를 필두로 한 EC와 캐나다가 문화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무역대상에서 제외시키려 노력하며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반해 미국은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강경한 자유무역 입장을 주장함
-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문화와 무역을 둘러싼 논의를 WTO 밖에서 진행시키며 UNESCO로 옮겨 감. 특히 1998년 OECD 회원국들이 추진했던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문화다양성을 이유로 결렬되면서 ‘세계문화정책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의 창설 및 문화다양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촉발됨
- 유네스코는 창립 이래 문화다양성에 대한 강조를 지속해왔고, 문화다양성 논의에서 문화의 개념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발전시켜 옴. 이후 문화와 정체성, 문화와 발전, 문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음

## 나. 문화적 권리의 발전과 문화다양성 논의

- 그동안 문화적 권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거나 때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면 받는 주제였음. 점점 개인차원의 권리에서 보편적 인권에 속하는 권리의 범

위로 확장해 나감

- 문화적 권리 및 문화다양성은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국제규약(ICESCR, 1966), 시민, 정치적 권리의 국제규약(ICCPR, 1966),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1992) 등을 통해 논의되어옴
- 문화다양성 협약 이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서로 다른 사회에서 어느 정도 넓이와 깊이의 권리가 문화다양성의 이름 아래 보장되어야 하는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음

#### 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과 국제사회로의 확산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95년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시작되었고, 2001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1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발표함
- 유네스코 164개 회원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선언을 채택함
-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문화는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하는 방법으로서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함
- 주요내용은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인간존엄성 존중 및 소수집단과 원주민의 자유와 인권보장,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권리의 보호, 창의성의 원천인 문화유산 보존,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인정,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공협력 등임

## 라. 문화다양성의 법제화 과정

- 2005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3차 정기총회에서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채택
  - 협약안은 찬성 148개국,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 기권 4개국(니카라과,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호주)의 표결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협약 제29조에 최소 30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3개월 후 발효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2006년 12월 18일 협약 비준국이 30개국이 넘으면서 2007년 3월 18일 협약이 발효됨
  -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4월 1일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서를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고,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됨

## 2. 문화다양성 협약의 특징

### 가. ‘문화다양성 협약’ 구성: 총 35개 조문과 6개의 부속서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을 보호와 증진을 위한 9개 목적(제1조)과 8개의 원칙(제2조)이 설정되어 있고, 다음으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조항들이 있으며, 특히 국가적 수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당사국의 여러 국내 조치들(제6조~제8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당사국은 4년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를 유네스코에 보고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함(제9조), 당사국은 시민사회의 중요 역할을 인정,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제11조). 또한 국제협력(제12조~제17조),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제18조), 협약의 기관(제22조~제24조)에 관한 규정이 있음

### 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핵심 요지

- 문화다양성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정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를 ‘인간 존엄성의 존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윤리적 책임’으로 명시하는 선언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음
-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양성 선언 제8조와 공공, 민간, 시민사회간의 협력 강화를 호소한 제11조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음
- ‘문화를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형성’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함
  - 자국 문화의 보호·증진과 함께 다른 나라 문화와의 균형 잡힌 교류가 협약을 통해 보장되고 추구되어야 함

- 제6조는 당사국이 국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과 관련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조치, 독립적 문화산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공공 재정 지원, 공공 기관 설립 지원, 예술가 및 관련 종사자 양성,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 등의 조치가 포함
- 문화다양성 협약은 제7조와 제8조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 소외계층의 문화적 권리, 다양한 문화에의 접근, 예술가를 비롯한 문화예술종사자에 대한 역할 등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광범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

#### 다.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국제적 협력 증진

- 개발도상국과의 구체적인 협력을 강조하여, 시민단체, 비정부 기구, 민간부문간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 제작 및 배급에 관한 협정 체결 장려를 국제협력의 주요 골자로 함
- 협약에는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촉진방안(제12조),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당사국의 협력지원 활동(제14조),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인적자원·정책개발에 초점을 둔 혁신적인 협력관계 유지(제15조), 개발도상국 출신의 문화전문가 및 활동가를 우대하여 문화교류 촉진(제16조), 문화적 표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상황에서 당사국의 국제적 협력(제17조),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분담(제18조)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예술가에게 우선적 대우를 허용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함
- 협약 20조는 다른 협약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상호지원성, 상호성,

비종속성을 원칙으로 하며 분명하게 동 협약이나 또 다른 협약의 우위를 정하고 있지 않음

### 〈표 2-1〉 문화다양성 8가지 원칙

- 1)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의 원칙
  -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본 협약의 조항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문화적 다양성은 표현정보 교환의사소통의 자유를 비롯하여 문화적 표현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등과 같은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보호받고 증진될 수 있다
- 2) 주권의 원칙
  -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위한 정책과 방안을 채택할 주권을 지닌다
- 3)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의 원칙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소수 민족이나 토착민의 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며 동일하게 존중되어야한다는 사실을 전제로한다
- 4)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원칙
  -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초기단계에 있거나 이미 확립된 자국의 문화산업을 포함하여 문화적 표현수단을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외적 노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5) 발전의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상호보완원칙
  - 문화는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발전의 문화적 측면은 그 경제적 측면만큼이나 중요하여 개인이나 민족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다
- 6) 지속가능성의 원칙
  -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에 풍부한 자원이 된다. 현재와 미래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이다
- 7) 자유로운 접근의 원칙
  - 문화다양성을 높이고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전 세계 각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각 문화가 자문화를 표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표현수단을 획득할 수 있어야한다
- 8) 개방성과 균형의 원칙
  -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할 때는 다른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적절한 방식으로 증진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이본 협약이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함을 확인해야한다

자료: 유네스코(<http://portal.unesco.org/en>)



## 제2절

## 협약 당사국 총회의 특성과 동향분석

## 1. 당사국 총회의 구성과 운영

- 모든 협약 가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이며, 협약 관련 전체회의이자 최고기구(제22조)로, 매 2년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하고, 협약 이행과 적용을 위해 정부간위원회가 준비한 운영지침을 승인하며, 협약관련 취해진 조치에 대해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함(제18조4항, 제22조4항의 b)
- 정부간위원회의 절차규정과 국제문화다양성기금의 재원활용에 관한 기본 지침을 승인함
- 2005년 10월 채택된 동 협약에는 145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당사국 총회와 11번의 정부간위원회 및 2번 비정규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음

| 1차 총회<br>(2007.06.18-20)   | 2차 총회<br>(2009.06.15-16)  | 3차 총회<br>(2011.06.14-15)   | 4차 총회<br>(2013.06.11-14)  | 5차 총회<br>(2015.06.10-15)  | 6차 총회<br>(2017.06.13-15)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네스코 사무총장 주도 개회식</li> <li>당사국 총회 의사진행규칙 채택</li> <li>당사국 총회 초대 의장 선출</li> <li>초대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출</li> <li>위원회 역할 논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관련 첫번째 운영지침 승인</li> <li>문화다양성기금(IFCD) 재원 심의</li> <li>정부간 위원회 의사 진행 규칙 최종 채택</li> <li>정부간 위원회 위원국 1/2 선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관련 두번째 운영지침 승인</li> <li>국가보고서(QPR) 제출과 보급 일정 승인</li> <li>문화다양성 기금(IFCD) 조성 전략 외제 논의</li> <li>정부간위원회 위원국 1/2 선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국 총회 첫번째 국가보고서 검토</li> <li>위원회의 협약 21조(국제협약) 이행 작업 논의</li> <li>IFCD 운영지침 수정안 승인</li> <li>협약의 emblem 및 운영지침 채택</li> <li>정부간 위원회 위원국 1/2 선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 16조(개도국 우대조치) 및 21조(국제협약) 이행 보고 검토</li> <li>디지털 이슈관련 의제 논의</li> <li>정부간 위원회 활동계획 수립</li> <li>12개 선임 위원국 선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 운영 지침 승인</li> <li>유엔의 2030 아젠다 논의 표명</li> <li>2번째 국가보고서(QPR) 발표</li> <li>2015 글로벌 리포트 발간</li> <li>12개 선임 위원국 선출</li> </ul> |

[그림 2-1]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제 발전과정

## 2. 총회의 주요안건 및 논의사항

### 가. 제1차 당사국 총회 (2007.6.18-6.20)

-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하에 개회식이 열렸으며, 협약 초안을 다듬는 역할을 맡았던 정부간 전문가 회의 의장이었던 Kadaer Asmal교수(남아공)가 당사국 총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됨
-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 국제 안보에 있어 문화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확인하고, 문화다양성 협약의 독특한 지위와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협약 운영지침 제정과, 문화다양성기금 설립 등 향후 협약 운영 관련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들을 확인함
-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의사진행규칙이 채택되었으며, 당사국 총회는 2년에 한 번, 6월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짐
-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출 관련, 총 24석이 지역 균형에 맞추어 배정되었으며 그 인원과 초대 선출국은 다음과 같음

〈표 2-2〉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그룹(인원)  | 선출국                                  |
|---------|--------------------------------------|
| 1그룹(7)  |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
| 2그룹(4)  |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
| 3그룹(4)  | 브라질, 과테말라,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
| 4그룹(2)  | 중국, 인도                               |
| 5a그룹(5) |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리셔스, 세네갈, 남아공           |
| 5b그룹(2) | 오만, 튀니지                              |

- 차기 당사국총회에서 1그룹에서 4그룹으로 1석, 5a그룹에서 5b그룹으로 1석이 이동할 것임이 양해되었으며, 선출된 국가 중 일부는 향후 위원국 순환을 위하여 제비뽑기를 통해 2년간만 임기를 유지하고 위원국직을 면하기로 결정함

- 당사국 총회는 문화다양성기금(IFCD) 설립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였으며, 기금이 협약 목표에 맞게 사용될 것을 강조하였음
  - 다양한 재원 마련, 기금 효용성 확보, 효과적 기금 관리, 수혜국의 보고 필요성, 기금 운용 지침 마련의 필요성 등에 논의함

#### 나. 제2차 당사국 총회 (2009.6.15-6.16)

- 총회 의장은 지난 2년간 있었던 두 번의 정규 정부간위원회, 두 번의 비정규 정부간위원회 주요내용을 보고함
  - 위원회는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해 총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정부간위원회는 설립 이후 협약 관련 운영지침 작성에 집중해옴. 특히 문화적 표현의 보호 및 증진(협약 7, 8, 17조 관련),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협약 11조 관련), 지속가능발전에의 문화 통합(협약 13조 관련), 발전을 위한 협력(협약 14조 관련), 협력 방안(협약 15조 관련), 개도국을 위한 우대조치(협약 16조 관련), 문화다양성 기금 활용(협약 18조 관련) 관련 운영지침을 심도있게 논의함
  - 다만, 국제 협력 증진(협약 12조 관련)은 협약 그 자체로 내용이 명확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별도 운영지침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마련된 운영지침은 향후 필요시 수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아울러 협약 비준율 증가를 위한 전략과 문화다양성기금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총회는 정부간위원회 의사진행규칙을 최종 채택하고, 일부 수정을 거쳐 협약 관련 운영지침을 채택함
- 정부간위원회 새 위원국을 아래와 같이 선출함

〈표 2-3〉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그룹   | 선출국        |
|------|------------|
| 1그룹  | 캐나다, 프랑스   |
| 2그룹  | 알바니아, 불가리아 |
| 3그룹  | 브라질, 쿠바    |
| 4그룹  | 중국, 라오스    |
| 5a그룹 | 카메룬, 케냐    |
| 5b그룹 | 요르단, 튀니지   |

#### 다. 제3차 당사국 총회 (2011.6.14-6.15)

- 116개 당사국 대표단 및 옵저버,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2010년 4월 동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가 당사국 자격으로는 최초로 참석한 당사국 총회임
- 제2차 총회에 이어 협약의 주요 조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승인하고, 문화다양성기금을 활용한 개도국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총 32건의 시범 단계 추진 현황을 확인함
- 총회는 당사국의 자발적 기여(유네스코 의무분담금의 1% 규모)로 구성되는 문화다양성기금 조성 전략이 별도 의제로 다루어 당사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함
  - 국가, 민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기금 모금 방안 및 향후 기금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조건을 검토함
- 총 24개 당사국으로 구성된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의 2011-15년 임기 신규 위원국 12개국을 아래와 같이 선출함

〈표 2-4〉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그룹   | 선출국                        |
|------|----------------------------|
| 1그룹  | 스웨덴, 스위스                   |
| 2그룹  |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
| 3그룹  | 아르헨티아,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앤 그레나딘 |
| 4그룹  | 베트남                        |
| 5a그룹 | 기니, 콩고, 짐바브웨               |
| 5b그룹 | 쿠웨이트                       |

- 총 6개 지역그룹 중 아태지역(그룹 IV)이 유일하게 선거를 실시하였으며(한국은 베트남 지지) 나머지 지역은 그룹 차원의 협의를 통해 무경합 당선

#### 라. 제4차 당사국 총회 (2013.6.11-6.14)

- 총회는 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전문가 패널의 활동, 사업 결과 위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제문화다양성 기금 운영지침 및 협약의 가시성 제고를 위한 협약의 엠블럼 및 엠블럼 운영지침을 채택함
- 총회는 유네스코의 재정위기가 동 협약의 이행 및 사무국의 주요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사무국이 주요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동 협약의 필수적 요건임을 제5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기금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함
- 또한, 총회는 제21조(국제 협의 및 조정)가 동 협약의 핵심조항임을 강조하면서, 당사국들이 통상협약을 포함한 국제협약에서 협약의 목적 및 원칙을 인용 및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위원국 위원회에서 협약 21조의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논의하기로 결정함

- 한국 대표는 한국정부가 ‘문화융성’을 주요 국정기조로 삼고, 동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국내적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을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등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하고, 향후에도 동 협약의 적극 이행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며, 특히 아태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요지로 발언함
- 한편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디지털 기술이 문화의 생산, 배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총회는 당사국과 시민사회가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협약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무국에 보고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
- 총 24개 당사국으로 구성된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의 2013-17년 임기 신규 위원국 12개국을 내부적 협의를 통해 무경합으로 선출함

〈표 2-5〉 제4차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그룹   | 선출국           |
|------|---------------|
| 1그룹  | 오스트리아, 영국     |
| 2그룹  |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
| 3그룹  | 우루과이, 세인트루시아  |
| 4그룹  | 아프가니스탄, 호주    |
| 5a그룹 |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
| 5b그룹 | 튀니지, UAE      |

#### 마. 제5차 당사국 총회 (2015.6.10-6.15)

- 총회는 지난 2년간 사무국의 활동을 치하하는 한편,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활동이 필수적이며 충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에 동의함
  - 역량강화 및 관련 지식 관리/생산 활동

– 문화다양성기금과 이를 위한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 총회는 문화 분야에서 유네스코 기준 설정에 대한 외부감사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협약의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정보 공유, 문화 거버넌스 분야 역량강화, 지표 활용을 통한 협약 종합 결과들을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비정규예산을 확보할 것을 독려함
- 총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의 분석자료를 검토하고, 2015년 12월 개최될 제9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정기보고를 활용하여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한 첫 번째 2개년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
- 협약 9조(정보 공유와 투명성)에 대한 운영지침을 채택함
- 총회는 문화다양성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노력한 사무국을 치하하고, 기금 모금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문화다양성기금의 가시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또한 당사국들도 기금 모금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함
- 총회는 협약 16조(개도국 우대조치) 및 21조(국제 자문 및 협력)의 이행과 영향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고, 위원회 및 사무국이 계속해서 해당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 또한 사무국이 해당 조항 이행을 위한 훈련 모듈을 개발할 것을 요구함
- 디지털 이슈 관련 의제를 다루고, 동 주제에 대한 분석을 계속 진척시켜나가는 한편, 관련 운영지침을 작성할 것을 요청함
- 협약 가시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노력해야 하며,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함
- 정부간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12개의 위원국을 신규 선출함

〈표 2-6〉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그룹   | 선출국               |
|------|-------------------|
| 1그룹  | 프랑스, 독일           |
| 2그룹  | 체코, 슬로베키아         |
| 3그룹  |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
| 4그룹  | 인도네시아             |
| 5a그룹 | 코트디부아르, 콩고, 나이지리아 |
| 5b그룹 | 모로코               |

#### 바. 제6차 당사국 총회 (2017.6.13-6.15)

- 당사국들은 문화가 유엔의 2030아젠다, 즉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사무국 또한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 활동에 있어 유엔의 2030아젠다 문제를 적극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사무국은 2015 글로벌 리포트 발간,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발, 정기보고서 온라인제출 시스템(KMS) 개발 등 2015-2017 기간 동안 사무국이 이행한 활동들을 보고하고, 38개국에서 제출한 정기보고서 검토 내용을 소개함
  - 통계 수치를 포함하는 보고서가 크게 증가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당사국 가운데 보고서 작성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수혜국들은 동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했고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함
- 문화다양성 기금 관련, 사무국은 펀딩 요청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증가한 반면, 기금의 목적과 범위에 맞은 요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정부간위원회가 2015년과 2016년 각각 6건의 프로젝트에 IFCD의 활용을 최종 승인함
  - 사무국은 2013-2018 기금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협약 가입국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6



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한 번도 기금 공여를 하지 않은 82개국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함

- 문화다양성 기금이 유엔 2030 어젠다 달성에도 기여함을 언급함

○ 사무국은 중립성의 원칙, 각 국가의 주권 존중, 협약의 포괄적 이해, 창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운영지침의 주요 쟁점들을 소개함.

- 당사국 총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의 이행에 관한 운영지침’의 마련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제10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채택된 운영지침을 수정 없이 승인함

- 디지털 시대 문화분야의 변화에 대응관련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사례로 2016.9월 한국이 유네스코본부에서 개최한 바 있는 「Digital Meets Creativity」 제하 디지털 창의성 컨퍼런스가 소개됨

○ 당사국 총회는 2015 글로벌 리포트, 각종 운영지침, IOS 감사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향후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계획함

- ① 정보력 있고,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지원, ② 균형 잡힌 문화 재화 및 서비스 교류 촉진, ③ 예술가 및 예술 관계자 이동성 증대, ④ 지속가능개발의 전략적 차원에서 문화를 고려하는 국내/국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⑤ 기본적 자유와 인권 증진

○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7-2021 임기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하였는바,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그룹이 무경합을 달성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위원국으로 당선되어 해당 임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음

〈표 2-7〉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 지역그룹 | 2015-19년 임기          | 2017-21년 임기 (신규 선출) |
|------|----------------------|---------------------|
| I    | 독일, 프랑스              | 캐나다, 핀란드            |
| II   | 체코, 슬로바키아            |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
| III  |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
| IV   | 인도네시아                | 한국, 중국              |
| V(a) |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DR 콩고 | 케냐, 말리              |
| V(b) | 모로코                  | 이집트, 이라크            |

## 제3절

## 유네스코 협약과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 1.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전

## 가. 문화산업 영역에서 문화적 예외 논의

- 2005년 유네스코가 제33차 정기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한 이후, 한·미 FTA 협상 및 문화산업 영역에서부터 ‘문화적 예외’ 논의가 시작됨
-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을 채택한 상황에서 한미 FTA 스크린쿼터 축소 협상이 진행되고 문화다양성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음
- 스크린쿼터 축소는 문화다양성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에서 미국의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영화계 시민단체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사회 전면에 문화다양성 논의가 대두됨
- 이 시기의 문화다양성 개념은 협약의 기본 정신이었던 자본주의에서 문화계의 표준화 및 획일화에 대항하는 논리로 접근되었음
- 문화산업영역에서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본 협약과 다른 협약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 등이 있어서 정책적인 구상은 구체적이지 않음

## 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인식

- 2000년대 들어서 외국인 이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문화정책이 부상하면서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동화 정책으로 출발하였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2007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였고, 정책의 내용은 이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집중됨

〈표 2-8〉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유

| 법령명                           | 제정이유  |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br>(제정 2007.5.17.) |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고, 대한민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 다문화가족지원법<br>(제정 2008.9.22.)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 |

자료 : 법제처([www.law.go.kr](http://www.law.go.kr))

- 이들 법률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외국인노동자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와 시혜 관점에서 처우개선과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내국인의 문화다양성 수용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정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바 없는 상황에서 해외이주민 유입에 따라 파생된 다문화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주민 유입에 대응하는 협의의 문화수용성 정책을 논의함
  - 일반국민들은 일상에서 이민정책이나 외국인정책보다 다문화정책 용어를 보다 사용하듯이, 자국민 중심의 동화주의적 시각에 의해서 사회정착과 문화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받아들임
- 우리나라의 지원방안은 소수집단이 그들의 문화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로 융합되기를 유도하여왔기에, 기존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위계적 구조를 이루지 않고 공존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이 점차 제시되기 시작함

## 2.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 가. 다문화 정책에 대한 문화다양성 측면의 접근

- 2010년 한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11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 논의 시작함
  -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기 위해 그간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정착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문화의 공존과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표방함
- 2012년 발표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그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적응 중점지원 및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존중 문화와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 관점을 재정립
  -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강조하며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의 목표 하에 86개 정책과제를 제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교과부 등 범부처가 합동 추진

〈표 2-9〉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교(1차, 2차)

| 구분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
| 비전    |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li> <li>•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li> <li>•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li> </ul>   |
| 추진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li> <li>•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li> <li>•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li>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li> <li>•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li>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li> <li>•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li> <li>•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li> <li>•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li> <li>• 정책추진체계 정비</li> </ul> |

-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는 매우 다양한데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기 시작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 문화의 융합과 창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수자 문화의 공존과 이주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두는 정책 추진
- 2013년 정부는 문화융성 3대 전략 및 10대 과제 중 하나로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를 설정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이주민 등 국내 소수자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함
- ‘무지개다리’사업이 발표되어,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들의 자국문화 표현 및 교류기회 마련을 추진함
  -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 내 소수문화, 세대문화, 지역문화, 다문화 등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문화예술교류 및 소통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2년 시범추진
  -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설정하고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을 주요 과제로 하였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도서·영상 등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문화예술 콘텐츠 보급강화
- 이 시기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기존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정착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한 공문화 의미
  - 여전히 다른 인종과 소수는 정책수혜 대상으로 인식되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의 문화다양성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다양한 논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문화한 점에 의의가 있음

## 나. 소수에 대한 문화권 보장 및 사회갈등 해소로의 영역 확대

〈표 2-1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주요내용

| 조항   | 주요내용  |
|------|---|
| 제1조  | 이 법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제2조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상관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등의 양식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
| 제4조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 제10조 |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함  |
| 제11조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일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함  |

자료 : 법제처(www.law.go.kr)

### 1) 문화다양성 법률제정과 다양한 문화증진 사업

- 201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 본격적인 추진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 조항 구성
  - 구체적으로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과 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이 포함됨
- 특히 문화다양성 논의가 본래 문화권 보장에서 기초하기 때문에 모

든 사람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역점을 둠

- 이전 지원정책의 영역이 이주민 지원정책인 다문화에 국한된 인식이 강하였으나 탈북자, 여성, 장애인 및 노인, 청소년 등 사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집단을 포괄하도록 하고, 소수자 표현 증진 및 문화적 접근성 기회 제공에 방점을 두고 있음

- ‘문화다양성 법’ 뿐만 아니라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의 제정으로 법적근거가 정비됨

〈표 2-1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법적근거 정비 내용

| 법령명                         | 제정이유  |
|-----------------------------|---|
| 문화기본법<br>(2013.12.30. 제정)   |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 지역문화진흥법<br>(2014.1.28., 제정) |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함  |

자료 : 법제처(www.law.go.kr)

## 2) 무지개다리사업의 성공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기틀마련

- 실제로 2002년 UN 총회에서 5월 21일을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로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으로써 문화다양성 법에 근거하여 ‘문화다양성 주간’을 2015년부터 지정, 운영
  - 매년 5월 21일 일주일간 실시되며,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전시, 공연, 학술행사, 캠페인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전국에서 진행



- 무지개다리 사업은 소수문화·세대문화·다문화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 간 문화예술교류 및 소통 증진 프로그램 확대(現27개 지역)
  - 문화다양성 관련 대상자 범위를 확대시켜, 청소년·예술인·일반인 등 대상 통일문화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하고 정책사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사업’,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사업’, ‘독립 영화 및 음악 산업 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

〈표 2-12〉 무지개다리 사업 성과추이

|                |   |                |   |                 |   |                 |   |                 |
|----------------|---|----------------|---|-----------------|---|-----------------|---|-----------------|
| 6개<br>시범사업     | ⇒ | 17개 사업         | ⇒ | 23개 사업          | ⇒ | 24개 사업          | ⇒ | 25개 사업          |
| 참가자<br>33,193명 |   | 참가자<br>36,369명 |   | 참가자<br>108,830명 |   | 참가자<br>187,012명 |   | 참가자<br>226,321명 |
| 2012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이주민에 대한 복지 차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 제고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에 집중
  - 현재도 문화다양성사업이 나와 다른 일부 소수대상의 수혜대상 정책으로 취급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동등한 권리주체를 인정하려는 정책이해도 인식 결여

### 3)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서 국내 정책의 정합성 제고 노력

- 우리나라는 제6차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 총회(2017. 6. 12.~15. 파리 유네스코 본부) 기간 중에 시행된 2017~21년 임기의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선거에서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음
- 협약 당사국 145개국 중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서 국제사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부여됨



## 제3장 ●●

# 정부간위원회 협력활동과 주요의제





## 제1절

## 정부간위원회의 특성과 동향분석

## 1.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정부간위원회:** 총회에서 선출된 당사국대표들이 참석하며, 협약의 목적을 추구하고 당사국 총회의 권한과 지시 아래 협약의 여러 조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기능으로 활동
- **위원국:** 4년 임기로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되며, 협약의 이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지침서를 마련하고, 회원국의 보고서와 내용에 관한 요약서와 위원회의 의견을 당사국 총회에 전달하며, 국제문화다양성 기금의 사용에 관해 결정함
-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기능:** 협약 제23조 6항에 기초해 정리함
  - 협약의 목표 홍보 및 협약의 이행 촉진과 모니터링
  - 동 협약 조항들의 이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 협약 당사국 정기보고서를 정부간위원회의 의견 및 요약본과 함께 당사국 총회에 전달
  - 동 협약의 관련 조항들, 특히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적절한 권고
  - 다른 국제적 토론의 장에서 동 협약의 목표 및 원칙 달성에 기여하는 협의 절차 및 메커니즘 수립
  -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모든 임무의 수행
- **문화다양성기금(IFCD):** 협약당사국은 유네스코 공여금의 1%에 준하는 문화다양성기금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 전문인력개발, 인프라 확보 등을 체계적,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국가보고서의 정기보고:** 협약 9조에 따른 가입국의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협약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함
  - 첫 번째 보고서 기간(2012-2015) 제출률은 74%였고 2017년에는 19건 중 6건(31.5%)이 제출되었기에 아시아태평양 그룹 내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독려하고 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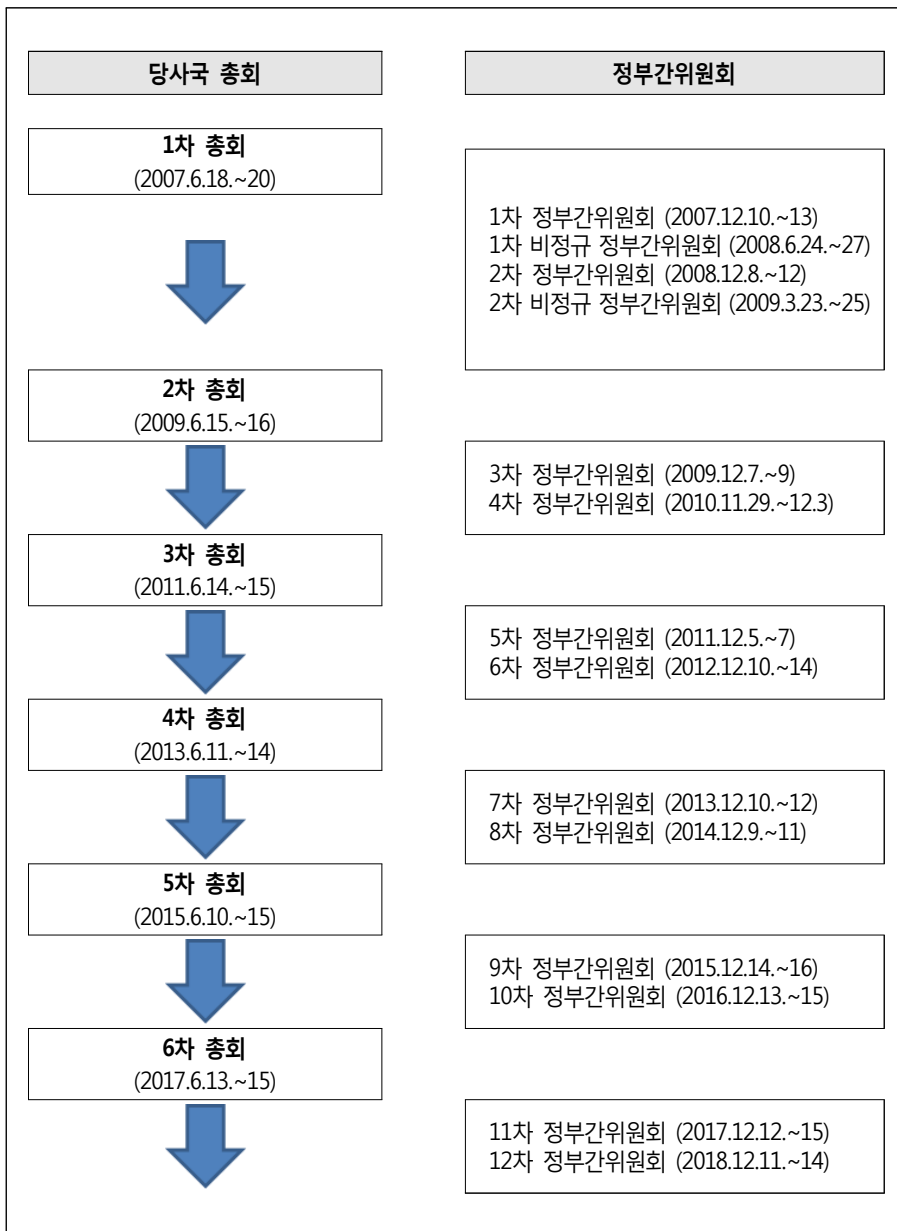
〈표 3-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2005)

| 제23조 정부간위원회  |
|--|
|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정부간위원회” 라함)는 유네스코 내에 설치된다. 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이 협약 발효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18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br>2.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된다.<br>3. 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과 지시 아래 운영되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책무를 지닌다.<br>4. 협약당사국의 수가 50개에 이르는 경우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수는 24개로 증가한다.<br>5.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형평한 지리적 대표성과 순환제 원칙에 근거한다.<br>6. 이 협약에 의해 부과된 다른 책임을 해함이 없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가. 이 협약의 목적추구 및 그 이행의 촉진과 감시<br>나.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규정의 이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지침의 마련과 제출<br>다. 당사국 총회에 의견 및 요약본과 함께 당사국 보고서 제출<br>라. 이 협약의 관련 규정, 특히 제8조가 정한 바에 따라 당사국이 유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권고<br>마. 다른 국제무대에서 이 협약의 목적 및 원칙 증진을 위한 협의 절차와기제의 마련<br>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는 기타 모든 과제의 수행<br>7. 정부간위원회는 그 절차규정에 따라 특정 사항에 관한 협의를 목적으로 언제든지 공공 및 민간 기구 혹은 개인들에게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br>8. 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위하여 자체 절차규정을 제출한다. |

- 번역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2. 위원회의 주요안건 및 논의사항

〈표 3-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및 정부간위원회 현황



-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2007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총 11회의 정기 회의와 2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면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기구로 자리 잡았으며, 문화다양성 협약 총회와 더불어 협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음

#### 가. 제1차 정부간위원회 (2007.12.10-12.13)

- 초대 의장단이 구성됨- Gilbert Laurin 주유네스코 대사(캐나다)가 의장, 인도,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 튀니지 대표가 부의장
- 의사진행 규칙이 채택되었으며, 채택 과정에서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이외 장소에서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임시 의장단을 별도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향후 모든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하고 별도 의장단 선출은 하지 않기로 함
- NGO 참여 장려를 위해 NGO 옵서버 참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 운영지침구조 및 구성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협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비 과정에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국제협력, 국제기금, 시민사회 참여,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등에 우선순위 부여), 지역 및 언어권을 감안한 워킹그룹을 구성해야 한다는 위원국(브라질, 독일,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의견이 수용됨
- 국제협력 관련 의제에서, 협약 제16조가 규정하는 우대조치의 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사무국은 경제 발전 상황이 서로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우대조치, 파트너십 등 국제협력 관련 주요개념에 대한 정의, 이행 방법론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협약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대다수 위원국들



이 강조하였고, 특히 국제법상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협약에 직접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최초라는 데 의미를 부여함

- 문화다양성기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기금 사용의 우선순위와 수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 기금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할 것임이 논의되었으며, 사무국도 위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다양성기금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료하게 다듬을 것을 약속함
  - 기금조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이 분담금의 1%를 자발적으로 기여해 기금 조성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명문화 하는 방안이 인도 대표에 의해 처음 제안됨
  - 위원국들은 문화다양성기금 사용 신청은 협약 당사국이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금 지원 여부 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기금 지원 여부 결정시에는 문화정책 개발과 역량강화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나. 제1차 비정규 정부간위원회 (2008.6.24-6.27)

- 협약 운영지침 준비가 주요한 의제였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운영지침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여 주제별 토의가 이루어짐.
  - 7번 조항(문화적 표현 촉진 조치) 관련, 중국은 공공 윤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생산/배포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조항과 관련성이 적다는 위원국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회수함
  - 8번 조항(문화적 표현 보호 조치) 관련, 특수상황을 직면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주체는 국가이며, 위원회는 이러한 국가의 조치를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

- 개도국을 위한 우대조치(협약 16번 조항 관련)에 대해 연구할 전문가 선출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의장이 제시한 전문가 선출 결과 및 과정, 권한사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국이 노고를 치하하였고, 제안된 안이 그대로 채택됨
- 협약 15번 조항과 관련된 운영지침 내 파트너십의 개념과 이행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파트너십의 개념과 특성을 명확화하는 정도의 수정만 있었고 기타 부분은 사무국의 제안대로 채택됨
- 시민사회 참여와 관련된 운영지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주요한 논의점은 시민사회의 개념이 NGOs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 협약 목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국제적 차원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이었음
  - 정부간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상호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사무국은 현재까지 모아진 문화다양성기금에 대해 중간보고하였으며, 제2차 정부간위원회(정규회의)에서 관련 운영지침이 채택될 것임을 안내하였음.
  - 위원국들은 향후 3년간 시범운영을 해본 뒤 운영지침을 평가/수정할 것, 기금 지출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 소관의 책임일 것, 전문가 활용비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여 기금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것, 기금은 특정 목적으로 배정되지 않을 것 등에 동의함

#### 다. 제2차 정부간위원회 (2008.12.8-12)

- 국제협력 촉진(협약 12번 조항 관련)에 대한 운영지침 초안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국들 간에 해당 협약 조항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모든 국가들 간 협력 촉진인지, 개도국 중심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긴 논의 끝에 별도의 운영지침을 채택하지 않음

것을 총회에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됨

- 지속가능발전에의 문화 통합(협약 13번 조항 관련)에 대한 운영지침 초안 관련 논의에서는 특기할 만한 수정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지속가능발전에 문화를 통합하는 목표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위원국들의 헌신이 확인됨
- 발전을 위한 협력(협약 14번 조항 관련) 운영지침 초안은 별다른 수정 없이 채택됨
- 문화다양성기금 활용 지침 관련 논의에서는 대부분이 위원국들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경제/정치적으로 조건부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함
  - 기금 관리 비용은 최소화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배당되는 기금이 많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개도국을 위한 우대조치(협약 16번 조항 관련)에 대한 전문가 리포트 의제에서는 6명의 전문가들이 준비한 보고서가 소개되었는데, 우대조치라 함은 단순 무역 관련 조치를 넘어 파트너십과 협력 메커니즘 위에 구축되는 보다 넓은 개념임을 확인함
  - 다만 민감한 주제일 수 있고 전문가들의 시각도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바, 지침을 준비한 뒤 5년 정도는 실험적 기간으로 두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관련 기준 등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함
  - 위원국들은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을 거친 후, 운영지침이 구체적인 예를 많이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논의를 정리함

#### 라. 제2차 비정규 정부간위원회 (2009.3.23-3.25)

- 협약 16번 조항에 대한 운영지침(개발도상국을 위한 우대조치) 초안 검토가 이루어진 바, 단순 협력과는 차별화되는 파트너십 구축, 남남(south-south) 협력 강화, 개도국의 문화상품과 기술의 수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 뒤 우대조치에 대한 운영지침이 채택됨

- 문화다양성기금 모금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주요 쟁점사항이었는데, 보다 효과적인 모금을 위해 커뮤니케이션/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당사국만을 대상으로 모금할 것이 아니라 대형 기업 등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강구해볼 것이 논의됨
- 협약 가시성 증진 관련 주제 논의에서는 많은 위원국들이 협약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것 자체가 협약 가시성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협약 이행에 있어 각국 정부 뿐 아니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시민사회, 일반 시민, 그리고 청년을 적극적으로 관여시켜야 함을 강조함

#### 마. 제3차 정부간위원회 (2009.12.7-12.9)

- 협약 비준 장려 전략 의제 관련, 사무국은 아태지역(그룹 IV)과 아랍지역(그룹 V-b)의 비준율이 현저히 낮아 불균형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협약 가입/비준 촉진을 위해서는 현장사무소(field offices), 당사국, 시민사회, 정부간위원회 등 4개 주요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위원국들은 협약 비준 촉진을 위해 방안을 수립한 사무국의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협약의 번역 및 보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협약 가입의 실익 및 모범 사례 공유를 위해 당사국 정부 및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문화다양성기금 예비단계 이행 관련, 사무국은 기금의 약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범사업에 할당하는 내용의 기금운영안을 제출하였는데, 위원회의 제안으로 70%까지 상향조정되고, 이 중에서도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액수를 최소 60%로 설정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하여 채택함

- 위원회는 문화다양성기금의 시범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과 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위원단을 선정하였으며, 사업 신청안 심사결과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차기 위원회에서 검토기로 결정하였음
- 문화다양성협약 제9조는 협약 발효로부터 4년 후부터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 현황에 관한 정기보고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동 보고의 기간, 내용, 형식, 제출 절차 및 후속 조치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짐
- 보고서 형식 관련, 다수 위원국들이 동 보고 형식 및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계량화된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사무국은 국가간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격화된 지표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따른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양자를 혼합한 접근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함
- 보고서 제출 시기 관련,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제4차 당사국 총회(2013.6월)까지 일괄적으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로부터 매 4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
- 위원회는 협약 가시성 제고 및 홍보방안 관련 운영지침(안) 승인
- 위원회는 정보 교환과 분석 및 보급 관련 운영지침(안) 작성을 위한 예비 논의를 실시함. 위원국들은 특히 모범사례 공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모범사례의 개념 수립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함

#### 바. 제4차 정부간위원회 (2010.11.29-12.3)

- 협약 이행 촉진을 위해 ‘대중인사’를 임명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해 ‘대중인사’ 임명은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함

- 위원회는 협약 비준 확대를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당사국별 컨택포인트, 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임을 확인함
- 위원회는 사무국이 작성한 정보공유 및 투명성에 관한 운영지침 초안(의제7), 정보의 교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운영지침 초안(의제8), 교육 및 대중인식에 관한 운영지침 초안(의제9)을 심의하였는바, 일부 문안 수정을 거쳐 당사국 총회에 권고할 운영지침(안)을 채택함
- “협약 엠블럼 제작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비용 분석(의제5)”이 심의되었으나, 기존의 문화다양성 엠블럼을 준용하자는 의견과 국제공모를 통해 새로운 엠블럼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정부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현재 조성된 국제문화다양성기금(2010년 11월말 기준 총 2,984,000 미불)의 70%를 2011년에 집행하고 2011년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82%만을 전문가패널이 추천한 32개 시범사업에 할당하기로 결정함
- 정기보고서 요약본 작성 업무가 사무국의 소관사항으로 결정되었음을 감안하여, 협약 사무국 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유네스코 정규 사업예산안(36 C/5)에 반영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사. 제5차 정부간위원회 (2011.12.5-12.7)

- Irina Bokova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한 31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시범사업이 문화가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하면서, 당사국들이 보다 많은 자발적 기여

를 해 줄 것을 요청함

- 위원회는 2011년 IFCD 시범사업 지원 신청서 197건중 전문가 패널 심의를 통과한 17개 프로그램 총 US\$1,343,192 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승인함. 시범사업 선정 및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현 전문가 패널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사무국은 IFCD 관리평가, 시범사업 이행평가, IFCD 회계감사 3부분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안)을 제출하였으며, 캐나다는 평가기준 적용에 있어 자원관리의 건전성, 사업의 구조적 영향, 사업의 지속가능성, 협약당사국 또는 다른 국제기구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과의 보완성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스웨덴, 알바니아 등은 IFCD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지원서와 심의 결과 자료 일체를 온라인 공개를 제안하였고 위원회는 상기 위원국들의 제안을 포함한 평가기준(안)을 승인함.
- 사무국은 협약당사국들이 협약 가입 4년후 및 이후 매4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보고서는 관련 운영지침(정보공유 및 투명성에 관한 운영지침 10조)에 따라 위원회 공식언어인 영어 또는 불어로 제출해야 하며, 영어-불어간 번역 비용으로 2012년도 US\$131,600(94개국, 20페이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함
  - 브라질은 남미국가들간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영어/불어 외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로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캐나다는 번역 비용 절감을 위해 협약당사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영어/불어본을 모두 제출할 것을 권장할 것을 제안하여, 위원회는 수용함
- 사무국은 당사국들에 회람한 문화다양성협약 21조(국제협약 및 조정) 이행 현황 조사 결과, 25개 당사국이 WTO, WIPO, ASEM 등

여타 국제기구 또는 다자 및 양자 문화-무역 관련 협정 등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을 인용하였다고 답했다고 보고함

- 일부 NGO 대표들은 문화다양성협약과 FTA등 무역규범간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사국들의 문화다양성협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발언함

- 협약 엠블렘 제작 방법이 논의되었으며, 사무국은 국제공모전을 통한 제작보다는 수의계약을 통한 방법이 비용 절감에 이롭다고 보고함. 위원회는 사무국이 차기 정부간위원회에서 엠블렘(안)과 엠블렘 사용에 관한 운영지침(안)을 제출할 것을 결정함

#### 아. 제6차 정부간위원회 (2012.12.10-12.14)

- 사무국은 당사국 절반 이상인 48개국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년 8월 31일 이후 제출한 3건은 1차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고함
  - 몇몇 당사국들은 보고서 작성 능력 부족,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회 개최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연기했음
  - 튀니지, 베트남 등 여러 위원국이 정기보고 작성과 관련하여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라오스,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아르메니아 등은 역량개발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함
  - 캐나다는 금번 정기보고서 검토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운영지침수정(안)을 차기 당사국 회의에 요청하였으며, 스위스는 차기 당사국 총회시 당사국 및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기보고서 관련 교류 세션 개최를 제안하여 채택됨
- 사무국은 2012년 IFCD 시범사업 지원신청 모집결과, 총 219건의 지원접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심의 결과 13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를 승인함



- 금번이 기금사용 3년차 계획으로써 시범사업의 마지막 단계였으나, 다수 회원국 요청으로 4년차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모집에 착수기로 결정
- 사무국 내부감사실(ISO)은 2010년 시작한 1차 IFCD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연관성, 효과성 및 지속성, 기금의 관리와 운영체계 등을 점검·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지속성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이며 지식 관리, 우수사례형성, 정책함의 등을 위한 사업 분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됨
- 위원회는 사무국 내부 감사실(IOS) 권고와 제4차 및 5차 정부간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피드백 등을 반영한 IFCD 운영지침 수정 초안을 채택하고 이를 내년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기로 함
  - 주요내용 △각 시범사업당 최대 10만 달러 지원, △6명의 전문가 패널의 자격요건 강화, △1개국 최대 4건 이내 신청 제한 등이 있음
- 사무국은 제5차 정부간위원회 결의에 따라 기금모금활동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업을 활용하여 기금모금 전략을 수립하고 금차 위원회에 보고함. 모금 목표는 향후 5년간 기금액 3배 증가 및 협약 비준 당사국 절반이상 자발적 기금 납부였음.
  - 위원회는 논의 후 기금모금 전략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브라질의 요청으로 전략이행보고서를 차기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위원회는 사무국이 제시한 3가지 엠블럼 후보 도안 및 엠블럼 사용지침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당사국 총회에서 새 후보 디자인 도안을 하나 더 추가하여 기존안과 함께 검토하기로 함
- 사무국은 당사국들에 회람한 문화다양성협약 제21조(국제협약의 및 조정) 이행현황 조사결과, 2011년 36개국, 2012년 16개국, 총 38개국이 답변하였음을 보고함

- 주요 이행활동으로 당사국들은 문화를 주제로 하지 않는 국제포럼에서도 협약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자유 무역협정에서 동 협약의 목적과 원리를 강조해야 하며, 신규 양자 협의시 협약의 목적과 원리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비당사국과의 대화를 통해 협약 조인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자. 제7차 정부간위원회 (2013.12.10-12.12)

- 사무국은 2012.8.21-2013.8.21간 총 20개국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고함.
- 위원회는 향후 정기보고서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문화다양성 증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14년 및 2015년 정기보고서를 제출 예정인 당사국들에게 자발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협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요지의 결정문을 채택함
- 사무국은 제4차 IFCD 사업 지원신청 모집결과, 총 196건의 지원접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패널 심의를 통해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총 \$763,747.56 규모의 재정지원 승인을 요청한바, 위원회는 이를 승인함.
  - 전문가 패널은 아태지역과 중동지역의 신청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함을 지적한 바 있음
  - 위원국들은 1972년 세계유산보호협약 및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과 달리 문화다양성기금의 10%가 간접비에 지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사무국이 IFCD 지출과 관련하여 차기 위원회시 여타 문화협약들과 동일한 원칙에 기반한 cost recovery 정책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사무국은 동 협약의 당사국이 2010년 105개국에서 2013.10월 현재

총 133개국으로 증가하였으나, 아태그룹(그룹 IV)의 경우 여타 지역그룹에 비해 참여가 극히 저조(44개국중 협약당사국이 12개국에 불과)하다고 보고함

- 위원회는 당사국과 시민사회에 동 협약 비준을 통한 혜택 등에 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등 동 협약 비준 촉진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함
- 사무국은 6개 주요문화협약의 작업방식에 대한 내부감사에서 △ 협약 이행시 우선순위 설정 △ 협약간 공동사무국 설립을 통한 인건비 감축 △ 회의개최횟수 및 개최주기 조정 등의 권고가 이루어졌음을 소개함
- 스웨덴의 주도로 제37차 총회 결정(37C/49)에 따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협약 당사국들이 운영기구 자체평가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사무국이 동 작업을 촉진시킬 것을 요청하는 결정문을 채택함
  -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위원회에서 디지털 기술에의 접근성 보장, 디지털 문해, 지적 재산권 보호 등 관련 이슈들을 향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함
  - EU Television Broadcasting Union 등의 단체들은 공공미디어(Public Service Media)가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수집단의 문화를 보존하는 데도 기여하는바, 문화적 다양성 증진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있음을 강조함
  - 상기 관련, 위원국들은 사무국에 2005년 협약 이행시 디지털 기술, 공공방송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협약 당사국들의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수집, 분석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함

#### 차. 제8차 정부간위원회 (2014.12.9-12.11)

- Bokova 사무총장은 협약 10주년을 맞는 2015년이 그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금번 위원회가 Post-2015 지속가능 개발 의제 수립시 문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지지를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함
- 사무총장은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공여자 기반을 공고화하려는 노력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당사국들이 동 기금에 기여를 확대하여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함.
- 제7차 정부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는 △ 업무 간 우선순위 설정, △ 비용 대비 효율성 증대, △ 협약 운영 간소화 및 협약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3개 부문에서의 이행상황 보고가 이루어짐  
- 영국, 세인트루시아,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10%의 간접비가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서 지불되고 있는 점을 고려시, 협약 운영을 위한 각종 행정비용이 또다시 IFCD 예산에서 지불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최근 신설된 문화협약 공동사무국을 통해 행정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
- 사무국은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6건의 정기보고서(크로아티아, 체코, 우크라이나, 브룬디, 케냐, 말라위)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함
- 사무국은 정기보고서 제출의 목적이 정보와 좋은 관행을 공유하고 협약의 이행을 국제적 차원에서 감독하는 데 있으나, 협약 당사국 중 약 40%(캐리비안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경우 2/3 이상)의 국가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함

- 여러 위원국들이 정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워크숍 개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사무국은 제5차 IFCD 사업 지원신청 모집 결과, 총 172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으며, 전문가 패널 심의를 통해 7개 프로젝트에 대한 총 \$618,418 규모의 재정지원 승인을 요청한 바, 위원회는 이를 승인함
- 사무국은 2012년 제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기금 모금 5개년 전략 관련, 그 1단계(기존 IFCD 공여자(당사국) 기반 공고화)인 2013년 1월-2014년 6월의 기간 동안 \$1,060,893.86의 기금 모금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1,434,875의 75%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그러나 모금에 참여한 국가는 134개 협약 당사국 중 15%(20개국)에 그쳤으며, 매년 정기적인 공여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단 5%인 7개국에 불과하였음
- 캐나다와 프랑스의 제안으로 금번 위원회의 의제 목록에 디지털 시대의 문화다양성이 추가됨
- 캐나다와 프랑스는 의제 제출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문화다양성의 증진에 있어서 기회인 동시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 가치 사슬의 각 단계에 있는 행위자들은 이러한 기회와 도전에 응답할 필요가 있는 바, 동 협약 당사국들이 디지털 이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 수립을 통해 협약 이행 방안에 관해 숙고해야 한다고 발언함
- 스웨덴, 벨기에, 쿠웨이트, 그레나다, 중국,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동 이슈가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행동 계획을 수립하자는 제안에 찬성함

- 캐나다는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시성을 증대시켜 국가들의 협약 비준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유네스코 상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 바, 동 의제가 금번 위원회의 의제 목록에 포함됨
- 관련하여 위원국들은 상기 유네스코 상 제정관련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바, 결정문을 채택하지 않는 대신 향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동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함

#### 카. 제9차 정부간위원회 (2015.12.14-12.16)

- 위원회는 유네스코가 점점 더 비정규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사무국에 재정적 기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특히 역량강화, 지식 생산 및 관리 활동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밝힘
- 위원회는 문화다양성기금을 수령할 6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기금 관련 외부감사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이 재정적 기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함
- 디지털 이슈에 대한 운영지침안이 마련되고 있는 바, 위원회는 사무국으로 하여금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다음 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된 초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 또한 디지털 이슈가 협약 이행에 갖는 함의에 대해 사무국이 10차 회의에서 발표해줄 것을 요청함
- 위원회는 협약 16조(개도국을 위한 우대조치) 및 21조(국제 자문 및 협력)의 이행과 영향에 대해 사무국이 계속해서 당사국 및 시민사회 등과 협의할 것, 관련 훈련 모듈을 개발할 것을 요청함
- 시민사회 참여 관련 의제 또한 다루어져,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 및

정기보고서 작성 시 등에 시민사회와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기타 5개의 정기보고서를 검토하고, 정기보고 준비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며,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이 확장될 수 있도록 비정규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함

#### 타. 제10차 정부간위원회 (2016.12.13-12.15)

- 사무국은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의 4대 주요 목표인 △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지원, △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 및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이동성 증진, △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로 문화 통합, △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증진을 중심으로 2016년 활동 내역을 보고함
- 협약의 영향을 완전히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협약 모니터링 체계가 각국 문화정책을 설계하고 검토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여 지고 있으며, UNESCO 내부적으로도 다른 협약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함.
  - 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활동들이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협약 이행 지원 방식을 결정할 것과 사무국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글로벌 지식관리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정규 예산 지원을 촉구함
- 사무국은 2007년에 협약이 발효된 이래, 협약 이행에 시민사회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고, 운영기구 내에서도 시민사회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작년 제 9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함
  - 관련 지표가 계속 개발 중에 있고, 시민사회에 의한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이행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차기 위원회에서 시민사회가 제출할 첫 보고서를 기대한다고 함

- 대다수 위원국들은 시민사회를 운영기구 회의에 포함시킨 사무국의 이니셔티브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가능 개발, 문화 발전 및 개선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의장단은 정부간위원회 개최 하루 전, 시민사회와 가진 회의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 우선순위에 큰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고, 향후 문화정책 수립시 시민사회, NGO가 갖고 있는 우려 및 우선순위 등을 잘 파악하고, 조율하여 협약 이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함

○ 사무국은 지난 4년간 디지털 기술 발달이 협약 이행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작년 제5차 당사국 총회 결정에 따라 금번 정부간위원회에서 디지털 이슈에 관한 운영지침 초안 채택을 다루게 되었다고 의제 배경을 설명함

○ 운영지침 초안은 협약에 강조된 원칙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거버넌스 체계, △ 문화 상품 및 서비스 흐름의 재균형,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체제로의 통합, △ 시민사회의 역할, △ 정보 및 관행 공유 등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음

- 브라질, 우루과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창조산업 활성화 강조
- 네덜란드, 스웨덴은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 지적함
- 핀란드, Council of Europe 등은 디지털 문화컨텐츠에 대한 접근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능한 환경을 강조함
- 프랑스와 캐나다는 디지털 환경에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함

○ 제7차 IFCD 지원사업 모집 결과, 98개국으로부터 451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는 전문가 패널 심의를 통과한 6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US\$ 503,242 재정 지원을 승인함



- 사무국은 디지털 아트사업 지원 신청건이 예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가용 예산은 줄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펀드레이징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위원회는 사무국이 IFCD 펀드레이징 제3단계 전략에 따라 IFCD 특별계좌 미할당 예산 중 US\$53,416를 펀드레이징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보코바 총장이 2017년 시작과 함께 협약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규분담금의 1%에 해당하는 기여를 촉구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 사무국은 2016.6월 기준 총 33개의 정기보고서를 접수했다고 하고, 정기보고서 작성은 요식행위가 아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이자 국제협력 플랫폼임을 강조함
- 정기보고서 관련, 사무국은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을 전개함
  - 첫째, 국가별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및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훈련
  - 둘째는 정기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글로벌 리포트로 발간하는 것으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 배포했으며, 동 보고서가 당사국 문화정책 검토시 영감을 제공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된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함
- 정기보고서 제출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 현장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훈련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발적 기여의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함

#### 파. 제11차 정부간위원회 (2017.12.12-12.15)

- 사무국은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의 4대 주요 목표(△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지원, △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 및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이동성 증진, △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로 문화 통합, △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증진)를 중심으로 2017년 활동내역을 보고했으며, 인적/재정적 어려움에도 2016-2017 목표치 7개 중 6개를 달성,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영향이 확대되고 협약의 가시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었다고 함

- 2016-2017 기간에 가나, 남수단, 세인트키츠네비스, 동티모르, 터키가 2005년 협약을 신규 비준했으며, 협약의 가시성 및 신뢰도 제고에 따라 사무국은 점점 더 많은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비정규예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문화다양성기금은 2007년부터 2017.6.30까지 모금된 기금 총액 약 910만 달러 중, 2010년 실질적 운영에 돌입한 이후부터 51개 개도국의 90개 프로젝트에 총 63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사무국은 금년 제8차 IFCD 지원사업 모집 결과, 64개국으로부터 227건의 신청서를 받았고, 최종 선정된 7개 프로젝트에 대해 US\$ 612,220 재정 지원을 요청한 바, 위원회는 이를 승인함

- 올해 총 신청 건수는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보다 적절한 프로젝트의 신청 비율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역량강화 활동이 필수임을 강조함

○ 문화다양성기금에 대한 외부평가가 2012.6월-2017.6월에 걸쳐 진행되었는 바, 공모를 거쳐 선정된 Leitmotive라는 스페인 업체가 △편당요청 공모 방식 개선, △IFCD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지원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조치, △모금 및 소통 전략 개선 등에 대하여 총 21가지의 권고사항을 제시함

- 문화다양성기금은 매 5년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지난 평가는 2012년에 있었음
- 다수 위원국들은 기금의 지속성을 위해 적절한 연구였다고 평가하

는 한편, 외부평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결과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권고사항에 대한 결정을 다음 차기로 미루는 것으로 결정문을 수정하고 이를 채택함

- 아태지역 내에서 IFCD에 대한 저조한 신청사유에 대한 중국의 질문에 대해, 사무국은 아태지역 내 협약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본다고 하며, 이런 맥락에서 2018년 한국이 아태지역 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고무적이라고 답변함

○ 지난 정부간위원회(제10차) 결정으로 금번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으며, 협약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70개 기구의 활발한 참여로 보고서가 작성, 시민사회 활동가 5인이 동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설명함

- 협약 이행 관련 시민사회가 겪는 어려움으로 지원 부족,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역량 및 환경 차이, 공동의 목표 설정 등이 언급되었음

○ 제2차 글로벌 리포트 발간 소식을 전함

- 사무국은 2017년 제출 대상 정기보고서 총 19건 중 6건(31.5%)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낮은 보고서 제출률을 고려, 정기보고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사무국은 제6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2018-2019간 활동 계획안을 제시하고, 동 계획안이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39C/5), 총회에서 정한 우선순위 활동,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되었음을 밝히며, 위원국들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는 않았음

○ 활동 계획 주요내용 : △글로벌 역량개발 전략이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운영지침 관련 우선순위 활동 지정, △ 필요한 경우, 협약 운영지침 제9조, 13조, 16조 개정, △ '1980년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와 관련된 정책 및 후속조치의 시너지효과 연구 등

〈표 3-3〉 정부간위원회 주요 논의안건(종합)

| 위원회 회차                            | 주요 사항  |
|-----------------------------------|--|
| 제1차<br>정부간위원회<br>(2007.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대 의장단 구성</li> <li>- 정부간위원회 개최장소 ‘프랑스 파리’ 확정</li> <li>- 협약이행 가이드라인 준비과정 논의</li> <li>- 문화다양성기금(IFCD)사용 가이드라인 논의</li> <li>- IFCD 분담금 1% 자발적 기여 제안</li> </ul>  |
| 제1차<br>비정규<br>정부간위원회<br>(2008.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운영지침 준비 의제 논의</li> <li>- 개도국 우대조치관련 논의</li> <li>- 시민사회 참여 및 운영지침 논의</li> <li>- 사무국의 문화다양성기금(IFCD)중간보고</li> <li>- IFCD 3년 시범운영 후 평가, 수정 동의</li> </ul>  |
| 제2차<br>정부간위원회<br>(2008.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촉진에 대한 운영지침 초안 논의</li> <li>-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문화통합 운영지침 초안 논의</li> <li>- IFCD 활용지침에서 개도국 대상 사용 합의</li> <li>- 개도국 우대조치 의제 토의 및 5년 이후 재정비안 논의</li> </ul>   |
| 제2차<br>비정규<br>정부간위원회<br>(2009.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한 운영지침 채택</li> <li>- IFCD 모금방안에서 당사국 외에 민간분야와 협력추진 논의</li> <li>- 협약이행 시 정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연계강조</li> </ul>  |
| 제3차<br>정부간위원회<br>(2009.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지역, 아랍지역의 낮은 협약비준 우려표명</li> <li>- 협약비준 확대 방안 및 향후대책 논의</li> <li>- IFCD 예비단계 이행관련 기금운영 수정안 조정</li> <li>- 4년 후 정기보고서 제출절차 시 위원회 보고결정권한 부여</li> </ul>  |
| 제4차<br>정부간위원회<br>(201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 작성한 정보공유 운영초안, 교류 운영, 교육 운영초안 논의</li> <li>- 문화다양성 협약 엠블렘 제작 추진 의견논의(지속)</li> <li>- IFCD 집행 건 논의 및 32개 시범사업할당 결정</li> <li>- 정기보고서 요약본 작성업무가 사무국 소관사항으로 결정</li> </ul>   |
| 제5차<br>정부간위원회<br>(2011.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CD 관련 당사국의 보다 많은 자발적 기여 요청</li> <li>- IFCD 시범사업 신청심의 및 17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li> <li>- 협약당사국 정기보고서 제출 언어 ‘영어’, ‘불어’ 사용 확정</li> <li>- 여타 국제기구에서 문화다양성협약 인용 및 이행주시 주목</li> <li>- 협약 엠블렘 제작 논의 및 차기 위원회에서 제출 결정</li> </ul> |

|                             |   |
|-----------------------------|---|
| 제6차<br>정부간위원회<br>(2012.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 48개국 정기보고서 제출 검토</li> <li>- 정기보고서 작성 능력 제고방안 논의(남반구 및 아프리카)</li> <li>- IFCD 시범사업 신청심의 및 13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li> <li>- 기금모금활동활성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업 활용안 보고</li> <li>- 협약 21조(국제협약) 이행조사결과 39개국 답변 보고</li> </ul>                                   |
| 제7차<br>정부간위원회<br>(2013.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기술과 문화다양성증진관계 보고서 반영 권고채택</li> <li>- IFCD 신청심의 및 10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li> <li>- 아태지역(그룹 IV) 참여부진 보고 및 비준활동 권고채택</li> <li>- 정기보고서 제출상황보고 (2012.8-13.8; 20개국 제출)</li> <li>- 사무국에 시민사회참여 관련 정보분석 요청</li> </ul>                                |
| 제8차<br>정부간위원회<br>(2014.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10주년, Post 2015 지속가능개발의제 수립 시 '문화' 강화요청</li> <li>- 협약운영 간소화 및 행정관련 비용 효율성증대 논의</li> <li>- IFCD 신청심의 및 7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li> <li>- 정기보고서 작성제출 역량증진 필요(아프리카, 남미)</li> <li>- 의제목록에 디지털기술항목 추가 및 행동계획수립 제안</li> </ul>                        |
| 제9차<br>정부간위원회<br>(2015.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당사국의 재정적 기여 강화 요구</li> <li>- IFCD 신청심의 및 6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li> <li>- 디지털이슈 운영 지침안 마련 및 향후 구체화 검토요청</li> <li>- 시민사회참여관련 의제의 긴밀한 협력 촉구</li> </ul>   |
| 제10차<br>정부간위원회<br>(2016.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이행 모니터링체계 4대 주요목표 보고</li> <li>- 시민사회 참여방안 의제포함에 대한 위원국 동의</li> <li>- IFCD 신청심의 및 6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li> <li>- 디지털 이슈 운영지침 초안채택 및 의제배경 설명</li> <li>- 정기보고서 제출접수(33개) 및 글로벌리포트 발간활동 보고</li> </ul>  |
| 제11차<br>정부간위원회<br>(2017.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CD 신청심의 및 7개 프로젝트 재정지원 승인<br/>(2010~, 총 51개 개도국의 90개 프로젝트에 630만불 지원)</li> <li>- IFCD 외부평가 실시 &amp; 21가지 권고사항 제시</li> <li>- 시민사회단체 70개 가구의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설명</li> <li>- 제2차 글로벌리포트 발간소식 보고</li> <li>- 협약 모니터링 목표달성 상황 및 신규 비준국 보고</li> </ul> |

## 제2절

## 정부간위원회의 핵심의제 분석

- 2018년 글로벌 보고서는 지금까지 동 협약이 거둔 성과를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의 4대 목표를 바탕으로 정리함
  - 문화와 창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지원, △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 및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이동성 증진, △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로 문화 통합, △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증진을 강조함
-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 다양한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생산, 유통 및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적 문화정책의 제정, 평가, 기능 여부 △ 상기 문화 정책의 수립 과정과 동 협약의 이행에 얼마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 △ 정보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과정 지원을 위한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여부 등을 꼽고 있음

## Diving into the 2005 Convention goals

## 2005 협약 실행목표

To be in line with the 2005 Convention, every IFCD project must strive to achieve four overarching goals.

|   |  |  |  |
|---|--|--|--|
|  <p><b>Support sustainable systems of governance for culture</b></p> <p><u>문화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체계정립</u></p> <p>This means that the project must help build a system of governance for culture that is transparent; participatory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must include different creative sectors, as well as civil society); and informed.</p> |  <p><b>Achieve a balanced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 mobility of artists</b></p> <p><u>문화상품과 서비스와 문화 전문가들의 이동성 활성화</u></p> <p>The project must lead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that promote the fre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improve market access for cultural goods and services.</p> |  <p><b>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b></p> <p><u>지속가능한 개발체제안으로 문화통합</u></p> <p>In this case, the project must strengthen the cultural se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by facilitating innovative and new businesses models.</p> |  <p><b>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b></p> <p><u>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u></p> <p>The project must promote gender equality by championing policies and measures to support women as creators and producers of cultural goods and to improve equitable access to cultural life.</p> |
|---|--|--|--|

자료: UNESCO(2017),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p. 22

[그림 3-1] 2005 협약 실행 목표

## 1. 문화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

### 가. 정기보고의 중요성과 회원국 역량강화 필요성

- 문화다양성협약 제9조는 협약 당사국들이 협약 가입 4년 후 및 이후 매4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정기보고서는 관련 운영지침(정보공유 및 투명성에 관한 운영지침 10조)에 따라 위원회 공식 언어인 영어/불어로 제출하고 있음
- 제6차 정부간위원회(2012년 12월)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당사국들의 보고서 작성 경험 및 역량 부족이 보고서 미제출, 제출 지연, 혹은 보고서 내용의 부실함으로 나타나기도 했음.
  - 튀니지, 베트남, 라오스,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아르메니아 등 다수의 개도국은 정기 보고서 작성과 관련 워크숍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과 당사국 관련인력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음
- 이처럼 정기보고서 작성과 회원국의 역량강화 증진 필요성 문제는 제8차 정부간위원회(2013년 12월)에서 재차 강조되었음. 동 회의에서 사무국은 정기보고서 제출 목적이 협약의 이행을 국제적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은 물론 좋은 사례와 정보를 공유함에 있으나 2013년 12월 현재 협약 당사국의 약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국가들이(캐리비안지역 과 아프리카지역의 경우 2/3이상)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정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을 강조했음
- 제10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사무국은 정기보고서의 작성이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이자 국제협력의 플랫폼임을 강조하면서 사무국이 실시해온 주요활동을 소개했음
  - 여기에는 국가별 정기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진행해온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취합된 정기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글로벌 리포트 형태로 발간해온 사업이 언급되었음

- 첫번째 국가보고서 제출기간(2012-15) 중 보고서 제출률은 74%였음(120개 당사국 중 89개국 제출)
  - 일부 개도국은 역량부족으로 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스웨덴 정부의 비정규 예산지원으로 12개국 정책모니터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2015-18년 진행 중임
- 제10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사무국은 협약 모니터링 체계가 각국 문화정책을 설계하고 검토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여 지고 있다는 점과 유네스코 내부적으로도 다른 협약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모델이 되었다는 점을 소개한 바 있음
-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위원국들은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의 4대 목표를 바탕으로 2017년에 실시한 사업들을 논의 한 바,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 성평등, 예술가의 지위 등 문화 시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다양한 세부주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참여 기회가 많지 않았던 개발도상국 및 시민사회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협약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 제11차 정부간위원회의 논의로 미루어볼 때, 문화다양성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가 향후에도 동 협약 이행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 노력

- **디지털환경에 대한 협약 이행 대응:** 2013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회원국들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과 관련된 도전과 과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음.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은 제4차 당사국 총회(2013년 6월)에서 디지털 기술이 문화의 생산, 배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협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음
- 제7차 정부간위원회(2013년 12월)에서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가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동 협약 정부간위원회가 디지털 기술에의 접근성 보장, 디지털 문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 관련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2014년 12월에 개최된 제8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캐나다와 프랑스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문화다양성 증진에 있어 기회인 동시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화 가치 사슬(cultural value chain)의 각 단계에 있는 행위자들이 이러한 기회와 도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디지털 이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디지털 운영지침 논의:** 제5차 당사국 총회(2015년 6월)에서 디지털 이슈와 관련된 운영지침을 작성하기로 정했고 제10차 정부간위원회(2016년 12월)에서 디지털 이슈에 관한 운영지침 초안을 검토하고 이를 채택했음

- 동 초안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거버넌스 체계 △문화 상품 및 서비스 흐름의 재균형 △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체제로의 통합 △시민사회의 역할 △정보 및 관행 공유를 핵심 주제로 담았음
- 동 초안 논의과정에서 브라질, 우루과이 등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창의산업 활성화를 강조했고,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중요함을 지적하였으며, 핀란드, 유럽의회 등은 디지털 문화컨텐츠에 대한 접근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프랑스와 캐나다는 디지털 환경에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 **디지털 환경 협약의 이행에 관한 운영지침:** 정부간위원회가 채택한 운영지침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협약 이행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었으나 창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협약의 포괄적 이해, 각 국가의 주권 존중 등과 같은 해결되지 않은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음을 상기할 때, 이들 분야의 해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우리나라의 앞선 디지털 환경에서 축적된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쟁점별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과 함께 더 나아가 이들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과 규범을 만들어가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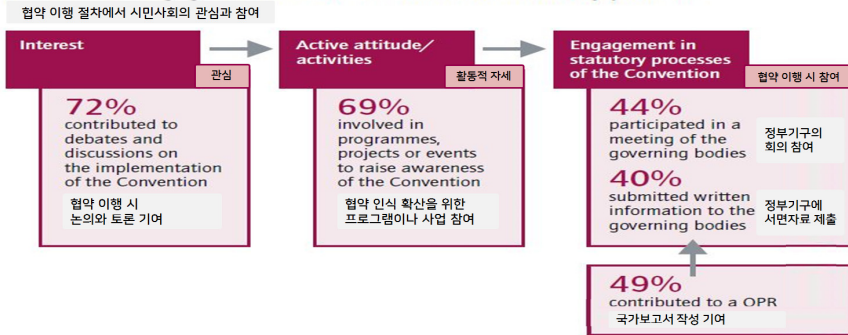
#### 다.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 확대

- 국제법상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명시한 최초의 협약답게 (협약 제11조) 제1차 정부간위원회부터 위원국들은 협약의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해왔음.
- 운영지침에서는 시민사회의 개념이 NGOs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위원국의 시각이 반영되었고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건설적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음

- 사무국은 2007년 협약이 발효된 이래, 협약 이행에 시민사회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고, 운영기구 내에서도 시민사회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시민사회 참여’를 정부간위원회 의제에 포함시키거나 시민사회 참여에 관한 지표 개발, 정기보고서 작성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 필요성 강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음
- 하지만 제10차 정부간위원회(2016년 12월) 직전에 개최된 시민사회와의 미팅에서 노정된 바와 같이 협약의 이행에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 간 우선순위에 큰 차이점이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의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 및 NGOs가 가지고 있는 우려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11차 정부간위원회(2017년 12월)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지원 부족, 시민사회의 역량 한계와 환경적 차이, 공동 목표 설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시민사회의 참여는 정책 수립과정, 사업의 기획과 이행과정, 사업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층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시민사회는 동 협약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동 협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협력자라는 시각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5년 9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당사국이 재정적 혹은 다른 방법으로 시민사회 대표의 위원회 참여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년 10차 위원회에서도 협약의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당사국 간의 관계를 강화를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70개 기관이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Interest and engagement of CSOs in Convention statutory processes



자료: UNESCO(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18, p. 94

[그림 3-2] 협약 이행 절차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과정

- 2017년 개최된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참여의 도전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시민사회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당사국, 국가위원회, 사무국과 함께 협력 할 수 있는 미래 행동 계획의 기초를 제공 할 수 있는 13가지 권고안이 제시된 바 있음

〈표 3-4〉 시민사회의 미래행동계획을 위한 13가지 권고사항

- ① 당사자, 사무국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협약과 관련하여 교육하는 글로벌 캠페인
- ② 협약에 대한 정치적 헌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문화정책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INCP) 재확립
- ③ 이사회의 업무에 시민사회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 ④ 정부 기관에 시민사회의 기여를 강화
- ⑤ 협약 이행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기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
- ⑥ 시민사회기관과의 정책 연구, 자료 수집 및 공유에서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⑦ 협약을 위한 유네스코 섹터와 유엔기구 내의 조정 강화
- ⑧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의 기술 개발 지원
- ⑨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회의 및 활동 계획
- ⑩ 지역 콘텐츠 제작의 다양성 지원
- ⑪ 개발 전략에서 문화증진을 위한 지식과 계획 조치
- ⑫ 표현의 예술적 자유를 증진하고 모니터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 ⑬ 사전 검열 기관 폐지

## 2. 문화상품서비스의 균형적 이동과 문화교류

### 가.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의 이동성

- 보고서는 예술가와 문화분야 전문가들의 이동성이 여러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아이디어, 가치, 세계관의 유지는 물론 활기찬 문화/창의 산업 증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 및 문화분야 전문가들의 국제적 활동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시청각분야 활동 증가, 양자 간 혹은 지역 무역 협약 체결과정에서 문화분야 관련 조항이 과거에 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주요한 성과로 분석하고 있음
- 하지만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나 문화분야 전문가들의 경우 비자면제 조건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75개에 그치는데 비해 선진국 출신의 예술가나 문화분야 전문가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의 수는 두 배를 넘는 156개국이라는 점 이동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보고서는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입국 보안절차나 복잡한 비자신청 절차와 높은 비자신청요금, 까다로운 취업허가 절차, 개도국 예술가와 문화분야 전문가를 위한 부족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이동성 증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함
-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개도국 예술가와 문화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우대조치의 마련과 이행, 비자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청요금 인하, 개도국 예술가와 문화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및 개도국 간의 협력 기회 제공, 이들을 위한 적절한 정보, 재정지원, 인프라 제공 등을 언급하고 있음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can be accessed visa-free by passport-holders from the global South has also increased

남반구 출신(개발도상국) 비자면제 조건  
입국 국가 수의 증가

70  
countries  
in 2015



75  
countries  
in 2017

But, remains lower than for passport-holders from the global North

그러나, 북반구 출신(선진국) 비자 면제  
국가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

156  
countries  
in 2017



Artists from the global South are also only eligible for

18%

of available mobility funding from the global North



남반구 출신 예술가는 북반구 출신 이동성 기금의 18%만 해당됨

자료: UNESCO(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18, p. 108

[그림 3-3] 남·북 예술가의 이동성 불균형

### Mobility funding programmes by region, 2017

지역별 이동성 기금 프로그램(2017)

| Origin of funding<br>기금 출처                        | Total number of<br>funding sources listed<br>기금 리스트 수 | % Share<br>비율 |
|---|---|---------------|
| Africa (아프리카)                                     | 27  | 2%            |
| Arab States (아랍국가)                                | 48  | 4%            |
|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지역)                 | 36  | 3%            |
| Europe and North America (유럽과 북미)                 | 1 044   | 88%           |
| International (국제)                                | 8   | 1%            |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 25  | 2%            |
| Total   | 1 18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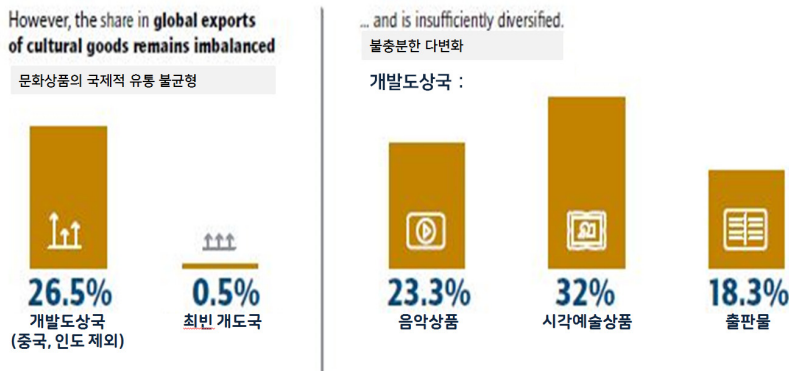
Source: On the Move Online Guides/BOP Consulting (2017).

자료: UNESCO(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18, p. 116

[그림 3-4] 지역별 이동성 기금 프로그램(2017)

## 나.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공정한 흐름

- 보고서는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에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2005년 25%에서 2014년 45%로 확대됨)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그 비중이 26.5%로 크게 떨어지고 최빈국의 경우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힘
- 보고서는 이 같은 불균형의 이유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무역장벽, 특별우대조치의 미비, 제한된 인력과 재원을 꼽았음



자료: UNESCO(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18, p. 126

[그림 3-5]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유통 불균형

- 보고서는 시청각 분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교류 네트워크 및 수출 전략 등이 개발도상국들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 분야 국제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고 분석했음
- 또한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쿼타 시스템은 시청각분야 생산 활동은 물론 해외 진출 확대에게 기여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보고서는 또한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보다 균형적인 교역을 위해서는 교역 역량 및 관련 인프라의 강화, 문화상품의 수출 다

변화를 위한 문화/창의 분야 투자, 문화상품의 신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관세 인하, 문화분야 교역 관련 사업 및 활동에 대한 ODA 증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데이터 수집 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증거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무협 협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분야 교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이 필수적임을 지적함

○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에 관한 담론은 우리에게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국내에서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가 일부에 의해 독점되기 보다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 유통 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문화분야 개도국 지원 및 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서 협약의 목표와 궤를 같이하려는 노력 모두 필요한데, 이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 다. 조약과 협정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은 다른 국제 조약과 협정에 영향을 미쳤고, 무역협정에서 특정 문화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외하기 위해 ‘문화적 예외’방법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체결된 최소 8개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에서 2005년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언급하거나 이의 이행을 다짐하는 문구를 포함한 사례,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 방송 및 시청각 분야에 대한 특별우대 증진에 대한 조항을 담은 사례, 유럽연합 및 다른 지역 기구들이 문화 및 창의산업 분야(특히,



시청각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2005년 협약의 원칙을 포함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국제 협약/조약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됨

-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특별히 시청각 분야)하고 있으며 특별우대 조치 노력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무역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2015-2017년 기간 중 체결된 8개의 협정 중 3개(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한-중국 자유무역협정)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이고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바, 이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됨

### 3. 지속가능한 개발체제로의 문화통합

#### 가. 문화다양성 기금의 확보 및 활용 방안

- **문화다양성 기금의 설립과 운영:** 협약 제18조에 명시되어있으며, 제1차 당사국 총회(2007년 6월)과 제1차 정부간회의(2007년 12월)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음. 제1차 당사국 총회는 문화다양성기금 설립을 찬성하면서 동 기금이 협약의 목표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이후 제1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이 유네스코 정규예산 분담금의 최소 1%를 자발적으로 기여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자는 인도 대표의 제안이 받아들여 협약 운영지침에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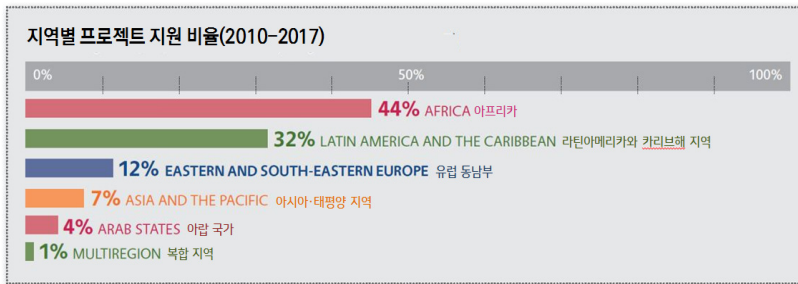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기금 목적:** 수차례의 정부간위원회 및 당사국 총회를 통해 문화다양성기금의 모금과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동 기금의 목적은 “로컬 및 지역차원의 문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문화 상품, 서비스 및 활동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관련 창작, 생산, 보급 및 접근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전략의 마련/도입 같이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기금모금 전략운영:** 1단계(2013.1-2014.6)에는 기존 당사국 지원 확장, 2단계(2014.7-2016.6)에는 외부 기부자 모집, 3단계(2016.7- 2017.7)에는 주요 미디어그룹으로부터의 지원, 민간부문과의 장기 브랜드 파트너십 구축, 협약가입국의 절반이상으로부터의 지원, 6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달성
- **개발도상국 지원:** 제2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동 기금이 개발도상국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경제 및 정치적인 조건과 함께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기금이 실제 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금 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강조한 바 있음
- **문화다양성기금 모금 방안:** 정부간위원회는 기금 모금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논의를 한 바 있는데 핵심 쟁점사항으로는 효과적 모금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당사국만을 대상으로 모금할 것이 아니라 대형 기업 등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지만 이후 이 논의가 더 구체화되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음
- **문화다양성기금 규모:**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910만 달러를 모금했고 지금까지 51개 개도국 90개의 사업에 총 630만 달러를 지원해왔음. 기금의 효과적 운영과 관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를 포함 현재까지 한 번도 IFCD 기금 공

여를 하지 않은 82개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IFCD 자원 활용현황(2017.1.1-6.30): 총수입 1,281,836 달러(가입국들로부터의 자발적 기여금)/ 총지출 1,428,382 달러(전문가 위원회 평가비용, IFCD 운영비, 개발도상국 전문가 참가비 지원, 프로젝트 비용, 기금모금과 커뮤니케이션전략 실행비용, 외부감사 평가 비용 등)

## The IFCD in numbers

문화다양성 기금



자료: UNESCO(2017),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p. 9

[그림 3-6] 문화다양성 기금 지역별 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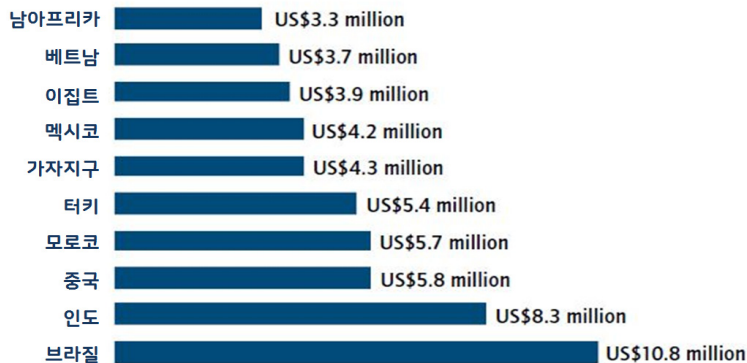
- IFCD는 2005 협약 아래 이루어지는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사무국은 모든 협약 당사국들이 여기에 기여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음. 사무국의 요청은 유네스코 공여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매년 기여하며, 가능하면 그 금액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음
- 아태지역 공여: 아태지역에서는 호주, 캄보디아,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공여를 한 바 있으며, 이웃나라인 중국은 2010년부터 공여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47만불을 공여함 (2010년 2만불 공여로 시작해 현재는 1회 공여시 8만불 정도 공여하고 있음)

## 나.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문화협력 지원

- 개발도상국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12년 12월 10일 개최된 제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개회 연설을 하면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문화협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
- 아프리카 지원: 당시 보고카 총장은 우선적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36개 개도국에서 문화정책과 문화 산업 증진을 위한 48개의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세계에 도래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문화의 이해와 사회 결합을 통해 이겨내서 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언급하여 문화협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Top ten recipients of cultural ODA in 2015

2015 문화 ODA 원조 수여국 상위 10위



자료: UNESCO(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18, p. 171

[그림 3-7] 2015 문화 ODA 원조 수여국 상위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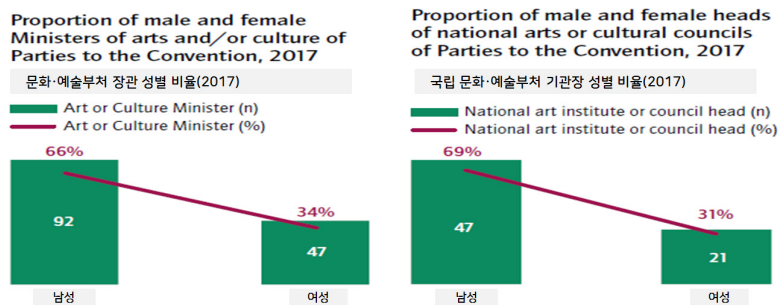
- SDG와 연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협력 지원은 2015년 발표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30과 연계되어 있음. 즉, 개발도상국에 혹은 저개발국에 대한 협력 지원으로 문화산업을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파를 도모한다는 전략임

- 개발도상국 재원: 저개발국을 위한 문화협력 지원은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재원으로 함. IFCD는 유네스코 재정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탁기금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음
  - 당사국의 자발적인 기부금
  -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 동 목적에 적합한 기금
  - 국가, 유엔 산하 기구의 프로그램, 지역, 또는 국제기구, 공공 또는 민간기구, 개인들에 의한 기여, 증여 및 유산
  - 국가, 유엔 산하 기구의 프로그램, 지역 또는 국제기구, 공공 또는 민간기구, 개인들에 의한 기여, 증여 및 유산
  - 기금의 재원에 의한 이자수익
  - 기금모금 목적으로 행해진 행사를 통한 기부금 및 수령품 기부
  - 기금 규정에 따른 재원
- 기금의 운영: 기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은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의 필수 요건으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문화협력 지원 성공의 핵심 요소임
- 기금 공여의 평가: 기금에 대한 당사국의 지나친 관심과 강조가 문화다양성 논의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예컨대 한 당사국이 제공하는 기여금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가 적정한가, 기금에 대한 기여가 많으면 발언권이 함께 높아지는 것인가 등 기금 공여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한다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의미가 퇴색하고, 사업 결정이 위축될 수도 있음
- 기금 지원의 목적: 유네스코는 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의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창의적 산업의 발전시키고, 나아가 고용창출과 빈곤 감축을 도모하고 나아가 개인과 기관의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잠재능력에 대한 투자를 높이며, 도시차원에서 창조도시의 모델을 지원하는 등 동태적인 문화적, 창조적 산업과 시장의 출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되고 있음

## 4. 인권과 기본적 자유증진

### 가. 성평등

- 국가보고서는 성평등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음
  - 협약 자체가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며,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및 예술가로서의 여성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임
- 국가보고서는 전세계 대부분의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차(gender gap)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음
  - 문화 분야의 노동시장, 특히 중요한 창의적 역할 혹은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서 여성은 그 대표성이 현저히 낮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훨씬 적은 보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Source: BOP Consulting (2017).

자료: UNESCO(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18, p. 202

[그림 3-8] 문화분야 대표직군 성별 비율

- 보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표현의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적 표현의 생산자들 사이에서,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문화적 삶에의 접근과 참여 면에서의 성평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서는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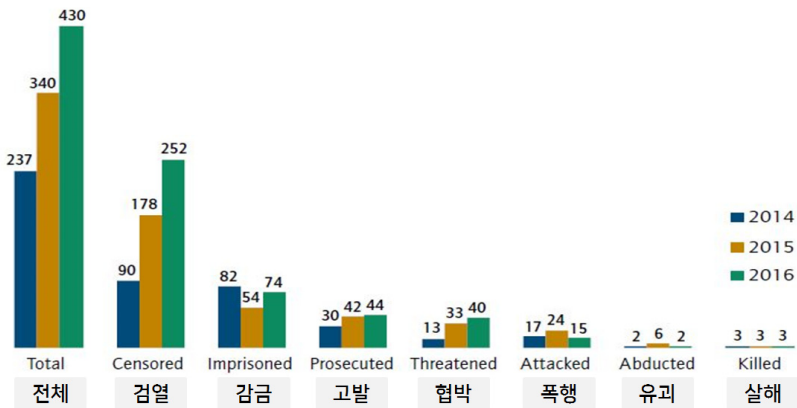
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다양성협약 이행은 불가하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은 물론, 모든 문화 정책과 조치에 젠더 감수성이 있는 관점을 통합해야하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한, 성을 기준으로 분화된, 국가적/국제적 수준의 데이터가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보고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명확히 내리고,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계획을 좀 더 현명하게 하고, 이 주제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여성이 모든 문화적 삶의 영역에서 창조자, 생산자, 시민, 그리고 소비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임

#### 나. 예술적 자유

- 자유는 예술적 표현과 창의력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시하고, 이것은 2013년 3월 UN 인권이사회에서 출판한 UN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서의 주요 주제임을 밝힘
- 예술적 자유는 예술가의 존재나 창작 활동에만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든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에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예술적 자유는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 모두로부터 예술가들이 받은 위협은 2014/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 그러나 예술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예술적 자유가 중요하다는 데 대한 이해는 많이 진척된 것으로 보임

예술표현 침해(2014-2016)



Source: Freemuse (2014-2016).

자료: UNESCO(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18, p. 212

[그림 3-9] 예술표현 침해(2014-2016)

-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근본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입법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음. 특히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수준의 입법에 예술가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들이 많이 취해졌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동시에, 법은 테러리즘과 국가 안보, 기아, 종교, ‘전통적인 가치’ 등을 다루면서 예술적 자유를 포함한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음
- 예술적 자유에 대한 모니터링과 권리 옹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와 함께 여기에 관여하는 기관의 수와 역량 또한 늘어났음
  - 한편 도시들은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귀중한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있기도 하는데, 시설이 전 세계에 걸쳐 80여개로 늘어난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음



제4장 ●●

## 주요 위원국 정책 현황분석





## 제1절

## 주요 위원국 국가보고서 정책 사례분석

## 1. 당사국 제출 국가보고서 구성개요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9조(정보공유와 투명성)에 따라 4년간 국내 협약 이행 및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 제시를 담은 보고서 작성 제출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함
- 유네스코 협약 국가보고서는 본보고서와 부록으로 이루어졌음
  - 본보고서는 기본적으로 4년간 문화다양성 정책 수행의 기록이며, 부록은 관련 통계, 자료, 인력에 대한 명시로 이루어졌음
- 국가보고서의 구성은 당사국별 목차 및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음
  - 본보고서는 일반현황 및 요약, 문화예술정책, 국제협력 정책, 지속가능 발전에서 문화의 도입, 위기에 처한 문화적 표현 보호 등 정책추진사례, 민간과 시민의 참여, 그리고 향후 계획과 도전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4-1〉 국가보고서의 구성내용

|   |
|---|
| 국가보고서의 요약 (Summary)   |
| 제1장 문화정책 (Cultural Policies)  |
| 제2장 국제문화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
| 제3장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Preferential Treatment)                               |
| 제4장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서의 문화적 통합   |
| - 국내 차원 (National level)  |
| - 국제 차원 (International level)   |
| 제5장 결의안 5CP 9b에 대한 조치(Emerging Transversal Issues : Resolution 5,CP 9b) |
| 제6장 성 평등 (Gender Equality)  |
| 제7장 청소년 (Youth)   |
| 제8장 시민사회 (Civil Society)  |
| 제9장 성과와 도전과제 (Achievements and Challenges)                              |

## 2. 서구 주요위원회 정책추진사례

### 가. 독일

#### □ 상호문화(Interkultur) 프로그램: 이주민과 사회통합정책

-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과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예술혁신 기금”, 작센주 “첫 상호문화 바로미터”, 마부르크시 “고향의 소리”, 독일 음악위원회 정보센터 “음악이 고향을 만든다”등과 같은 사업이 운영됨
-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그런 가운데서 문화적인 공통점을 찾아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호간 문화적 다양성을 넓히고자 함

#### □ ‘움직이는 MENA’: 예술가 이동성증진 기금

- 2012년부터 독일연방 외무부가 후원하고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가 시행하는 교류프로그램으로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예멘의 젊은 문화 예술 및 문화전문가들이 독일 내 문화행사, 축제 및 예술전시회에 초청되어 참여하도록 함
- 독일문화원은 현재 방문자 400명 이상에게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에게 여비제공, 수학여행 및 직업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체류를 유도하여 전문가와의 교류를 이끌고, 전문지식을 전수하고자 함

#### □ 예술가의 사회보험기금(Knstlersozialkasse: KSK)

- 독립예술인과 작가의 사회적 지위를 마련하고 예술 활동에 대한 물질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이들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법률제정 및 기금운영을 통해 사회안전망 성격으로 시행함
- 2016년 예술가 사회보험기금의 재원은 피보험자 예술인 50%, (국

가) 연방보조금 20%, 예술가 사회보험 30%로 구성되어 지급됨. 연방차원에서 예술인 활동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제도로 평가됨

#### □ 디지털환경의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법의 개정

- 독일 연방 주내에서 도서관법의 개정이 헤센 주, 쉬레스비히 홀슈타인주, 라인란트 팔츠 주에서 개정되었음
  - 독일디지털도서관 : 독일 내 문화와 지식정보를 위한 중앙 플랫폼
  - 바바리콘 : 바바리안의 문화 예술 포털로서, 다른 연방주에 아날로그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전송
  - E-book을 위한 도서관 연합 캠페인 : E-book활용 유도 캠페인
- 교육 및 문화 인프라로서 혁신적인 도서관 토대구축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정보자원유통에 어려움을 제거하고 독일로부터의 디지털 자료와 지식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세계 모든 이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발전에 초점을 맞춤

#### □ 조약과 협정의 시민참여활동

- 연방 경제에너지부가 임명한 환태평양 무역 투자 동반자(TTIP) 자문 위원회는 2014년 5월 31일에 설립되었고, 조합 대표들과 사회환경 소비자보호협회, 연방 문화미디어부가 여기에 관여함
- 이 기구는 진행 중인 협정에 대해 상의하고, 유럽연합과 미국 간 자유 무역 협정(2015년 12월에 8차례 회의)에서 대화(비평 포함)를 통해 독일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기여하였음

## 나. 캐나다

### □ 국가 간 이동성 프로그램: 해외 예술인 방문지원

- 캐나다 정부는 해외 예술인들의 본국 방문과 자국 예술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음
- 캐나다 예술위원회에서는 재정적 지원과 이동을 통해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정보를 구축했으며, 예술위는 해외에 예술인을 초청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들이 새로운 시장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연 방문하는 예술인들에게 취업비자 제공 및 세금공제 등 특별 감면제도를 시행함
  - 취업비자의 세금공제와 같은 비자 간소화제도는 남부개도국 예술인들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방해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음

### □ 조약 및 협정의 시민참여활동

- 캐나다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문화다양성 연맹회원들에게 유럽-캐나다 종합 경제 무역 협정(CETA)과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음
- 회원들은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개 협의에서 서면으로 논의하거나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의회위원회에 출두, 의견을 논의함
  - 그러나 그들은 협약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관련 장에 새롭게 캐나다 문화 면제 조항만을 적용시켰고 연맹은 CETA와 TPP의 원문이 공개된 후 매체를 비롯한 대중들과 분석 내용을 공유했음

### □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 캐나다 연방 정부는 문화다양성의 계획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온타리오 음악 기금, 크리에이티브 서스캐처 에이전시 설립 및 퀘벡의

2014 디지털 문화 계획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음

- 온타리오 음악 기금(OMF): 지역 내 음악 산업의 모든 부문을 지원하는 최초의 종합 비즈니스 개발로, 기금을 통해 음악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산업 무역기관들과 광범위한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짐
- 크리에이티브 서스캐처원: 2013년 7월 서스캐처 정부의 최고 기관으로 설립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산업 생산, 마케팅, 수출을 지원하고 창조산업 협회와 투자 및 파트너십 구축을 하였음
- 퀘벡 디지털 문화 계획: 퀘벡 문화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획은 2014년에 발표되었고 7년간 지속될 예정임. 퀘벡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를 디지털 기술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 예술인 지위에 대한 법률 제정

- 퀘벡 주와 노바스코샤 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예술 및 문화 부문과의 협의에 따라 예술가 지위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음
- 2012년 노바스코샤 정부는 2011년 문화 예술 5점 계획의 일환으로 예술가의 지위 향상관련 법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은 예술가의 역할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술가들의 작업 활동, 고용과 임금에 대해 규정, 예술가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규정, 예술 교육과 훈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나아가 노바스코샤 지역 경제를 위해 예술가들에게 보다 사회적으로 향상된 지위를 부여하고 공정한 대우를 강화하는 권리를 제공함

## 다. 오스트리아

### □ VoD 플랫폼 플리밋과 ORF 간 관민 파트너십

- 2014년 오스트리아 공영 방송국 ORF는 지역 VOD 플랫폼인 플리밋과 관민 파트너십을 운영하며, 다양한 시청각 콘텐츠를 주제별로 혼합해 주간 컬렉션으로 제시하고, 다른 국내 VOD 플랫폼과 협력
  - 국내 영화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영화 협회 및 ‘디아아고날(Diagonale)’ 오스트리아 영화제와 협력을 통해 같은 국내 시청각 부문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임
- 포탈은 ‘크리에이티브 유럽/미디어’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통·혁신·기술부와 ‘오스트리아 연구기관’ 같은 수많은 국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현재 플랫폼에는 대부분 오스트리아와 유럽에서 제작된 6,000편 영화와 어린이자료, 다큐멘터리, 오페라 작품을 제공
  - 주문형 비디오를 통한 영상 및 TV콘텐츠 모두 포함한 시청각 콘텐츠 보급전략을 개발하고, 콘텐츠의 온라인 제공의 다양화 및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통한 콘텐츠의 장기적 활용을 도모하며, 국내 및 유럽 시청각 콘텐츠 온라인의 신규 시청자 개발

### □ 여성 영화 제작자 육성지원책

- 오스트리아 영화산업에서 여성비율은 전체 영화감독과 작가의 25%로 확인되고, 영화 제작에서 여성비율은 더 낮게 조사되어 영화분야의 성별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 공공 영화 기금에 대한 성별 통계 작성, 영화 제작자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조사 실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예술 및 문화 이니셔티브의 기본 조건에 대한 기본 데이터 수집, 영화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세션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함



- 2015년 오스트리아 영화학교는 “ProPro-여성지원 제작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영화인 멘토링제도를 운영함
  - 제도의 목적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여성 영화인들이 신진 여성 영화인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멘토링 제도를 통해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을 전하며, 남성에 비해 활동이 드문 여성 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시킴

#### □ 조약 및 협정 -시민사회참여

- 오스트리아 문화다양성 워킹그룹(ARGE)은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50명으로 구성되어, 국내 협약과 관련하여 1년에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사회 대표자와 정부 당국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위한 포럼을 진행
- 오스트리아 문화다양성 위원회(내각 사무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진행한 워크숍 및 (비)공식적 회담 결과를 근거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문화적 및 경제적 이중 효과에 대한 협약의 원칙을 고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민사회 관계자와 회의를 함
- 유럽 독점규제법에 있는 소위 ‘원조국에 대한 유럽연합 경쟁법 적용 제외 규정’을 협의하거나 자유 무역 및 경제 동반자 협정을 협의함

#### □ “성장: 함께- 예술과 통합”(2016)

- 다양한 국가구성원들이 시각예술, 문학, 음악과 융합영역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며 상호교류 프로그램 진행함
  - 15개 프로젝트에 각 2만 유로를 지원하였음
- “kültür gemma!” 사업: 이주민 예술과 문화창작 지원, △매년 이주 예술가들에게 일년 장학금 지원, △ 매년 3개 이주민관련 예술 및 문화전문가 단체에 시상, △매년 전시 및 공연을 개최하도록 지원

## 라. 스웨덴

### □ 소수민족 언어 및 문화증진 정책

- 스웨덴은 “유대인”, “집시족”, “라프족”, “스웨덴 핀족”, “토르네달러족”을 소수민족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언어와 문화정체성을 보호, 증진하려는 정책을 시행함
- 스웨덴 예술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극장과 도서관의 운영, 문화축제의 제작, 콘서트와 전시, 문학 및 문화 정기 간행물의 출판 등을 장려하고 있음.
  - 특히 예술위원회가 소수자 그룹의 문화, 역사, 정체성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할당한 기금을 통해 소수언어의 문학 출판과 배포, 번역을 장려함

### □ 성소수자의 권리증진

- 스웨덴에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적 표현에 무관하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부터 있어왔고, 정부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LGBT)의 권리와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유지함
  - 2014년 1월 1일 LGBT 개인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는 안건이 채택되었음
- 정부는 모든 구성원에게 더 큰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여하도록 제공하는 기회를 장려하며, 표현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음

### □ 국제개발협력기구(Sida)

- 스웨덴 Sida는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스웨덴의 글로벌 개발 정책 구현에 기여함

- Sida를 통해 유네스코에 신탁기금을 전달하였고, 2014~2017년 4년 동안 거의 4억 SEK가 할당되며, 기금은 교육, 과학, 문화, 통신과 정보의 영역에 배정됨
- 2005년 협약의 제2.1조 및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기반으로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12개국이 지원됨
  - 프로그램의 수혜국들은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로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음

#### □ 영화계 50-50 성평등 정책

- 2013년 스웨덴 영화 협회(SFI)는 '2020년까지 50-50'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목표는 2015년에 이미 달성되었고 스웨덴은 정부의 영화 지원 부문에서 성 평등을 이룬 첫 번째 국가가 되었음
  -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남성과 여성 영화 제작자 사이에 평등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하고, 기금 지원 결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됨
- SFI는 영화 산업 내 구조와 시스템을 연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이행중이며, 스웨덴 영화와 TV 프로그램 편성에 백델 검정을 포함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함
- 영화 내 성별 편향을 강조하는 새로운 등급을 도입하는데 앞장섰고 성 평등을 장려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7월 SFI는 “2020 목표: 카메라 정면과 후면에서 진행되는 영화 제작의 성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실행 계획을 발표했음

## 마. 핀란드

### □ 북유럽 협력(Nordic co-operation)

- 노르딕 문화부장관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는 북유럽 국제문화협력의 중심 플랫폼으로(사무국, 코펜하겐 소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덴마크가 북유럽 상호문화기금을 구축했고, 문화기금은 스웨덴-핀란드문화센터(헬싱키)가 운영함
- 북유럽 문화부 장관들은 2012년 10월 노르딕문화협력 2013-2020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지속가능한’, ‘창의적’, ‘문화적’, ‘젊은’, ‘디지털’ 노르딕지역으로 5개 주제를 선택함
- 핀란드는 2016년 노르딕 문화부장관회의 의장이었으며, 유네스코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언론자유 날’ 기념세미나를 진행하며, 북유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표현자유 중요성을 확산시켰음

### □ 사미족(Sami) 문화지원- 위기에 처한 문화적 표현 보호방안

- 사미족의 권리는 핀란드 헌법에 그 지위가 보장되며 사미의회법에 규정되어 있음. 교육문화부는 이들 소수민족의 문화보호 및 독창적 표현을 발휘하는 기회 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함
- 2012년 사미 문화센터 사조스(Sajos)가 건립되어 원주민 스스로 언어, 문화, 생활양식,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사조스는 2007-2013년 동안 공공 ERDF 문화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로, 대표적인 다문화주의와 소수민족 보호정책임
- 사미족 언어와 문화보호를 위해 매년 국가예산으로부터 약 67만 유로가 지원되고, 사미예술단체는 별도의 국제 문화협력기금에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짐

## 바. 스위스

### □ 지역 크라우드펀딩 지원

- 2012년 스위스 바젤주의 문화부는 지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플랫폼은 많은 대중의 문화 접근과 참여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활동가에게 문화적 프로젝트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공기관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주 재정지원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지역 당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창의적인 문화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플랫폼은 3년 만에 10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 250건 이상에 도움을 주었음

### □ 헬베티아록(Helvetiarockt): Jazz, Pop, Rock분야 여성음악인의 지원

- 음반 업계에서는 여성의 참여율이 매우 낮고, 무대 위에 오르는 여성 비율은 5%미만이며, 음향 엔지니어링과 제조업의 분야에서도 열악하여 여성들이 무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회적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함
- 재즈, 팝, 락 분야에서 음악활동지원 및 특별 홍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여성의 음반시장과 미디어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했음
  - 앞선 음악가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교류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도록 함
- 2008년 처음 결성된 협회는 자체 자금 조달 및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후원 받고 있으며, 2011년부터 연방정부는 헬베티아록에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음. 2022년까지 170명의 회원확보 및 500명의 후속 세대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3. 기타 주요위원국 정책추진사례

#### 가. 중남미 지역권

- 아르헨티나, 멕시코 외: 이베로 아메리칸 프로그램을 통한 이동성 기회
  - 2006년에 제정된 중남미 문화 헌장의 전문에는 협약이 문화를 강화하고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도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남미 국가 단체의 회원국들은 특히 저작권 및 문화 산업 부문에서 국가와 지역 내 문화적 다양성을 조성하고 새로운 조정 공식을 장려하면서 문화적 협력과 통합을 추구함
  - 지역 통합을 통해 중남미 문화 공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남미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문화 분야에 역량이 있거나(SEGIB, OIS, CERLALC) 문화를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통합 프로젝트를 대표하는(UNASUR, MERCOSUR, CELAC) 몇 가지 제도적 구조를 이용해 IBER 프로그램 산하에서 문화적 협력 계획을 수행
  - IBER 프로그램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약 4,000만 유로가 동원되었고 공연 및 시청각 예술(이베레세나, 이베르미디어, 이베르아테스 비주얼레스), 음악(이베르 뮤지카스, 이베르 오케스타), 기업가정신 및 문화 진흥(예술가 및 문화 관리자 프로그램의 이동성, 문화적 계획을 위한 기업가정신 문화 등)뿐 아니라 문화 및 기록유산 분야의 활동도 취급하고 있음
  - 목적은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문화 산업과 창조 산업을 강화하고, 문화 부문에서 기업들이 협력하고 합작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교환을 활성화하고, 예술가와 그 작품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임
    - 2015년과 2016년 사이 음악가 78명에게, 개인의 역량을 가진 63명에게, 그리고 행사 및 회의를 위해 15명에게 교부금이 지급되고,

예술가와 문화 관리자 73명은 주최 기관을 통해 예술가 및 문화 관리자 프로그램의 이동성 혜택을 받았음

## 나. 아프리카 지역권

### □ 케냐: 이동성 우대조치

- 케냐는 중국, 가나, 인도, 대한민국,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에서 문화협력을 조성하고 예술가의 이동성 촉진을 위한 계약을 맺음
- 계약에는 공연 장비를 비롯해 케냐를 오가는 예술가의 이동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고 수입 영화 및 음악 제작 장비에 대한 세금이 인하가 되며, 계약 외에 다른 국가의 대사관들도 케냐인 예술가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게 추천장과 증명서를 제공, 지원하고 있음
  - 스위스 대사관과 스위스 협회는 스톡홀름의 문화 산업과 창조 산업에 참여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케냐인 예술가 12명을 후원했음
- 케냐 문화부는 외국 예술가들에게 비자와 특별 출입증을 얻고 장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 받도록 도움을 주고 케냐방문을 유도함
  - 혜택이 주어진 국가에는 브라질,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영국, 베네수엘라가 있음

### □ 세네갈: 아프리카 예술가의 자유와 지위

-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많은 새로운 규정과 법들이 아프리카에서 채택됨: 베냉(2011년), 마다가스카(2011년), 부르키나 파소(2013년), 모로코(2016), 말리(2016), 토고(2016), 코트디부아르(2017)등
- 관련법은 사회 보장, 고용, 자금 지원 및 세금, 지적 재산권, 관리 및 교육과 훈련 내용을 담음. 특히 예술가의 지위를 전문화하며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근로조건을 정하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원칙을

### 재확인함

- 스웨덴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자유(2015-2018)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첫 정기 국가보고서의 제출(2016년)이 이루어졌고, 이후 일련의 정책 검토 후속조치로 예술가의 지위법률이 구상되어 이루어짐
  - “문화활동가 상호의료보험”(2016)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술인과 가족들이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최근 채택된 ‘학술 정책 서신’은 향후 5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과 ‘문화적 다양성, 평화,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화합’을 만들기 위한 것임.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도적인 옹호 역할을 맡는 협의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음악 자유의 날”(2017년 3월 3일)의 행사참여가 운영됨

## 다. 아시아 지역권

### □ 인도네시아: 수출전략을 위한 창조경제위원회 설립

- 인도네시아에서 창조경제는 GDP의 7.1%를 기여했고 2014년 1,200만 명 노동력에 관련됨. 이는 빈곤 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창조경제위원회(Bekraf)는 2015년 설립되어 창조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을 조정하며,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며 수출전략을 자문함
  -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관 및 지역 전체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
- 2019년까지 문화 및 창조 산업이 GDP의 몫으로 12%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1,300만 명의 노동력에 해당하며 총 수출/외환



대비 10%에 기여함

- 위원회의 예산은 연구, 교육 및 개발, 자금 조달, 인프라 개발, 지적 재산권 촉진, 제도 및 지역관리 및 기타 기술 지원에 투여됨
  - 2016년 16개의 하위섹터 중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영화, 음악 등 3가지에 주력하며, 국내 산업화를 활성화시키고자 외국인 투자개방에 대한 향후 방안을 정부에 조언함

□ 베트남: 비전 2030, 2030년까지 영화산업 발전전략

-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베트남 영화 산업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영화산업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으로 혁신적 영화 제작, 생산, 배급, 전시, 인적 자원 개발, 기술 이전, 금융 투자, 국제 협력, 사회적 홍보활동 등 포함됨
- 이 전략은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관리, 인적 자원 훈련, 자원 동원, 사회적 인식 및 국제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발전의 핵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거 시설, 제작 기술, 불만족스러운 영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복제권 침해를 극복하고 충분한 지원과 개발 기회를 제공함
- 2020년까지 매년 40~45편의 장편 영화를 제작하며, 각 유형의 다큐멘터리, 과학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시 연간 36~48편의 영화가 제작되고, 영화 상영은 영화관에서 전체 영화 중 최소 35%를 차지하며, 베트남 영화 상영은 모든 배급 영화에서 베트남 영화 중 30~35%를 차지하도록 기획함
  - 現 영화 관객 수는 연간 9천5백만 명에 이르고, 스크린 수 550개, 현재 영화 제작 및 배급량이 영화관에서 전체 영화 중 18%에 불과함

- 2020년까지, 영화 수출은 매년 제작되는 총 영화 수의 20%에 이를 것이며, 외국 배우들과 공동 제작해서 매년 15%씩 증가할 것이고, 2030년까지 영화 수출은 매년 총 제작 영화 수의 30%에 도달하고, 외국 배우들과 공동 제작 영화들은 매년 25%를 증가시키도록 함
- 민관 동반자 관계의 추세가 양측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기업가적 기술을 갖춘 젊은 재능있는 영화 제작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베트남 해외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왔고, 베트남에서 열리는 영화 제작 및 전시회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협력이 증대됨.
- 디지털 배급 플랫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는 등 영화 산업의 디지털화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전략 활동은 영화의 생산과 소비로 패턴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제2절

## 국내 문화다양성 협약 협력현황

## 1. 한국의 협약이행성과 추진사례

-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4일 비준한 후, 2014년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행, 국가보고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연차보고서를 기반으로 국내 협약의 이행 및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 제시를 담은 내용을 정책 사례로 제출함
  - 1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에서 영역별 시행된 세부과제를 수집·정리 및 분석하여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형으로 정리함
  - 1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변화된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수용해 2014~2017년 4년간 추진된 과제를 수집 및 분석
- 국내 교류 지원 정책 및 사업,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ODA 등 주요 문화 ODA사업 현황 검토 및 성과를 기록함
  -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에서 개발도상국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초청 및 공동창작 활동 등 이동성 지원정책 및 교류 사업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음
- 유네스코는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작성 목록에도 ‘시민사회(Civil Society)’부분을 별도로 두고 시민사회가 직접 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 시민사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화다양성 확산 사례를 포함함

## 가. 문화정책

- 보고서에는 문화정책은 문화적 가치 사슬(창의-생산-배포/보급-참여/향유)의 단계에서 자국 영토 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채택한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의 국가보고서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표현을 증진한 사업 및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성과를 소개하였음

〈표 4-2〉 문화정책 항목 기입내용

|                      |                          |
|----------------------|--------------------------|
|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
| • 무지개다리 사업/ 세계다양성의 날 | • 문화 간 문제, 이주와 통합        |
| • 장애인을 위한 문화접근성 강화   | • 소외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
| • 미디어 다양성의 향상        | • 예술교육; 예술꽃씨앗학교, 국립국악원교육 |
| • 성평등 인식제고 및 확장      | • 노인의 문화적 표현의 기회 확대      |

## 나. 국제문화협력부문

- 본 항목은 국제교류를 촉진한 활동 및 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작 및 제작기반을 구축한 국제협력활동을 기입함
- 국가보고서에는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 아래 상호간의 문화교류와 국가 간 우호 증진 및 협력 기반을 조성한 활동을 기록함
  - 국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속성 있는 문화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음

〈표 4-3〉 국제문화협력부문 기입내용

|                  |                   |
|------------------|-------------------|
| •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지원 | •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
| •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지원 |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
| • 청소년 국제교류       | • 해외 전통문화예술단 사업   |

#### 다. 개발도상국 지원

- 개발도상국 지원은 ‘예술가와 문화전문가’ 및 ‘문화상품과 서비스’ 관련하여 남반구 지역에 대한 개인적, 제도적, 산업적 차원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언급함
- 국가보고서는 아시아 개도국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와 문화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음

〈표 4-4〉 개발도상국 지원 기입내용

|                       |                           |
|-----------------------|---------------------------|
| • 문화동반자 사업            | •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            |
| •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    | • 외교부 코이카 문화ODA 지원 사업     |
| • 협력국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 지원 | • KPC 개도국 초청 장애인 스포츠개발 캠프 |

#### 라.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국제적 차원

- 국제적 차원 개발정책은 개도국에서 인적, 제도적 기반의 강화, 문화(산업)분야의 기술 및 전문지식 이전, 문화부문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취해진 조치를 언급함
- 국가보고서는 아태지역의 국제개발 지원체계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간 쌍방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한 사업을 제공함

〈표 4-5〉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 국제적 차원 기입내용

|                      |                    |
|----------------------|--------------------|
| • 아태지역 세계유산보호 신탁기금사업 | • 아시아 예술계 인력양성     |
| • 유네스코 협력 ODA 사업     | • 한국-베트남 미술교류전     |
| • 세계 실크로드대학연맹 총회     | • 예술경영지원센터 세계예술인교류 |

## 마. 지속가능한 개발정책-국내적 차원

-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문화향유가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구성원 간 문화 차이 해소를 통해 국민의 문화권 증진에 기여하는 조치를 기입함
- 국가보고서는 사회적 약자 혹은 문화적 소외계층에게 국가적으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적 통합을 위해 채택한 정책사업을 기록함

〈표 4-6〉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 국내적 차원 기입내용

|                    |                     |
|--------------------|---------------------|
| • 통합문화이용권          | • 문화나눔사업            |
| • 전통문화 대표분야 육성지원사업 | • 디지털 지식정보격차 해소     |
| • 세계시민교육 확산사업      | • 다문화가족 이종언어 환경조성사업 |

## 바. 그 외 정책 사항

- 2015년 7월 제5차 정기회기 당사국 총회(결의안 5.CP 9b)의 자유로운 주제 선택에 대한 결정으로, 국가보고서는 미디어 다양성 주제로 제도적, 교육적 측면의 활동을 제시하였고, 성평등 주제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법정평가 및 정책을 선정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선정하여 기입하였음
- 그 외에도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는 제1차 정기보고서와 비교하여 시민사회의 역할 및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전국 권역별 문화정책(廳策)포럼 개최’, ‘귀어문화축제’, ‘베리어프리 축제’, ‘제주어 보존사업’, ‘올리볼리’ 등이 보고됨

## 2.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협력 지원

### 가. 신탁기금을 통한 문화사업 지원

-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고용창출과 빈곤 감축을 도모하고 개인과 기관의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잠재능력에 대한 투자를 높이며, 도시차원에서 창조도시모델을 지원하는 등 동태적인 문화적, 창조적 산업과 시장의 출현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문체부는 격년으로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라오스, 몽골, 르완다, 베트남, 우간다 및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에 지원을 제공함

〈표 4-7〉 문체부: 유네스코 신탁기금 연차별 지원현황

| 연도  | 사업명   | 예산     |
|-----|---|--------|
| '07 | 문화원형 디지털화(몽골), 전통공예산업 발전(베트남)                                   | 3억 원   |
| '09 | 공예발전(카자흐스탄), 전통수공예 보존발전(우즈베키스탄)                                 | 3억 원   |
| '11 | 공예산업 진흥(몽골, 베트남), 문화창의산업 기초체계연구 및 구축(라오스), 음악산업 진흥(아프리카 브르키나파소) | 5억 원   |
| '13 | 문화창의산업 진흥정책 및 전략개발(몽골, 베트남), 공예문화산업 발전지원(우간다)                   | 5억 원   |
| '15 | 문화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사업개발(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르완다)                            | 4.8억 원 |
| '17 | 문화·창의산업 역량강화 및 사업개발<br>(아태지역 문화다양성 전문가 역량강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4.8억 원 |

- 그러나, 문화다양성 기금(IFCD)은 지원한 실적이 없는 상황임

〈표 4-8〉 2018년 문화다양성 관련 대표사업

| 2018 사업명                         | 주요 내용  |
|----------------------------------|--|
| 2005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 아태지역 전문가 역량 강화 | · 워크숍 실시(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력, '18년 5월중, 서울)<br>· 비디오 튜토리얼 제작 |

| 2018 사업명                           | 주요 내용   |
|------------------------------------|---|
| 파키스탄 창의기업가 역량강화 및 문화창의산업 중요성 인식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매핑(법제도환경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등)</li> <li>· 젊은 창의기업가 역량강화(2005 협약 · 시장접근법 · 국제시장 환경 등에 관련한 워크숍)</li> </ul>  |
| 방글라데시 시각예술(사진)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평가(시각예술산업 환경 분석 및 액션플랜 연구 등)</li> <li>· 역량강화 훈련(마케팅 기법, 국제네트워킹 등 관련 워크숍)</li> <li>· 정책자문(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시민사회 참여 회의 등)</li> <li>· 인식제고 활동(사진 포럼, 마스터클래스 등 개최)</li> </ul> |

- 지난 10년간 본 협약이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식하게 하여 무역 틀과 협약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됨
  - 남반구 문화전문가 및 예술가들은 이동에 여전히 제약이 많으며, 남반구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 보다 개발 및 이행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문화 통합하는 국제프로그램 활동이 필요하며, 개도국 문화섹터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연대 촉진, 지속가능발전에의 문화통합에 관한 운영 지침 13조 검토 및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나타내는 정보 공유가 요구됨
- 아시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 수혜국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훈련 제공, 프로젝트 개발 관련 활동, 도구, 방안에 대한 지식 및 정보공유가 필요함

#### 나. 한국의 자발적 기여 개요

- 2018년 기준 한국은 8개 정부부처와 4개 기관 및 지자체가 37개 사업 대상 자발적 기여에 제공했으며, 2018년 자발적 기여 규모는 약 194억 원으로 추정, 의무 분담금 약 74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임
-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자발적 기여는 꾸준히 늘고 있음



〈표 4-9〉 2014-2018년 한국의 자발적 기여 추세

| 연도   | 자발적 기여        |
|------|---------------|
| 2014 | 10,684,723 달러 |
| 2015 | 9,462,644 달러  |
| 2016 | 11,984,897 달러 |
| 2017 | 14,379,671 달러 |
| 2018 | 약 194억원(추정)   |

※ 2014-17년 금액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문서 및 유네스코 연례 보고서에서 취함

※ 2018년 금액은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추정치임

〈표 4-10〉 2017년도 자발적 기여 순위

| 순위 | 국가              | 자발적 기여금 (단위: 천달러) |
|----|-----------------|-------------------|
| 1  | 이탈리아            | 28,055            |
| 2  | 스웨덴             | 24,997            |
| 3  | 유럽연합(EU)        | 21,553            |
| 4  | 브라질             | 20,606            |
| 5  | 노르웨이            | 17,854            |
| 6  | 대한민국            | 14,379            |
| 7  | 페루              | 9,919             |
| 8  | 스위스             | 8,201             |
| 9  | 캐나다             | 5,346             |
| 10 | 일본              | 5,232             |
| 11 | 중국              | 5,043             |
| 12 | 유엔개발계획(UNDP)    | 4,419             |
| 13 | 유엔아동기금(UNICEF)  | 4,028             |
| 14 | 국제원자력기구(IAEA)   | 4,016             |
| 15 | 독일              | 3,542             |
| 16 | 프랑스             | 3,167             |
| 17 | 인도              | 2,513             |
| 18 | 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   | 2,448             |
| 19 | 유엔에이즈계획(UNAIDS) | 2,424             |
| 20 | 핀란드             | 2,313             |

자료: UNESCO 2017년 연례 보고서

## □ 한국의 자발적 기여 내역

〈표 4-11〉 국내 공여 주체별 자발적 기여 규모

| 순위 | 정부 및 기관   | 사업수 | 기여액(달러)    |
|----|-----------|-----|------------|
| 1  | KOICA     | 8   | 26,450,000 |
| 2  | 교육부       | 7   | 22,500,000 |
| 3  | 외교부       | 4   | 10,086,624 |
| 4  | 국토교통부     | 1   | 3,130,000  |
| 5  | 문화재청      | 1   | 2,000,000  |
| 6  | 문화체육관광부   | 3   | 1,297,600  |
| 7  | 국가기록원     | 1   | 560,000    |
| 8  | 제주특별자치도   | 1   | 500,000    |
| 9  | 기획재정부     | 5   | 360,000    |
| 10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3   | 310,497    |
| 1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   | 140,000    |
| 12 | 환경부       | 1   | 126,440    |
| 합계 |           | 37  | 67,461,161 |

※ 기여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다년도 사업비 총액을 합산한 수치임

〈표 4-12〉 분야별 자발적 기여 규모

| 연번 | 분야   | 사업수 | 기여액(달러)    |
|----|------|-----|------------|
| 1  | 교육   | 20  | 50,080,458 |
| 2  | 문화   | 9   | 12,793,766 |
| 3  | 자연과학 | 8   | 4,516,937  |
| 합계 |      | 37  | 67,461,161 |

※ 기여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다년도 사업비 총액을 합산한 수치임

〈표 4-13〉 인력파견

| 연번 | 파견 부처/기관 | 파견직급 | 파견분야  |
|----|----------|------|-------|
| 1  | 교육부      | P-5  | 교육    |
| 2  |          | P-4  | 교육    |
| 3  |          | JPO  | 교육    |
| 4  |          | P-3  | 방콕사무소 |
| 5  | 기재부      | P-3  | 방콕사무소 |
| 6  | 문화부      | P-5  | 문화    |

| 연번  | 파견 부처/기관         | 파견직급 | 파견분야           |
|-----|------------------|------|----------------|
| 7   | 문화재청             | P-4  | 문화             |
| 8   | 국토부              | P-5  | 자연과학           |
| 9   | 국토부(K-Water)     | P-4  | 자연과학           |
| 9-1 |                  | P-4  | 자연과학           |
| 10  |                  | P-4  | 자연과학           |
| 11  | 해수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P-3  | 자연과학           |
| 12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P-3  | 자연과학           |
| 13  | 행안부(국가기록원)       | 미정   | 정보통신           |
| 합계  | 8                |      | 4개 분야/1개 지역사무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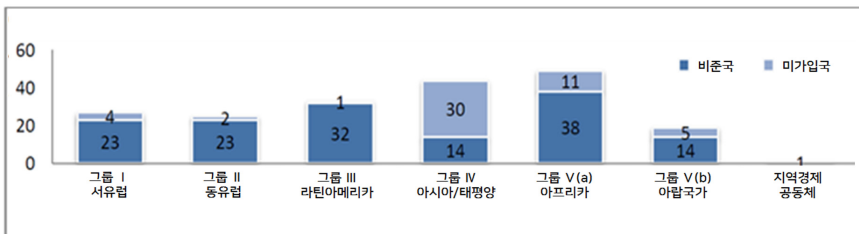
- 기관 간 중복이나 조정체계의 미흡 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적 검토와 조치가 필요한 때임
- 우리나라가 개발협력의 양적·질적 성장 기반을 견고히 하는 개발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된 예산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기금(IFCD)관련 제출이 전무한 바, 기금지원 전반에 관해 전문가나 관계자 의견교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의견을 집약하여 반영하는 장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3. 아태지역 위원국으로서 활동

- 아태지역(Group IV)은 한국과 중국이 위원국으로 입후보하였고, 무경합을 달성함. 2017년 6월 총회에서 위원국선출을 통해, 2005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함
- 한국은 4년 임기(2017~2021년)의 정부간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서 국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문화다양성 협약의 적용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비, △회원국의 보고서

검토, △문화다양성 협약의 목적 및 원칙 달성을 위한 절차 및 협의 메커니즘 발굴 등의 역할이 요구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문화다양성 협약자체에 대한 인식이 적은 바, 145개국 중 14개국만이 이 지역 출신임. 지역 중개자로서 문화다양성의 국제 규약화에 공감하고 보다 많은 국가들이 협약을 체결하게끔 유도하며 실제적 실천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아태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역 내 문화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문화정책에 관한 정보공유 및 협의를 통해 의사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요구됨
- 비준국(14):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사모아, 티모르  
 - 미가입국(30개국): 일본, 북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피지, 부탄,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미얀마, 싱가포르 등



[그림 4-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 및 미가입국

## 제3절

## 정책적 함의

-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과정에서 문화정책의 선진사례로서 의미
  - 서구 선진 국가들은 이미 문화다양성 협약 이전부터 지역 내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들로 발전시켜 문화정책 토대를 갖추었으며, 사례에 예시된 주요국들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협약 주도국가들임
  - 유럽은 국가단위보다는 지역협의체의 틀 안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문화산업의 지원을 제시한 경우가 많음
    - 문화산업 및 미디어정책은 단순한 경제산업적 가치를 넘어서 디지털 환경 하에 소통과 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예술정책”의 역할과 기능이 다수 국가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고, 문화예술가의 이동활성화가 정책중심에서 추진되고 있음
- 각국의 문화다양성 내용 및 견해 차이
  -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들은 대체적으로 유네스코가 규정한 기입항목에 대해 각국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개별국가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음
  - 문화다양성 협약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이 인권에 바탕을 둔 포괄적 근거임을 명시하고 있듯이, 문화다양성의 추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권리이나, 각 국가들의 다양성 정책방향 및 서로 다른 견해

가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제시되고 있음

- 국제 협력을 추진에서 민간인 차원, 특히 예술가 및 문화활동가의 이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행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음

#### □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선점

- 주요국의 국가보고서에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발의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앙기관 중심의 일방적 정책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관계를 강조하고자 정책설계부터 시민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협약이 요구됨
- 국제기구와 관련된 문화협력 지원사업에서 중앙부처 및 유관부서 간 협조를 바탕으로 일괄적이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다양한 국제기구사업에서 유사형태 및 중복지원사업의 시행을 예방하고 기관들 간 분절적이며 비효율적인 추진을 개선하여 정책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 관련하여 문화교류가 수혜와 공여차원의 문제로 단순화되고 있는 형태보다 문화다양성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문화협력적인 측면으로 보다 개선된 정책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국의 문화홍보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문화증진이 주요한 관계설정으로 제시되어할 것으로 보임

## 제5장 ●●

#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정책성과와 진단







## 제1절

## 설문조사

## 1.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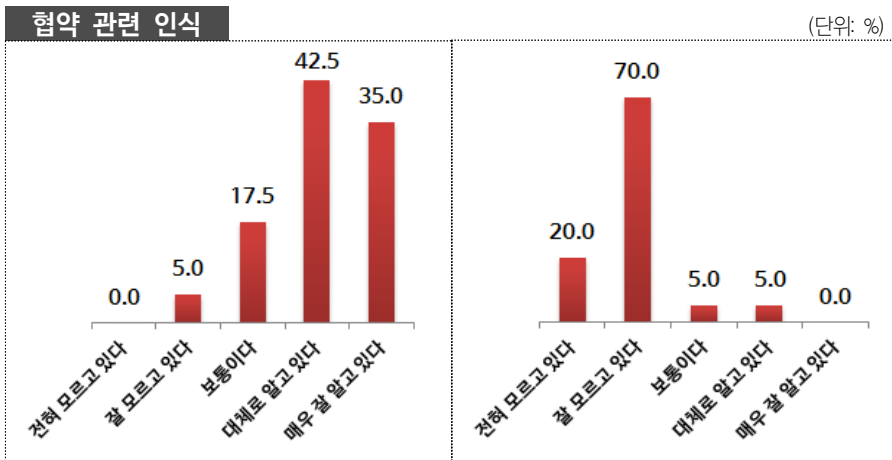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 협약관련 이행 및 교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전략을 수립하고자 문화정책 및 국제교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내용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목적,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 및 운영평가,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현황 및 개발전략, 문화다양성 위원국으로서 실행과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됨
- 인원은 전문가 40명, 기간은 2018년 7월 15일~7월 31일에 걸쳐 조사원의 직접방문 및 이메일 발송방식으로 진행됨
- 질문지는 23 문항, 총 6페이지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내용은 단일선택형 질문 및 복수응답 문항으로 이루어짐

〈표 5-1〉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설문조사 개요

| 항목  | 설문 내용   |
|-----|---|
| 목적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책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 대상  | 문화관광연구원(8), 유네스코한국위원회(7), 문화예술위(4), 대학교수(9), 국책기관 연구위원(2), 민간·시민단체(5), 문화재단·지역협의체(5)  |
| 기간  | 2018년 7월 15일~7월 31일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인식 (3문항)</li> <li>• 유네스코 협약 국내이행·운영 평가 (10문항)</li> <li>•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평가 및 추진방향(6문항)</li> <li>• 위원국으로서 역할·향후 정책 추진방향 (4문항)</li> </ul> |
| 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
| 응답자 | 40명   |

## 2. 설문 결과분석

### 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인식



[그림 5-1] 응답자의 협약 관련 내용 인식정도 [그림 5-2] 국민의 협약 관련 내용 인식 정도

□ 귀하께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2005)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정책 및 국제교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응답자들 중 상당수 (77.5%)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17.5%는 협약에 대해 보통으로 답했음
- 반면에 문화다양성 협약을 모른다는 의견은 5%에 불과해 설문응답자들은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해서 인지도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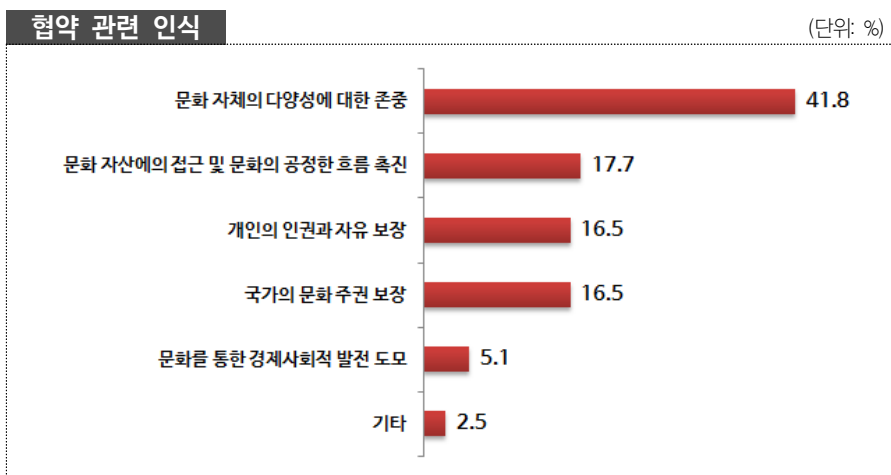
□ 한국 사회 속 일반 국민들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2005)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현재 국내 사회의 수용성을 진단

하고 그 위치를 확인한다는 질문으로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 90%는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대답하였음

- 이러한 응답은 문화다양성 협약과 국민 간 괴리가 있으며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이 매우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전문가들 중에 불과 5%만이 국민이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2005)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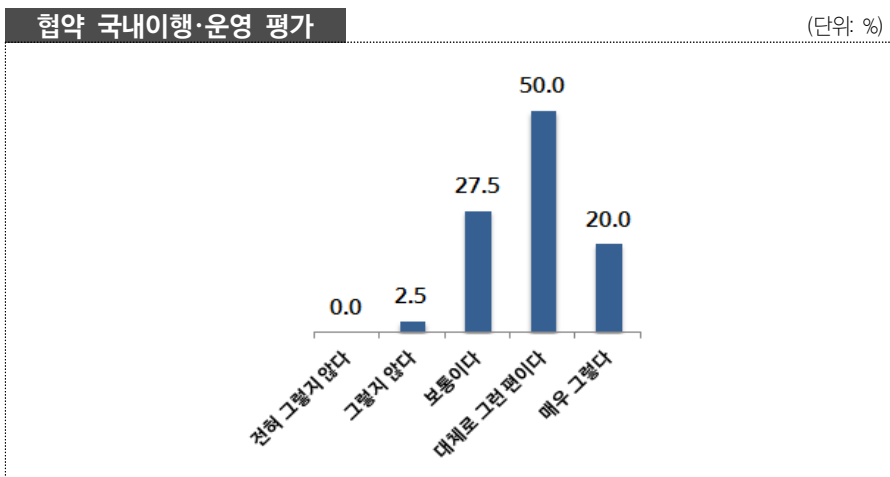
[그림 5-3] 협약 관련 핵심 내용

- 응답자 41.8%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핵심 내용으로 “문화 자체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선택했으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추진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문화 자산에의 접근 및 문화의 공정한 흐름 촉진”(17.7%)를 꼽았고, 응답자들 중 16.5%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 보장” 및 “국가의 문화 주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음

- 기타의견으로 “문화적 표현으로 포괄되는 '문화상품'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고 각국이 이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자주권 보장” 및 “국제 무역에서 문화산업의 예외성 보장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제논리로부터 각국의 고유한 문화 주권을 강조하는 의견을 추가하기도 했음

#### 나. 유네스코 협약 국내이행·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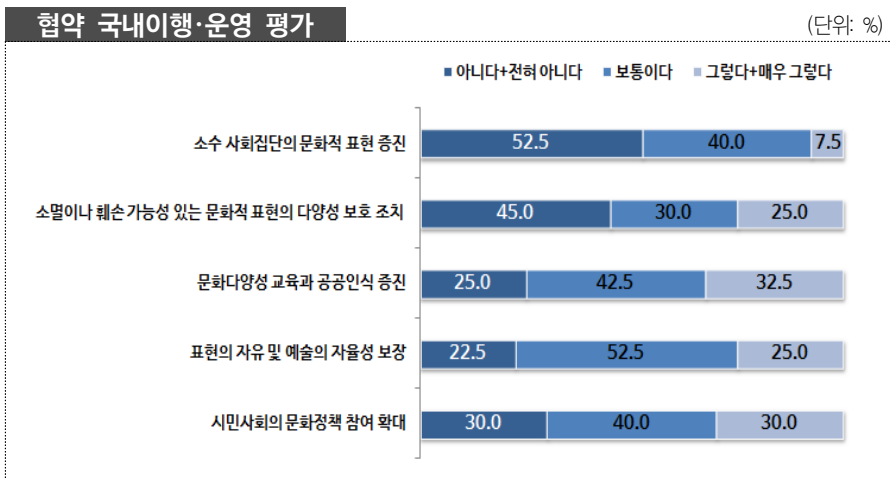
-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이 국내 문화정책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4] 협약의 국내 문화정책발전 기여 정도

-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내 문화정책발전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70%,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2.5%로 조사되었음. 아직까지 전 국민적으로 이해도가 확산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협약을 통해 국내 문화정책이 과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증진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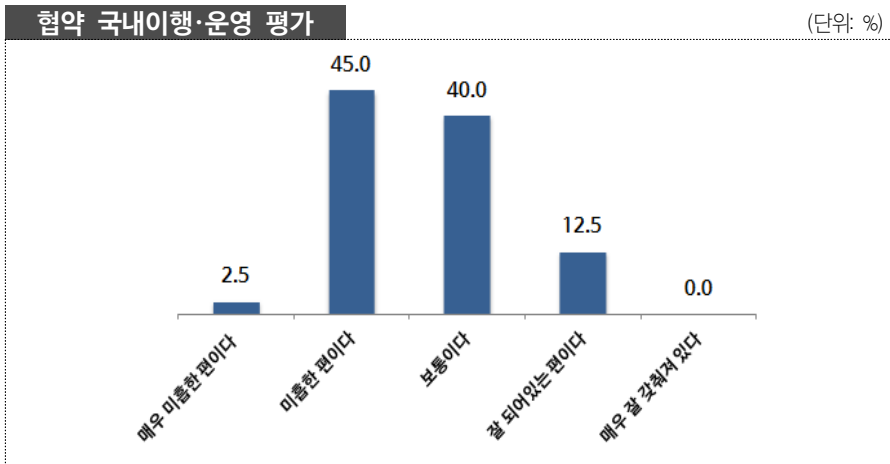
- 다음의 문화다양성 협약 내용들이 국내에서 충분히 잘 구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림 5-5] 협약 관련 내용 구현 정도

- 문화다양성 협약 내용이 국내 정책으로 구현 정도를 평가에 대하여 “소수 사회집단의 문화적 표현 증진” 물음은 52.5%가 부정적인 답변하였고, “소멸이나 훼손 가능성 있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4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
- 반면 “문화다양성 교육과 공공인식 증진”은 32.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율성 보장”은 25%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음. “시민사회의 문화정책 참여 확대” 물음은 전문가들은 긍정과 부정 모두 30%로 답변하여 시민의 참여 역할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함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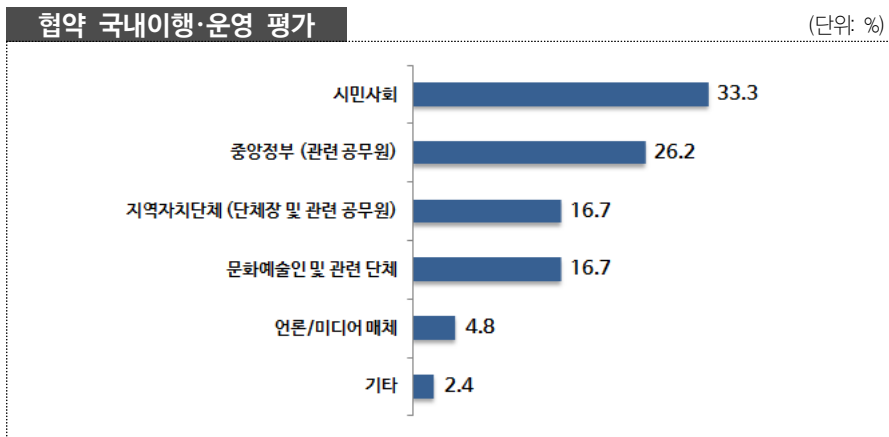
□ 귀하께서는 국내에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6]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마련 정도

-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47.5%로 답하였고, 반면에 12.5%만이 협약이행에 대한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문화다양성정책의 실효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할 기초적인 역량과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로, 내실 있는 기반이 보다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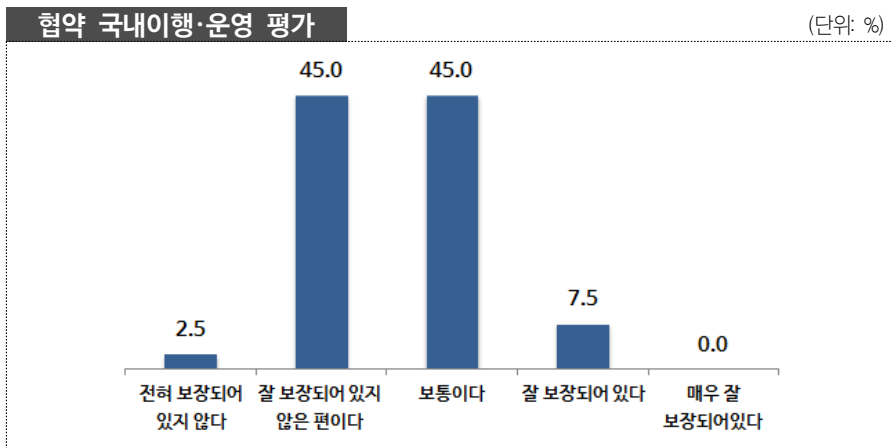
- 국내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하는 데 중요한 주체는 누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7] 협약 이행 시 주요 주체

-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 추진 시 중요한 주체에 대한 순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33.3%는 “시민사회”를 1순위로 지적  
- 결과는 문화다양성정책이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다음은 “중앙정부(관련 공무원)”으로 나타난 바, 문화다양성정책이 국가정책의제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이어서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와 “지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6.7%로 나타났음
- 그 외 언론/미디어매체가 4.8%를 차지했음. 기타의견으로 상위기관에서 정책적, 구조적 환경을 기반하고, 문화예술인들과 관련단체들이 상향식(bottom-up)으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함을 언급하기도 하였음

□ 귀하께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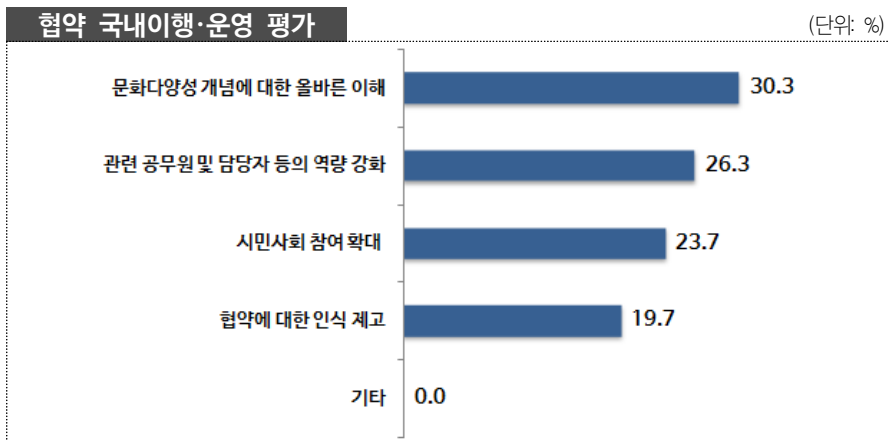


[그림 5-8] 협약 실천 시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보장 정도

- 응답자 중 47.5%가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선택하였으며, 반면에 잘 보장된다는 의견은 7.5%에 불과함
- 민간의 정책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40%이상 높은 수치를 선택함으로써 극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천에 있어서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책임감있게 참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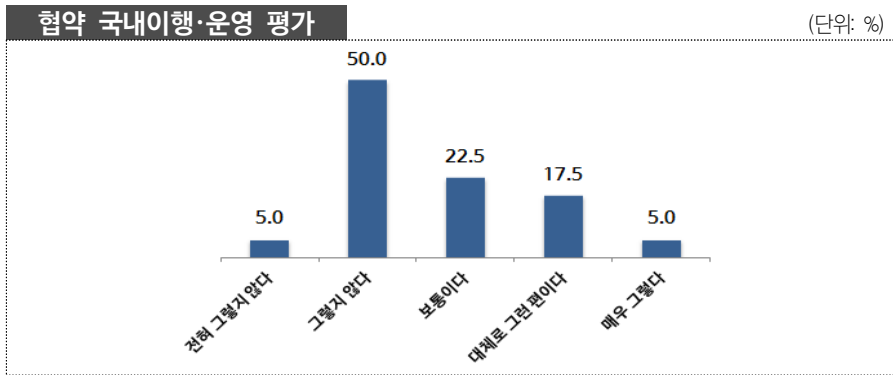


- 귀하께서는 국내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이행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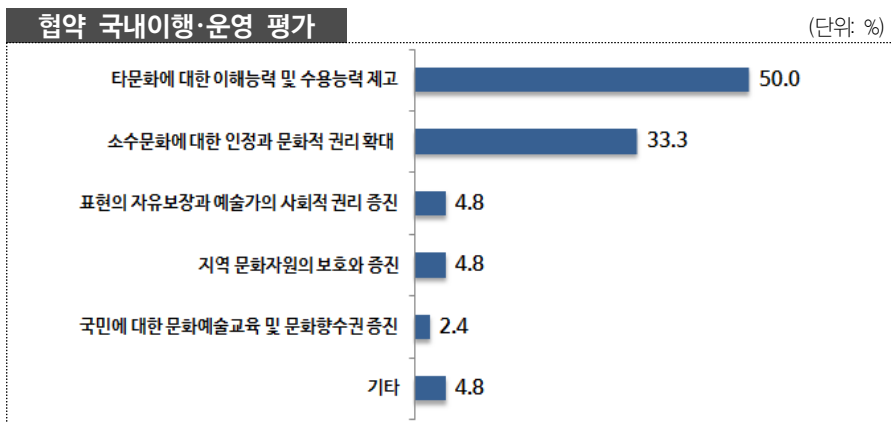
[그림 5-9] 협약 이행 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 전문가들은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를 묻는 사항으로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30.3%)를 답하였음
  - 이어서 “관련 공무원 및 담당자 등의 역량 강화”(26.3%)와 “시민사회 참여 확대”(23.7%)를 택했음
  - 또한 소수의견으로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라고 답한 이들은 19.7%였음.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인식문제, 담당자의 전문성, 시민사회 참여 문제점이 나타났음
- 현재의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이 기존의 다문화정책과 분명히 구분되는 정책으로 이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10]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기존 다문화정책과 구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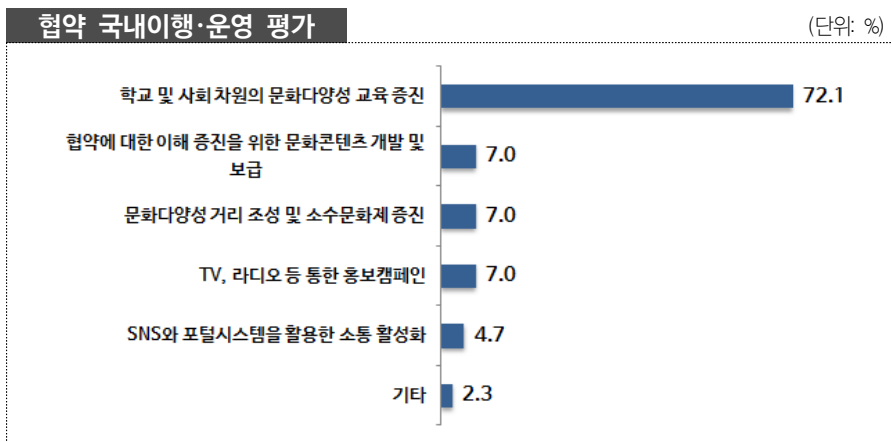
-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55%의 응답자가 기존 다문화 정책과 차이가 분명치 않다고 보았으며, 반면 정책적 차별성이 있다는 의견이 22.5%로 조사되었음
- 다문화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 간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문화다양성 개념의 인식확산 및 정책기획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음
-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이 앞으로 어떤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11]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목할 점

- 우리 정부의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이 앞으로 어떤 점에 더욱 주목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 중 50%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능력 및 수용능력 제고”에 가장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 뒤를 이어서 응답자 33.3%는 “소수문화에 대한 인정과 문화적 권리 확대”라는 항목을 선택하였고 “표현의 자유보장과 예술가의 사회적 권리 증진” 및 “지역 문화자원의 보호와 증진”이 필요하다고 각각 4.8%가 답했음
- 기타의견으로 획일적 가치관 탈피,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인정 및 수용을 언급하기도 했고, 국내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교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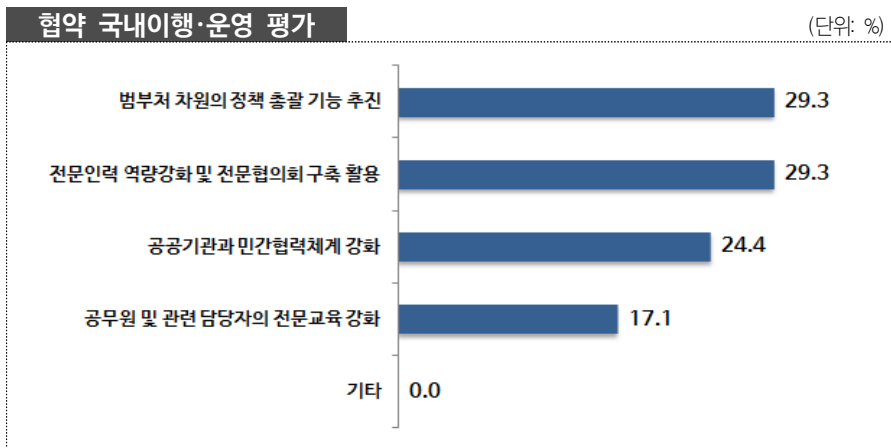
□ 국내에 문화다양성 협약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12] 협약의 가치 확산을 위해 주력해야 할 활동

- 응답자들 72.1%는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해 “학교 및 사회차원의 문화다양성 교육”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나타났음. 다음은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7%가 답했고, “문화다양성 거리 조성 및 소수문화제 증진”, 및 “TV, 라디오 등 통한 홍보캠페인”도 같은 인원이 선택했음.
- 반면에 “SNS와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소통 활성화”는 4.7%만이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선택하였음. 기타의견으로 문화다양성 침해에 대한 규제 관련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기도 하였음

-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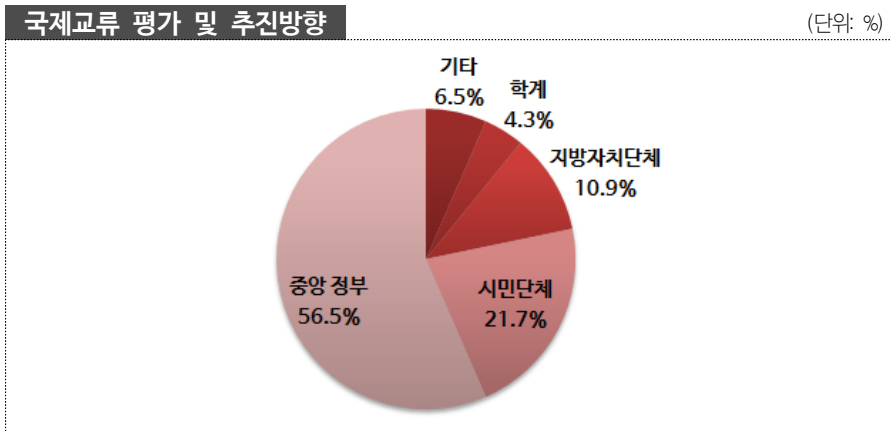


[그림 5-13]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관련 개선점

- 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해 개선해야할 사안으로 응답자 중 29.3%는 “범부처 차원의 정책 총괄 기능 추진”을 꼽았음. 그리고 같은 수의 응답자가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전문협의회 구축 활용”을 선택하였음
- 뒤를 이어 응답자들 24.4%가 “공공기관과 민간협력체계 강화”를 응답했고, 17.1%는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의 전문교육 강화”를 지적했음

## 다.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평가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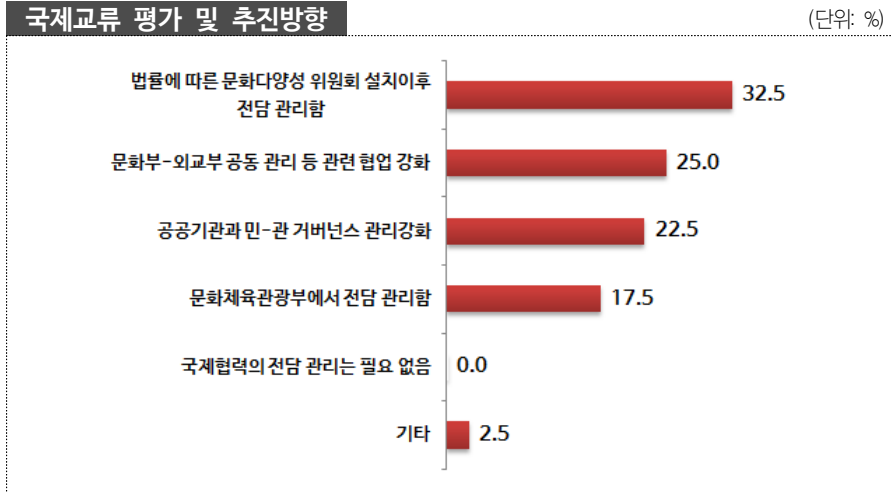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국제 활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14] 협약 관련 국제 활동 주체

- 협약 관련 국제 활동의 주체 역할에 대한 순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56.5%는 “중앙정부”를 1순위로 지적
  - 결과는 문화다양성정책이 국가정책의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를 21.7%가 선택했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를 10.9%가 택하여, 정책실효성에 있어 시민과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 “학계” 역할을 언급한 전문가들은 4.3%를 차지했음. 기타의 견으로 협약 관련 국제 활동의 층위는 다양하게 모든 이가 구성되어야 하며, 문화적 표현과 관련된 국제교류 활동의 주체를 단일화시킬 수 없음을 표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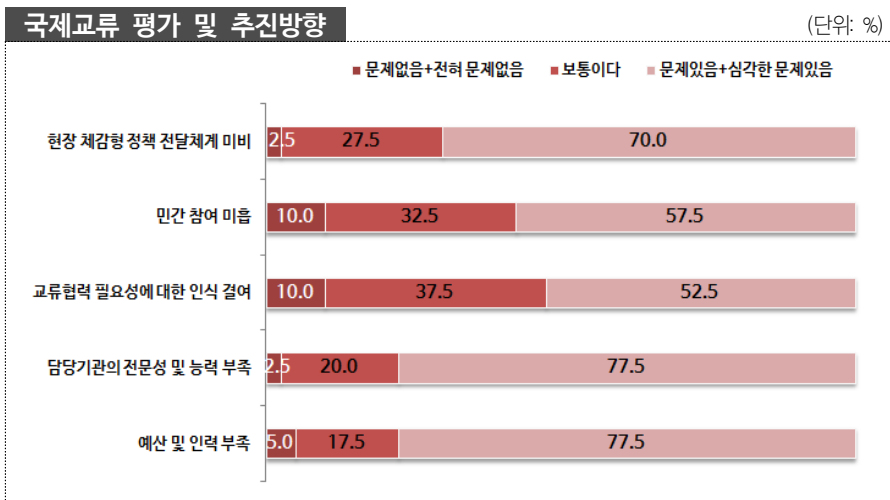
□ 국제교류사업의 관리 전담부서로 어떤 부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15] 국제교류사업 관리 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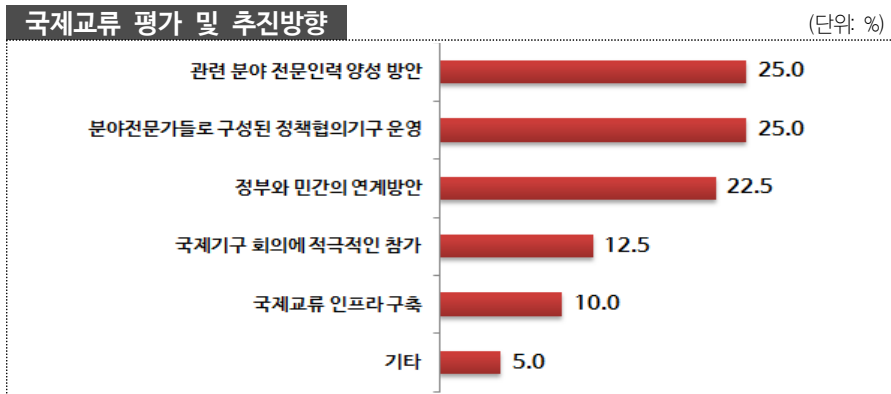
- 국제교류사업의 전담부서에 대한 물음에서 응답자들 중 32.5%가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이후 전담 관리”를 응답함  
- 결과는 다양한 부처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기에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냄
- 그 다음으로 정책의 추진체계에서 “문화부-외교부 공동 관리 등 관련 협업 강화”를 25%가 답했고, 그 뒤를 “공공기관과 민-관 거버넌스 관리강화”가 22.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담 관리함”이 추진체계에서 필요하다고 17.5%가 응답했음.
- 기타의견으로 정부부처 간 협의체 구성이 있었으며, 단일한 거버넌스 체계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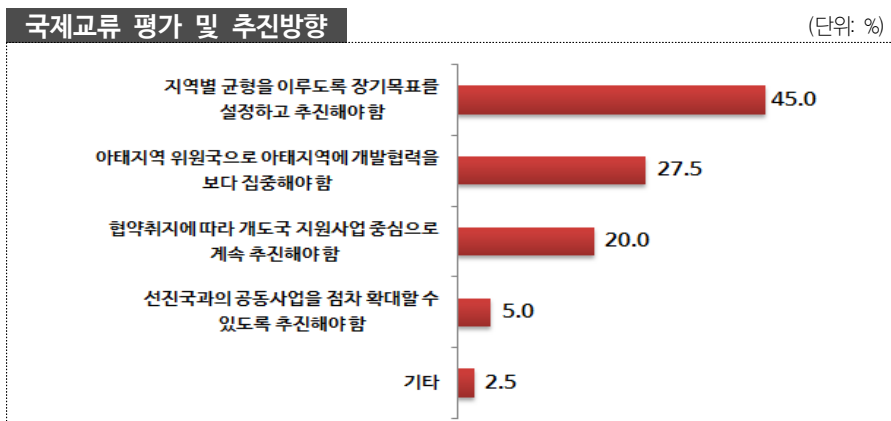
[그림 5-16] 국제교류 관련 애로사항

-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운 점에 대한 물음에서 “예산 및 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응답자 77.5%는 문제 있다고 보았고, “담당기관의 전문성 및 능력 부족”에 대한 항목도 77.5%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주었음
  - 그리고 “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항목에서 52.5%가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민간 참여 미흡” 질문에는 57.5%가 부정적인 견해를 선택했고, “현장 체감형 정책 전달체계 미비”에 있어서 70%가 문제 있다는 의견을 주었음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부문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17]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강조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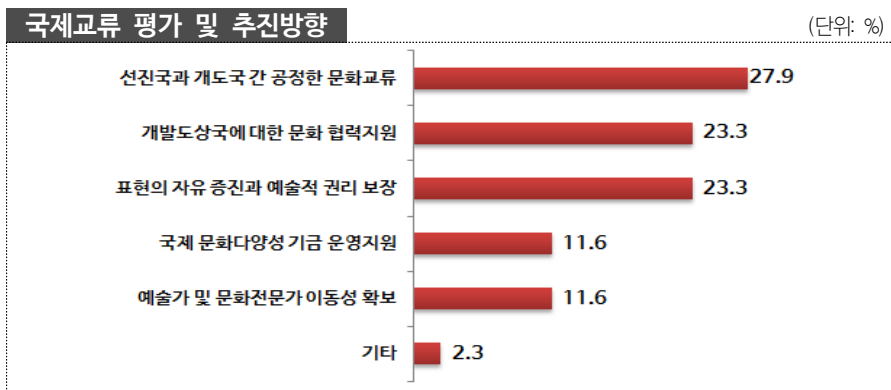
-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 어떤 부문이 강조돼야할 사안으로 응답자 중 25%는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꼽았고 같은 수의 응답자가 “분야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기구 운영”을 선택하였음
- 뒤를 이어 응답자들 22.5%가 “정부와 민간의 연계방안”을 응답했고, 12.5%는 “국제기구 회의에 적극적인 참가”를 지적했음. 그 외 의견으로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10%)에 관한 의견이 있었음
-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국제개발협력 대상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5-18] 협약 위원국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범위



- 응답자 45%는 국제개발협력 대상 범위로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함”을 지지하였으며, 응답자들 27.5%는 “아태지역 위원국으로 아태지역에 개발협력을 보다 집중해야 함”을 선택했음. 이어서 “협약취지에 따라 개도국 지원사업 중심으로 계속 추진해야 함”이 20% 응답률을 기록했음
- 반면에, “선진국과의 공동사업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이라는 의견이 응답자 중 5%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했음
- 문화다양성 협약에 부응하고자 국제협력 정책 수행에서 주력해야 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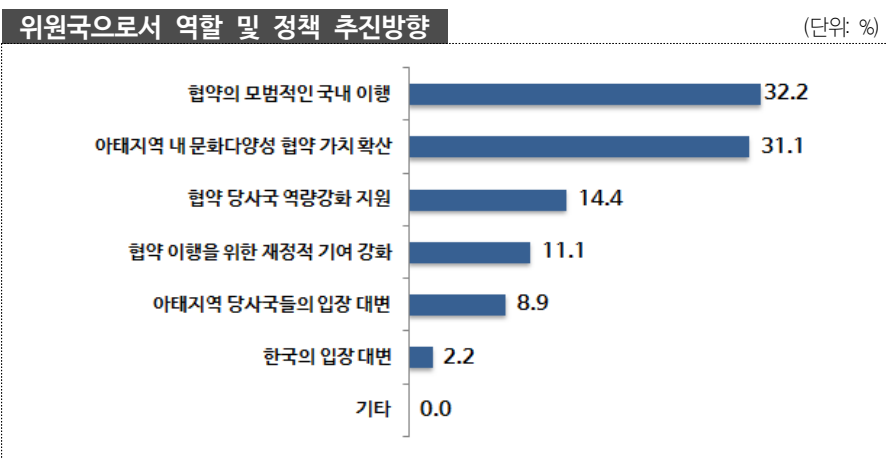


[그림 5-19] 국제협력 정책 수행 시 주력사항

- 문화다양성 국제협력에서 주력해야할 항목을 살펴보면, 1순위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정한 문화교류”를 27.9%가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 협력지원”과 “표현의 자유 증진과 예술적 권리 보장” 항목이 각각 23.3%씩 선택됐음
- 응답자들은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운영지원”과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 이동성 확보”가 각각 11.6%씩 답하여 그 중요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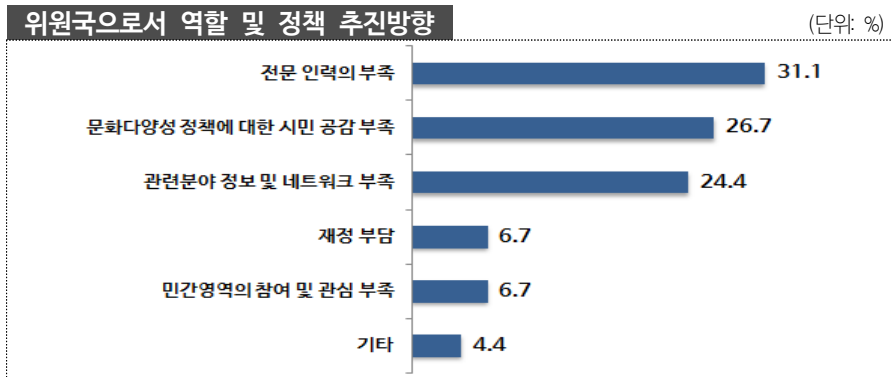
## 라. 위원국으로서 역할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2017)에서 한국이 아태지역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아태지역 위원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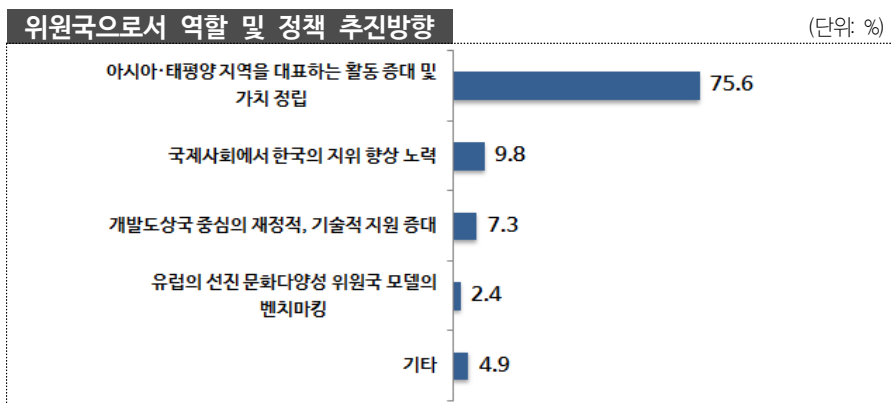
[그림 5-20] 위원국으로서 수행 역할

- 응답자들은 위원국으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에 대해 32.2%가 “협약의 모범적인 국내 이행”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뽑았으며, 다음은 “아태지역 내 문화다양성 협약 가치 확산”을 31.1%가 답했음
    - 그 다음으로 “협약 당사국 역량강화 지원”(14.4%)을 택했음
  - 반면에 “한국의 입장 대변”은 2.2%만이 지지하여 위원국 역할의 적절한 활동에서 매우 낮게 평가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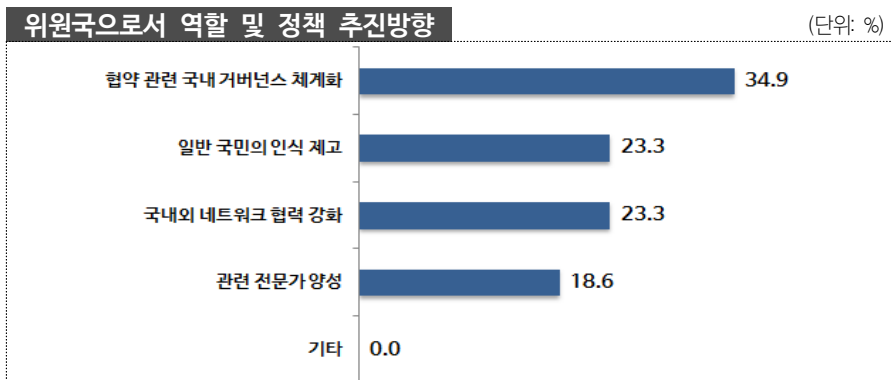
[그림 5-21] 위원국으로서 역할 수행 시 애로사항

- 응답자들 중 31.1%는 위원국 역할 수행의 어려움으로 “전문 인력의 부족”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고, 다음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 부족”(26.7%)이라고 보았음
- 또한 전문가들은 “관련분야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24.4%)이 문제점이라고 표명했고, “재정부담” 및 “민간영역의 참여 및 관심부족”을 역할수행 시 어려움이라고 각각 응답자의 6.7%씩 응답하였음
- 귀하께서는 한국이 아태지역 정부 간 위원국으로서 어떠한 정책 추진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그림 5-22] 위원국으로서 정책 추진 방향성

- 응답자들 75.6%는 위원국으로서 정책 추진 방향성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활동 증대 및 가치 정립”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 노력”을 9.8%가 답했고, 이어서 “개발도상국 중심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증대”(7.3%)를 택했음
  - 반면에 “유럽의 선진 문화다양성 위원국 모델의 벤치마킹” 항목은 2.4%로 적절한 활동으로 선택되지 못했음
  - 기타의견으로 아태지역 맥락에 맞는 문화다양성협약의 해석과 적용 노력이 필요하며, 위원국으로 아태지역 국가 중심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효과적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림 5-23] 위원국 활동을 위해 강화할 부분

- 응답자 34.9%는 위원국 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협약 관련 국내 거버넌스 체계화”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로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및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강화”가 23.3%로 그 뒤를 이었음. 다음 항목으로 응답자 18.6%가 “관련 전문가 양성”을 선택했는데, 이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2절

## 전문가 심층인터뷰

## 1. 전문가 자문개요

- 문화다양성 협약 협력사업 실태파악 및 향후 위원국으로서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그룹에는 학계에서 대학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련 공무원, 지자체 관련부서 담당자, 유관기관 연구위원, 문화정책 분야 문화기획가, 현장전문가 등 총10명으로 구성
- 7월15일~8월 15일 사이 전문가 면담 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활성화에 적합한 실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자문회의에서 문화다양성의 협력사업 운영현황,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평가, 국내 정책사업 이행의 진단, 아태지역 위원국으로서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방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음

〈표 5-2〉 전문가 자문조사 개요

| 항목  | 내용  |
|-----|---|
| 목적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협력사업 성과 및 위원국 역할 자문           |
| 대상  | 대학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책 연구원, 문화기획가, 공무원, 현장전문가 |
| 기간  | 2018년 7월 18일~8월 15일                         |
| 내용  | 문화다양성 국제 협약 이행평가 및 향후 위원국으로서 과제 추진 논의       |
| 방법  |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3차)                          |
| 참석자 | 10명   |

## 2. 전문가 주요 의견

- [성과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진출을 통한 사회적 관심 증가
  - 2017년 6월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 간위원회 선거를 통해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음
  - 2018년 6월 서울에서 아태지역 17개국 문화전문가 및 유네스코 수뇌부들 총 52명이 참가하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등 활발한 국제협력활동이 전개되었음
- [문제점①]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인식확산 부족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정책이해도 결여
  - 협약에 대한 국내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 전반적인 인식제고를 통한 국제기구 내 활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 특히 개도국 문화개발원조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중지를 모으는 작업이 요구되며, 협약의 핵심 메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함
  - 협약과 관련된 국제논의의 장에서 이제까지의 수동적이고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당사국 총회 전체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주요 의제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임
  - 의제 논의과정에서 국가적 이해와 맞물리는 부분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주요 사업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지며 아태지역 위원국으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성과②] 문화 분야 공적 국제개발협력 정책사업의 추진 성과확대

- 2018년 기준 한국은 8개 정부부처와 4개 기관 및 지자체가 37개 사업 대상 자발적 기여를 제공하며, 기여 규모는 약 194억 원으로 추정되고, 의무 분담금 약 74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임.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해 라오스, 몽골, 르완다, 베트남, 우간다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에 공적개발지원을 제공하여 왔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문화다양성 협약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고, 145개국 중 14개국만이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했기에, 한국은 이 지역 중개자로서 문화다양성의 국제 규약화 확산에 기여하고, 보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토록 유도하며 실제적 협약실현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문제점②] 공적개발원조 시 협소한 국익 개념보다 글로벌 사회적 자본구축 요구

- 그동안 공적개발원조가 개도국의 문화산업지원 및 성장기반조성에 주로 한정되었으며, 주요 동기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국가이기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보답해야한다는 식의 당위론적 호소를 내세워,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음
- 문화개발원조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는지 모르나, 국제적으로 어떤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지 명확치 않음
- 우리나라는 우리의 관심 의제에 함몰되거나 자국 홍보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공적기여의 규범을 정립하고 무상 및 비구속성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이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문화 개발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성과③] 유네스코 국제기구 및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다양한 사업의 확대

- 유네스코 관련 자발적 기여사업에 문체부, 교육부, 기재부, 문화재청,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인력을 파견하고, 13개 기관이 37개 사업에 관여하면서 한국의 국제기구 활동에 지분과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왔음. 또한 정부 주도의 성격을 벗어난 민간전문가들의 활동도 늘어나고 있기에, 유네스코 사무국 및 개도국 회원국들이 한국에 갖는 역할기대도 매우 높아진 것으로 관찰됨
- 2016년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자부 등 10여개 부처별 158개 사업추진 및 17개 지자체에서 1,613건의 다양한 문화다양성 관련사업이 국내에서 양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예산도 문체부 5,726억원, 기타중앙부처 1,027억원, 지자체 4,717억원으로 늘었음

□ [문제점③] 부처별 사업의 분절적 분산추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 독자적인 정책 영역확립에 집중하면서 타 기관·부처 등과 협력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쉽지 않았음. 상호연계성이나 통합적 효과를 추구하는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인 바, 정책 간 연계에 바탕을 둔 통합적 운영이 요구됨
- 유네스코 국제 활동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공유하는 가운데 공동의 전략적 접근차원에서 기관들 간의 역할 범위 조정과 총괄적이고 적절한 기능 배분을 위한 사업 협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어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국내 거버넌스 차원에서 유네스코 협약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긴밀한 연계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과④] 문화다양성 협약의 대응과 국내 정책기틀의 마련

- 기존 다문화정책의 추진 방향에 문화다양성 개념은 문화 간 권리 및 문화표현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적 방향을 새로이 정립함
- “문화다양성 법”(2014년 5월)제정, 지자체 문화다양성 조례 13개 제정 및 “문화다양성의 날” 5월21일 주간행사 등을 통해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이들의 문제들이 점차 공론화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가시켰음
- 무지개다리 사업의 경우 2013년 12만 명에서 2017년 23만 명으로 참여자 수가 증가했고, 성과평가(2016) 도입 이후 지속적인 질적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실행된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점수도 꾸준히 상승하여 문화다양성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려는 노력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었음

□ [문제점④]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 문제

- 국내 문화다양성 사업이 여전히 이주민에 편중되어 있고 소수자에 대한 지원이 주류사회로의 문화적응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들을 동등한 권리주체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문화권을 인정하고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정책이 요구됨
- 무지개 다리사업 등의 일정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성과를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관련된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법적, 제도적 체계 등을 통해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국내 정책이행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협약이행 관련 주요선진국의 모니터링 기법 및 모범사례 등에 관한 경험공유와 국가 간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제3절

## 종합분석과 시사점

##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인식

- 국내 문화다양성 협약인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의 90%는 일반국민들의 인지도를 낮게 보았으며, 반면 5%만이 협약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함. 문화다양성 협약과 국민 간 인식의 괴리가 있기에 관련내용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이 매우 필요함을 나타냄
- 전문가들은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국내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함. 이행과정에서 유네스코 문화개발원조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중지를 모으는 작업이 요구되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함
- 문화다양성 협약의 핵심 내용으로 응답자의 42%는 “문화 자체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선택했고, “문화 자산에의 접근 및 문화의 공정한 흐름 촉진”을 17.7%가 꼽았으며, 응답자들 중 16.5%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 보장” 및 “국가의 문화 주권 보장”을 택했음. 문화다양성 협약에 담긴 ‘문화 간 다양성 존중’ 및 ‘문화산업의 고유한 문화주권’을 강조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적개발원조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국가이기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보답해야한다는 식의 당위론적 호소를 내세워,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함
- 따라서 우리만의 관심 의제에 함몰되거나 자국 홍보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공적기여의 규범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

별 문화 개발지원을 확대추진하고,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음

□ 유네스코 협약 국내이행·운영 평가

-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내 문화정책발전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70%,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2.5%로 조사되었음. 협약의 인식측면에 미흡한 면이 있으나 국내 문화정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평가됨
-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이행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협약이행 관련 주요선진국의 모니터링 기법 및 모범사례 등의 경험공유와 국가 간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언급함
-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시 중요한 주체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들의 33.3%는 “시민사회”를 1순위로 지적했으며, 다음은 “중앙정부(관련 공무원)”가 26%로 나타내고 있음. 반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도에 대한 물음에 47.5%가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선택하였음
- 설문조사에서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이 보다 주목해야할 분야로 전문가들 중 50%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능력 및 수용능력 제고”를 택했고, 33.3%는 “소수문화에 대한 인정과 문화적 권리 확대”라는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보장과 예술가의 사회적 권리 증진”이 뒤를 이음
- 기존 다문화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 간 관계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 55%가 “기존 다문화 정책과 차이가 분명치 않다”고 보았으며, 반면 정책적 차별성이 있다는 의견이 22.5%로 조사되었음. 다문화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 간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언급함

- 전문가들은 무지개 다리사업과 같이 일정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관련된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법적, 제도적 체계구축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정책과의 보다 분명한 차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평가 및 추진방향

- 국제교류사업의 전담부서에 대해 32.5%가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이후 전담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1순위로 꼽았음. 이어서 “문화부-외교부 공동 관리 등 관련 협업 강화”를 25%가 답했고, “공공기관과 민-관 거버넌스 관리강화”가 22.5%로 나타남
- 유네스코 관련 자발적 기여사업에 문체부, 교육부, 기재부, 문화재청,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인력을 파견하고, 13개 기관이 37개 사업에 관여하지만, 타 기관 및 부처 등과 협력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이 쉽지 않음을 지적함
- 따라서 상호연계성이나 통합적 효과를 추구하는 체계적인 측면을 개선하고자, 정책 간 연계에 바탕을 둔 통합적 운영이 요구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유네스코 국제 활동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공유하고 공동의 전략적 접근차원의 기관들 간 역할 범위 조정과 적절한 기능 배분협의 조정기구가 필요함을 언급함
-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에 국내 거버넌스 차원의 다양한 부처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긴밀한 연계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국제교류와 관련한 가장 큰 어려운 점에 대한 물음에 “예산 및 인력 부족”, “담당기관의 전문성 및 능력 부족”에 대한 항목에 77.5%의

응답자가 답변을 주었음. 이어서 “민간 참여 미흡” 질문에는 57.5%가 부정적인 견해를 선택함

- 국제개발협력 대상 범위로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함”(45%)을 지지하였으며, 27.5%는 “아태지역 위원국으로 아태지역에 개발협력을 보다 집중해야 함”을 선택함

□ 위원국으로서 역할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위원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협약의 모범적인 국내 이행”(32.2%)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뽑았으며, 다음으로 “아태지역 내 문화다양성 협약 가치 확산”을 31.1%가 답했음. 그리고 “협약 당사국 역량강화 지원”(14.4%)을 택했던 반면에 “한국의 입장 대변”은 2.2%만이 지지함
- 한국이 아태지역 정부 간 위원국으로서의 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한 물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활동 증대 및 가치 정립”이 75.6%로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 노력”을 응답자 9.8%가 답했음
- 전문가들은 국제논의의 장에서 위원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수동적이고 관찰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주요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당사국 총회 전체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주요 의제에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전문가들은 의제 논의 과정에서 국가적 이해와 맞물리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유네스코 주요 사업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아태지역 위원국으로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해야 할 것을 제시함



## 제6장 ●●

# 정책사업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 제1절

##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본 절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함
- 앞서 당사국 총회 및 정부간위원회 주요현황을 살피고,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협약의 정책실태를 파악했음
- 정책담당자 및 문화관계자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정책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분석작업을 진행하였음
- 이러한 포괄적인 현황분석은 실천적인 문화다양성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도출하고자 함



[그림 6-1] 협약 위원국으로서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제2절

## 추진전략 설정

## 1. 거시적 국제기구 전략 수립

- 세계화의 심화 및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다원적 이슈에 대한 예측이 힘들며 국제통상의 복잡성이 나타남
  - 국제기구의 문화협력사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기구 내에서의 입지와 위상을 강화할 전략마련이 필요함
- 한국은 빠르게 중견국가로 발돋움했으나, 여전히 강대국들의 관점이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짐
  - 문화산업적 분야에서 상충되는 이슈나 규범형성 등에서 중재와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요구됨
- 지금까지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와 국제기구 진출 등 실무적 현안에 업무와 역할이 집중되어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는 비전과 전략이 부족한 한계를 노정하였기에, 글로벌 문화다양성 이슈에 대한 비전과 목표 및 전략적 사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이념 갈등 혹은 선진국 對 개도국 대결을 벗어나 이슈에 따라 입장을 같이하거나 달리하는 국가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한 새로운 국제협력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논의를 이끌 수 있는 특정분야의 이슈개발이 필요함
- 문화전문기구들은 각 부문별 국제회의와 협력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여러 부처에서 사업별로 국제외교를 수행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인력 및 조직 강화 등 현실적인 지원 및 협의체제가 시급한 실정임

##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협력 환경 조성

-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정치적 지향, 경제상황, 사회적 구성에서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의 모임이기에 안전에 대한 단일입장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임의적인 협약가입 확대 전략은 한계가 있기에, 이슈별로 협력을 도출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문화다양성 위원국으로서 리더십 모멘텀을 활용하여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아시아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이에 따른 책임도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단기적 국익과 성과의 추구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공적원조개발 등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함
- 국제기구의 사무국은 대부분 유럽에 분포되어있고 문화관련 이슈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움직여왔기에, 글로벌 이슈 해결에서 아시아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외교를 추구해나갈 필요가 있음
-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나라는 많은 개발 분야에서 개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개발경험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도국 대상으로 신뢰를 확보하면서 전략적 국제교류협력이 극대화되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중요함
- 지속가능한 글로벌 문화외교의 추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십의 실질적인 성과와 혜택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아시아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문화외교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

### 3.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인프라 구축

- 문화다양성은 여러 계층 및 유형의 대상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인 만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기에, 담당자 별로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체적인 정책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단일 부처만의 사업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는 정책 총괄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음
- 문체부는 물론, 교육부, 광역자치단체 등 공통적으로 관련된 문화행정담당자 및 문화기관 종사자 등 매개인력,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등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국가 문화다양성 정책의 총괄비전 및 목표가 제시되고, 세부과제 추진 시 주요 업무부처를 특정하여 명시하며 사업 내용의 유사성으로 내용이 중첩될 경우 공동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 공공영역과 시민단체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실행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을 도모하고 다각도의 파트너십을 조성하여 관련 정책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제3절

## 정책 단계별 실행 과제 구상

- 문화다양성 위원국으로서 적합한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함
-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내 역할측면, 아시아 지역교류협력의 전략적 운영측면, 국내 협약이행 지원측면, 민간부문 교류 활성화측면으로 범주화시켜, 4가지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세부방안들을 구성하였음
- 문화다양성 위원국으로서 정책의 실행과제에는 《유네스코 국제기구 내 역량증진》, 《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장기전략 수립》, 《문화 다양성 협약 국내 이행 활성화》, 《민간부문 교류 활동 강화》를 포함하며 이를 세분화된 대응과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   |
|--|---|
| <b>1. 유네스코 국제기구 내 역량증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 주도적 참여 및 정보공유 확대</li> <li>▪ 범정부적 협력체계 및 통합연계성 제고</li> <li>▪ 아시아의 문화다양성 정책 가치정립 및 중심의제 발굴</li> </ul> | <b>2. 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장기전략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지역기구의 활용 및 중장기 전략 추진</li> <li>▪ 아시아지역 개도국 문화 ODA 추진 확대</li> <li>▪ 문화다양성 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li> </ul> |
| <b>3. 문화 다양성 협약 국내 이행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li> <li>▪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li> <l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국가보고서 작성체계 구축</li> </ul>    | <b>4. 민간부문 교류 활동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이행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li> <li>▪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문성 제고</li> <li>▪ 국제기구에 대응하는 민간협의체 구성 및 민간단체 지원 방안</li> </ul>  |

[그림 6-2] 정책 단계별 실행 방안 구상

## 1. 유네스코 국제기구 내 역량증진

### 가. 국제기구 주도적 참여 및 정보공유 확대

-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기구에 대한 분담금 비율을 상승시켜, 국제사회에 재정적인 기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에 수동적 역할에 그쳐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정책에 있어 문화부문과 산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함
  -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문제들을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국제기구와의 연계하여 국가 간 문화협력 사업을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럽 내 문화정책담당자 및 타 지역 정부간위원회 위원국들과의 정기적인 만남과 긴밀한 업무협의 및 소통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변화하는 글로벌 아젠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슈중심의 동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기획 및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6월 문체부의 후원으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문화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아태지역 전문가 워크숍”과 같이 동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가의 인식 제고, 기준률 증가, 아태지역 차원에서의 협약 해석과 적용 노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이행하는 것도 동 협약 위원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나. 범정부적 협력체계 및 통합연계성 제고

### □ 국제기구 정책 및 행정체계의 통합연계성 제고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전략 과제를 설정하여 정책 추진체계를 구조화해야 함
- 유네스코와 관련된 인력과전기관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등 8개 부처이며, 자발적 기여관련 문체부, KOICA, 외교부,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12개 기관이 37개 사업을 진행하였음
- 장기적으로 유네스코 국제기구 내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 관련 부처 및 사업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추진 시 내용의 유사성으로 내용이 중복될 경우 공동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 □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문화다양성 위원회 활성화

- 문화다양성 협약 국제교류와 협력 사업은 문체부 단일 부처에 의해서 추진될 수 없는 업무이나, 현재까지 중앙정부 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정책 통합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음
- 문화다양성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 및 정책관리 일원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유네스코 내 여러 부서에서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각 부처와 담당자 별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방식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정책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음
- 국제기구 내 글로벌 아젠다를 발전시키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때

협력사업의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교류사업과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되는 실질적 협력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 아시아의 문화다양성 정책 가치정립 및 중심의제 발굴

- 국제협약이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데 반해, 아시아 지역은 문화다양성 정책이 생소한 개념으로 서구적 시각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되는 상황임
  - 위원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이념적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아시아 지역의 정책가치들이 존중되도록 국제협력을 지향하는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는 국제여론을 주도할 이슈를 만들어내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자 정책결정의 공간이나, 지금까지 한국이 유네스코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새로운 이슈현안을 제안하거나 범정부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실정이었음
- 아시아지역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슈발굴과 전략개발을 통해 유네스코 내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최근의 디지털환경 속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문화다양성 국제회의에서 개도국과의 협력방안과 국제시장의 제도, 시장메커니즘 개선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개도국들과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의 장기전략 수립

### 가. 아시아 지역기구의 협력강화 및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

-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당하는 제4그룹에 소속되어, 2015년 선출된 인도네시아와, 2017년 한국과 함께 선출된 중국과 함께 4그룹을 대표하는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임
  -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다양성 협약 서명국은 14개국에 불과하고 6개 그룹 가운데 그 수가 가장 적어, 낮은 인지도에 대한 협약 홍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협력도 필요한 상황임
-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문화다양성 이행을 위한 국제 문화협력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정상회의협력(EAS), ASEAN+3 등 아시아 지역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내 문화다양성 협약 대한 공감대 확산과 참여 확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요구됨
- 2018년 현재 협약 가입국은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사모아, 티모르임
  - 미가입국은 일본, 북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피지, 부탄,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싱가포르 등임
- 우리의 현안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던 국제 외교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저개발국과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미가입 30개국 가운데에는 이른바 개발도상국으로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비준할 경우 국제기금을 통한 문화사업 발전과 보호에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이 다수 있음

## 나. 아시아지역 개도국 문화 ODA 추진 확대

- 문화다양성 협약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 특히 개도국이 문화적 역량을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산업화시대를 거쳐 온 선진국들의 개발모형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려는 경험에 근거하며,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문화를 보전하고 그를 바탕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의도가 함께 하고 있음
- 대다수가 개도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재원을 조성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무형문화재 보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보존에 노력한 경험이 개도국을 위해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문화ODA에서 한국의 참여도와 기여도가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ODA가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존 계승을 지향하는 정책은 개도국의 문화정체성 보존에 협력하며, 리더십 강화 차원을 넘어 문화다양성 가치의 의미를 확산시킨다고 볼 수 있음

## 다. 문화다양성 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아시아 개도국 문화예술분야 활동가와 기관들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문화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이 요구됨
  -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 역할을 수행하며 각 분야별 기관이나 개인들은 국내 문화예술인력의 상호교류협력이나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함
-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참가자들의 관련 정보 및 자료들을 체계적

으로 축적, 관리하고 정보역량을 강화해야함

- 자료의 확대 구축을 통해 국내 다양한 문화예술영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화 간 협력을 이루며 정기적인 만남 및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주요사업 성과를 접하는 DB시스템의 구축은 상호문화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아카이빙 사업은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으며, 정보 공개와 문화교류의 추진은 광범위한 인력풀 및 네트워크 형성을 마련해 교류협력의 시너지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3.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 활성화

#### 가.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 □ 학교 및 시민사회교육을 통한 인식 확산

- 문화다양성 정책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공공학교 및 지역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육제도 내 프로그램으로의 도입이 필요함
- 교육시스템 안에 문화다양성 협약 내용 및 다양한 구성원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강좌를 운영하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공존을 이루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해야 함
-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이 사회 내 단계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와 연계된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체제와 과정에 따른 교육 메뉴얼을 개발 보급하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성 교양프로그램의 보급이 요구됨
- 사회적으로 체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기관 및 지역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반인 대상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 교육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야함
- 지역별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의제 발굴을 위한 포럼 운영 및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확대 등 내실화를 기하고, 분야별로 교육효과 평가체계가 도입되도록 해야 함
- 온라인 문화다양성이해 교육센터 구축
  - 일반국민 대상 문화다양성 증진교육 및 소통기회 마련을 통해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편이성 및 대상자 확대가 기대됨
  - 문화다양성 교육은 소수집단을 위한 교육으로 고정화되지 않고, 일반시민에게 우리 모두의 공존을 위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함
  - 소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구성이 아니라,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정책사업의 출발점인면서 동시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은 사회적 통합과제로서 온라인을 통해 상호문화적 시각과 소양을 함양하고 신장시켜야 할 기본적인 목표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세계화된 사회에서 요청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음

#### 나.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 문화다양성은 각 지역의 인구구성, 시민의식, 시정 우선순위 등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따라 결이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성공적인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의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의지와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정례화 하여 자

지단체별 특수한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인식 확대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관련 사업추진 현안 및 애로사항, 관계 부처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별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주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와 관련된 사업 현황 등을 살피는 것이 요구됨
-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과 소수자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단위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정책관련 담당부서 간 정보공유 및 연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소수자 그룹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와 기업체의 참여 확대 등이 보다 요구됨
- 국제사회의 경우 민간단체가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책 설계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여 중앙 중심의 일방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국가보고서 작성체계 구축

##### □ 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정책수단 및 그 집행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과 평가는 적절성이나 협약 이행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함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국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평가관련 합리적인 정책을 진단하기 위한 측정항목 설계 및 사회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지표수정·보완이 요구됨
  - 평가항목에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소수문화와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일반 수용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소수자문화의 문화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 관한 성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실천적인 사업보다는 문화정책 목표로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된 바, 실증적인 진단을 기초로 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설정한 정책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 유네스코 협약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의 작성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정책은 4년 주기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과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수립이 필요함
- 국가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작성 시 조사 대상, 범위, 방식 등을 포함한 ‘문화다양성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
  - 실제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 정도는 각기 상이했음

-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체별 행정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이에 대한 공무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실효성있고 균형잡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임
- 부처 간, 부서 간 의견을 일괄적으로 조율하고 수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문화다양성 정책 국가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관련 자료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센터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자료수집에도 한계가 있음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지침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별 현황을 체계적·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축적함으로써, 정책 추진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4. 민간부문 교류 활동 강화

##### 가. 정책이행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과 독자적인 민간의 역할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권장하는 만큼 우리나라정책에서도 문화다양성관련 시민단체의 파악 및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됨
- 이미 국내 문화정책의 계획단계부터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지만 문화다양성을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는 주로 무지개다리사업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시민사회가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중장기 정책과제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에서 의미하는 문화가 문학이나 예술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참여대상 시민사회는 문화예술계 종사자 이외에도 인권, 성소수자, 이주민, 종교,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골고루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문성 제고

- 협약 이행에는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있으며, 실제로 정부간위원회에서의 모니터링 관련 논의는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적 모니터링 이외에도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이 포함됨
- 상향식 접근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실제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 결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시민사회 양성을 지원해야 함
- 시민사회 참여 회의는 특정 분야 단체로 그 영역이 축소되기 쉽고, 상대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부족한 단체가 배제되어 시민단체 참여가 형식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
- 시민단체의 역량은 국가에 따라 분야별로 상이하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주된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시민단체의 자립성과 활동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에, 시민사회 대표들이 특정 분야의 관심을 넘어 폭넓은 시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민간단체 육성이 필요함



#### 다. 국제기구에 대응하는 민간협의체 구성 및 민간단체 지원방안

- 국제기구 관련 회의에서 민간분야의 참여가 일정부분 제한되어있음
  -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 아래 정보 공유 및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정분야의 전문가나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인력풀제를 구성 운영하고 필요시 효율적인 민관 전문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자립기반을 갖추고 역량 있는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경향이 있어,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단체들보다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얻기 쉬움
  - 결과적으로 국제회의에서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가 확대되면 선진국의 입장이 주로 논의되고 정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현실적으로 다양한 단체의 대표들이 국제회의에 모였을 때 생산적인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시민단체 사이에 사회적 수용성이 다르고, 조직의 역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집단 간 주된 관심사와 전문영역의 차이로 인해 의견의 교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 정부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환경, 시민사회의 자립 가능한 기반, 선진국과의 시민사회 역량 격차해소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함
- 아태지역 내 민간단체 간 국제교류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역 간 국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제7장 ●●

## 결론





## 제1절

## 결론

- 본 연구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역할을 찾고자, 국제기구 내 정책 주요현황과 정부간위원회 활동, 문화다양성 국내 이행성과 및 주요국 정책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향후 보dana은 문화다양성 교류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국제기구 내 역할, 운영과정, 발전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다루어진 기회가 없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사업과 협력방안을 찾고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연구 필요성에서 본 과제를 착수하였음
- 아시아태평양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의 활동 역량강화
  -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견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이슈현안에 대한 범정부 전략 및 대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실정 이기에, 주도적 역할과 위상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 의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아시아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연대 강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이슈들을 글로벌 아젠다화하고, 중요한 국제기구들의 운영이나 논의에 있어 한국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견국가로서 강대국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이슈나 규범을 만드는 측면에서 중재와 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국제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연대 강화, 선후진국 간 가교역할을 통해 적극적 역할을 발휘할 기

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정책실효성 강화 마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토대로 전략적 비전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정책을 수립, 실천해야 함
- 우선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대 국민 홍보와 인식확산 교육을 강화해야 함
-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협약의 안정적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성 모색

- 국제기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실무현안으로 인한 업무가 과중되고, 관련업무 수행기관들 간 업무중복이 나타남
  - 업무협의를 소통의 한계, 범정부차원에서 전략수립과 이행을 총괄할 기관이나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장기적 안목과 비전을 가진 통합적인 국제기구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기구정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다른 부서들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소통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임
- 범정부차원에서도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등 부처 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부부처들은 국익추구의 측면에서 문화외교 이슈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특정 안전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의 현안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집 분

석하고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상호 인력교류와 정보교환, 공동연구과제 수행 등 범정부적 차원의 보완, 협력관계를 제고하여 국제기구 내 문화외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과정을 총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협약관련 업무를 총괄할 총리실 직속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업무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함
-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할 때 정부 주도의 성격을 벗어난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 공유 및 정책 마련을 상호 협력하여 진행해야 함

## 참고문헌

- 김규원(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김규원(2014), 『국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 면(2016), 『한국 속 타인, 타국 속 한인: 포스트 디아스포라시대 민속학 패러다임의 변화』, 서강대출판부
- 김효정(201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정아(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모종린 외(2011),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과제』, 아산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 박선희(200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과 프랑스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3(3)
- 박진경(2012),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 사회통합 전략 - 캐나다 경험과 한국적 모형 모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 설규주(2012),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방향”, 『제1회 문화다양성 교육심포지움: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오재호(2015), “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슈&진단』 No.209
- 오정은(2012), “유럽의 상호문화정책 연구”, 『다문화와 평화』, 6(1)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8),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0), 『유네스코세계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 집문당
- 윤인진(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제10권 제1호, p.144,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 이동성, 주재홍(2012), “문화다양성 교육추진을 위한 개념과 방향”, 『제2회 문화



- 다양성 교육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이산호(2009),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문화예술연구』, 프랑스문화예술학회28집
- 이신화(2011), 『국제기구정책현황과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 정갑영(2004),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정숙(2005),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건수(2015), “한국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 한건수·한경구(2011),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문화다양성과 국제이해교육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6(1)
- 한건수·김다원·천경효·박애경 (2015),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커리큘럼 개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제2회 문화다양성 교육심포지엄 연구
- 홍기원(2006), 『한국다문화사회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Banks, J.A.(2006),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s, curriculum, and teaching(5th ed)*, Boston
- Bissonndath, Neil(1994), *Selling Illusions: The Cult of Multiculturalism in Canada*, Penguin
- CIC(2011), 『Departmental Performane Report 2009-2010』
- De Beukelaer, Christiaan and Miikka Pyykk nen(2015), “Introduction: UNESCO’s ”Diversity Convention “ – Ten Years on”, *Globalization, Culture, and Development: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Christiaan De Beukelaer, Miikka Pyykkönen and J. P. Singh (eds.), London: Palgrave
- Feagin, Joe R.(1984), *Racial and Ethnic Relations (2nd ed.)*, Prentice -Hall.

- Günter Wiegmann(1991), Theoretische Konzepte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Diskussionen um Regeln und Modelle, Münster
- Obulgen, Nina(2006), “From Our Creative Diversity to the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Introduction to the Debat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Making It Work*,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Schenk, Annemie(2001), Interethnische Forschung, *Grundriss der Volkskunde: Einführung in die Forschungsfelder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Rolf W Brednich(eds.)
- UNESCO(1998), *Final Report of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Stockholm, Sweden
- (1998), *World Culture Report: Culture, Creativity, and Markets*, Paris: UNESCO
- (2000), *World Culture Report: Cultural Diversity, Conflict, Pluralism*, Paris: UNESCO
- (2009), *UNESCO World Report: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Paris: UNESCO
- (2017), 2017 Report.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nvesting in creativity. Transforming societies
- (2018), 2005 Convention Global Report. Re | 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 ABSTRACT

### The Roles and Challenges of Korea as a member of UNESCO's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Cultural Diversity

Myun Kim

Korea was elected as a member of UNESCO's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Cultural Diversity during the sixth ordinar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 Paris. It works as a member of the committee's Asia-Pacific group for the next four years till June 2021. Two other members of the regional group are China and Indonesia

Korea should strive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 through excavation of cultural issue and strategy development that can take the initiative conforming to its national economy's scale and international influence on behalf of Asia region.

Since there have been no in-depth analysis of the roles, enforcing measures, problems etc.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lated to UNESCO cultural diversity so far, I tried to proceed in-depth research to find practical policy projects and cooperation measur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mprove policy effectiveness.

Since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establish a strategy to strengthen its position and status as a middle-level country in the organization of UNESCO, it is required to prepare international policy proposing strategic vision and looking for carrying out method by setting main issues to global agenda.

In order to facilitate the more balanced trade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while avoiding clashes with the WTO rules, Korea has to prepare

the opportunity to actively act as a bridge state to effectively mediate and coordinate its role in international issues and norms formation.

Promoting sustainable cultural governance support, balanced distribution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free movement of artists, cultural integration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ystem,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posed by UNESCO Secretariat,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 cultural diplomacy capacity based on a long-term perspective in order to actively pursue efforts to excavate the agenda and to drive fruitful cooperating project effectively.

In case of disputes in cultural industry in the context of global environment change, the role of arbitrator who can tune up the difference of posi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settle it with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cultures instead of the logic of the market is required, therefore a coordinator's role to create mutual interests should be prepared a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pport of cultural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enhance the capacity of artists and cultural experts in underdeveloped regions, active strategy should be driven to the orientation where the approach to world market is increased and policies should be pursued actively to the orientation to raise global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order to enhance it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omentum should be prepared for the cultural policy official to make a qualitative leap through lively discussions with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cademia, civil society etc.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activities to monitor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and contribute to the common development of the Asia-Pacific region through sustainable cultural policies.

부  
록





## 부록 1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위원국의 역할과 과제 설문조사 양식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및 교류사업에 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문화 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반드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8. 7.

주 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 의 처 : 김면 ☎ 02-2669-○○○○

| 소속 | 성명 |
|----|----|
|----|----|

###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유네스코는 2005년 10월에 개최된 제 33차 정기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음. 현재 14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대륙별 6개 그룹, 총 2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어 문화적 표현 소멸 위험 등의 특수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협약 제8조에 의해 이를 정부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9조에 의해 4년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를 유네스코에 보고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해야 함
- 한국은 2017년 6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에서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원국에 선출되었으며, 문화다양성 협약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와 협의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음

## I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인식

### 1. 귀하께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2005)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대체로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모르고 있다
- ⑤ 전혀 모르고 있다

2. 한국 사회 속 일반 국민들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2005)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대체로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모르고 있다
- ⑤ 전혀 모르고 있다

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2005)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개인의 인권과 자유 보장
- ② 국가의 문화 주권 보장
- ③ 문화 자체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 ④ 문화를 통한 경제사회적 발전 도모
- ⑤ 문화 자산에의 접근 및 문화의 공정한 흐름 촉진
- ⑥ 기타 ( )

## Ⅱ 유네스코 협약 국내이행·운영 평가

4.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이 국내 문화정책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다음의 문화다양성 협약 내용들이 국내에서 충분히 잘 구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구분                               | 전혀<br>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소수 사회집단의 문화적 표현 증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소멸이나 훼손 가능성 있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조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문화다양성 교육과 공공인식 증진                | ①         | ②   | ③    | ④   | ⑤         |
|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율성 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시민사회의 문화정책 참여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6. 귀하께서는 국내에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갖춰져 있다
- ② 잘 되어있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미흡한 편이다
- ⑤ 매우 미흡한 편이다

7. 국내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하는 데 중요한 주체는 누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관련 공무원)
- ② 지역자치단체 (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
- ③ 언론/미디어 매체
- ④ 시민사회
- ⑤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
- ⑥ 기타 ( )

8. 귀하께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 보장되어있다
- ② 잘 보장되어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보장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9. 귀하께서는 국내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이행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 ②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③ 관련 공무원 및 담당자 등의 역량 강화
- ④ 시민사회 참여 확대
- ⑤ 기타( )

10. 현재의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이 기존의 다문화정책과 분명히 구분되는 정책으로 이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이 앞으로 어떤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타문화에 대한 이해능력 및 수용능력 제고
- ② 표현의 자유보장과 예술가의 사회적 권리 증진
- ③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향수권 증진
- ④ 소수문화에 대한 인정과 문화적 권리 확대
- ⑤ 지역 문화자원의 보호와 증진
- ⑥ 기타( )

12. 국내에 문화다양성 협약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협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 ② 학교 및 사회 차원의 문화다양성 교육 증진
- ③ 문화다양성 거리 조성 및 소수문화제 증진
- ④ SNS와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소통 활성화
- ⑤ TV, 라디오 등 통한 홍보캠페인
- ⑥ 기타( )

13.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범부처 차원의 정책 총괄 기능 추진
- ②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의 전문교육 강화
- ③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전문협의회 구축 활용
- ④ 공공기관과 민간협력체계 강화
- ⑤ 기타( )

### Ⅲ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평가 및 추진방향

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국제 활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 정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학계
- ④ 시민단체
- ⑤ 기타( )

15. 국제교류사업의 관리 전담부서로 어떤 부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담 관리함
- ② 문화부-외교부 공동 관리 등 관련 협업 강화
- ③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이후 전담 관리함
- ④ 국제협력의 전담 관리는 필요 없음
- ⑤ 민-관 거버넌스 관리
- ⑥ 기타( )

1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전혀 문제<br>없음 | 〈----- 보통 -----〉 |   |   |   | 심각한<br>문제있음 |
|--------------------|-------------|------------------|---|---|---|-------------|
| 예산 및 인력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담당기관의 전문성 및 능력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민간 참여 미흡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현장 체감형 정책 전달체계 미비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부문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
- ②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
- ③ 국제기구 회의에 적극적인 참가
- ④ 분야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기구 운영
- ⑤ 정부와 민간의 연계방안
- ⑥ 기타( )

18.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국제개발협력 대상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협약취지에 따라 개도국 지원사업 중심으로 계속 추진해야 함
- ② 선진국과의 공동사업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③ 아태지역 위원국으로 아태지역에 개발협력을 보다 집중해야 함
- ④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함
- ⑤ 기타( )

19. 문화다양성 협약에 부응하고자 국제협력 정책 수행에서 주력해야 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운영지원
- ②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 이동성 확보
- ③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정한 문화교류
- ④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 협력지원
- ⑤ 표현의 자유 증진과 예술적 권리 보장
- ⑥ 기타( )

#### Ⅳ 위원국으로서 역할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20. 제 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2017)에서 한국이 아태지역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협약의 모범적인 국내 이행
- ② 한국의 입장 대변
- ③ 아태지역 당사국들의 입장 대변
- ④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적 기여 강화
- ⑤ 협약 당사국 역량강화 지원
- ⑥ 아태지역 내 문화다양성 협약 가치 확산
- ⑦ 기타 ( )

2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정 부담
- ② 전문 인력의 부족
- ③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 부족
- ④ 관련분야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 ⑤ 민간영역의 참여 및 관심 부족
- ⑥ 기타( )

22. 귀하께서는 한국이 아태지역 정부 간 위원국으로서 어떠한 정책 추진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 노력
-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활동 증대 및 가치 정립
- ③ 유럽의 선진 문화다양성 위원국 모델의 벤치마킹
- ④ 개발도상국 중심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증대
- ⑤ 기타( )

23. 효과적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 ② 관련 전문가 양성
- ③ 협약 관련 국내 거버넌스 체계화
- ④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강화
- ⑤ 기타( )

- 감사합니다 -

## 부록 2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정부간위원회의 절차 규칙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부간위원회가 첫 회의(오타와, 2007년 12월 10-13일)에서 채택하고 2005 협약 당사국 총회 2차 회의(파리, 2009년 6월 15-16일)에서 승인함

## I. 구성

규칙1 -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부간위원회 (협약 23조)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부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 23조에 따라 선출된 협약 위원국(이하 "위원국"이라 칭함)들로 구성되어 있다.

## II. 회의

규칙 2 - 정례 회의와 임시회의

- 2.1. 위원회는 매년 정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2.2. 위원회는 위원국 2/3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규칙 3 - 소집

- 3.1.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칭함)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칭함)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 3.2. 사무총장은 정례 회의의 경우 적어도 60일 전에, 그리고 임시 회의의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위원회 위원국에 각 회의의 날짜와 장소, 임시 의제에 대해 알려야 한다.
- 3.3. 동시에 사무총장은 규칙 6과 7에서 언급하는 단체와 개인, 입회인에게 각 회의의 날짜와 장소, 임시 의제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규칙 4 - 회의 날짜와 장소

- 4.1. 위원회는 각 회의마다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다음 회의의 날짜를 정해야 한다. 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 4.2. 위원회 회의는 보통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릴 것이다.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2/3 이상의 다수결로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회원국 중 한 곳의 영역에서 회의를 열기로 결정할 수 있다.

### III. 참석자

#### 규칙 5 - 위임

- 5.1. 위원회의 각 위원국은 교대인, 자문,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5.2. 위원회의 위원국은 협약에서 취급하는 분야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5.3. 위원회 위원국은 사무국에 서면으로 대리인의 이름과 역할, 자격을 알려야 한다.

#### 규칙 6 - 상담 제한

위원회는 특정 쟁점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언제든지 공공 단체나 민간단체, 혹은 개인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협약 23.7항).

#### 규칙 7 - 입회인

- 7.1. 위원회의 위원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들은 입회인이나 그 부속기구로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18조 조항을 조건으로 이하 20조에서 기술하는 권리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 7.2. 협약 당사국이 아닌 유네스코 회원국, 준 회원국, 정식 유네스코 감시단은 서면 통지를 통해 표결권 없이 규칙 20.3항을 조건으로 입회인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7.3. 국제연합 대리인과 국제 연합 시스템 단체, 기타 유네스코와 상호 대리 협정을 체결한 정부 간 기구는 서면 통지를 통해 표결권 없이 규칙 20.3항을 조건으로 입회인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7.4. 협약에서 취급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규칙 7.3에서 언급한 단체 외의 정부 간 기구와 민간 기구는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표결권 없이 규칙 20.3항을 조건으로 회의 몇 곳이나, 단일 회의나, 혹은 사무총장에게 서면 요청 시 회의의 특정 모임에서 입회인으로서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IV. 의제

#### 규칙 8 - 임시 의제

- 8.1. 위원회 회의의 임시 의제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준비해야 한다 (협약 24.2항).
- 8.2. 위원회 정례 회의의 임시 의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수 있다:
  - (a) 협약이나 현행 규칙이 요구하는 문제
  - (b) 협약 당사국의 총회에서 언급하는 문제
  - (c) 위원회가 이전 회의에서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문제
  - (d) 위원회 위원국이 제안하는 문제
  - (e) 위원회 위원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이 제안하는 문제
  - (f) 사무총장이 제안하는 문제
- 8.3. 임시 회의의 임시 의제에는 해당 회의를 소집하게 한 문제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규칙 9 - 의제 채택

위원회는 각 회의 초에 해당 회의의 의제를 채택해야 한다.

#### 규칙 10 – 개정, 삭제, 새 항목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2/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면, 위원회는 그렇게 채택된 의제를 개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새 항목을 더할 수 있다.

### V. 사무소

#### 규칙 11 – 사무소

11.1. 위원회 사무소는 공정한 지리적 대표 원칙에 따라서 의장과 하나 이상의 부의장, 조사 위원 하나로 구성된다. 사무소는 위원회의 업무를 편성하고 회의 날짜와 시간, 의제의 순서를 정한다. 의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무소 일원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11.2. 사무소는 필요한 만큼 자주 위원회 회기 도중에 회의를 해야 한다.

#### 규칙 12 – 선출

12.1. 위원회는 각 정례 회의가 끝날 때 다음 정례 회의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위원회 위원국 가운데서 의장과 하나 이상의 부의장, 조사 위원 하나를 선출해야 하고 이들은 그 회의 말까지 임기가 계속되며 즉시 재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임기로 1차 회의에서 사무소 일원들이 그 회의 초에 선출되어야 하고 그들의 임기는 다음 정례 회의가 끝날 때 만료되어야 한다. 의장을 선출할 때는 규칙 12.2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리적 순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12.2. 예외적으로 유네스코 본부 밖에서 회의가 열릴 때는 자체 사무소를 선출할 수 있다.

12.3. 사무소를 선출할 때 위원회는 공정한 지리적 대표 원칙과, 가능한 한 협약에서 취급하는 분야 간 균형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규칙 13 – 의장의 의무

13.1. 의장은 본 규칙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뿐 아니라 각 위원회 총회를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 의장은 논의를 총괄하고 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발언권을 허용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치고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 의장은 본 규칙에 따라 의사 진행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절차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질서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장은 투표를 하지 않지만 다른 회원국에게 자신을 대신해 투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자신에게 맡긴 다른 모든 의무를 행해야 한다.

13.2. 의장 역할을 하는 부의장에게는 의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다.

13.3. 위원회 부속기구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주재하도록 요청을 받은 기구와 관련해, 위원회의 의장이나 부의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다.

#### 규칙 14 – 의장의 대체

14.1. 의장이 위원회 회의나 사무소 회의나 그 일부에서 활동할 수 없으면, 그 역할은 부의장이 맡아야 한다.

14.2. 의장이 더 이상 위원회 위원국에 해당되지 않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임기를 마칠 수 없으면 위원회 내에서 합의를 거친 후 나머지 임기 동안 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한다.

14.3. 의장은 자신의 위원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역할을 행사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 규칙 15 – 조사 위원회의 대체

15.1. 조사 위원이 위원회 회의나 사무소 회의나 그 일부에서 활동할 수 없으면, 그 역할은 부의장이



말아야 한다.

15.2. 조사 위원이 더 이상 위원회 위원국에 해당되지 않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임기를 마칠 수 없으면 위원회 내에서 협의를 거친 후 나머지 임기 동안 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한다.

## VI. 사무 집행

### 규칙 16 – 정족수

16.1. 총회에서 정족수는 위원회 위원국 과반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16.2. 부속기구 회의에서 정족수는 해당 기구 위원국의 과반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16.3. 위원회나 그 부속기구는 정족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사안도 결정할 수 없다.

### 규칙 17 – 회의의 공개적 성격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회의는 공개적으로 열려야 한다.

### 규칙 18 – 비밀회의

18.1. 이례적인 상황에서 위원회가 비밀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면 위원회는 참석해야 하는 사람뿐 아니라 위원회 위원국의 대리인도 정해야 한다.

18.2. 비밀회의에서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열리는 공개 회의에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8.3. 각 비밀회의마다 위원회는 회의의 요약 기록과 업무 문서를 공개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밀회의에서 나온 문서는 20년 후에 공개해야 한다.

### 규칙 19 – 부속기구

19.1.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러한 부속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19.2. 위원회는 각 부속기구를 설립할 때 그 구조와 위임 사항 (권한과 임기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기구들은 위원회 위원국으로 구성된다.

19.3. 각 부속기구는 의장과, 필요에 따라 부의장, 조사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19.4. 부속기구의 회원을 임명할 때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공정한 대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규칙 20 – 발언 순서와 제한 시간

20.1. 의장은 위원회 위원국인 발언자에게 발언 의사를 보여주는 순서대로 발언권을 허락할 수 있다. 입회인은 토론이 끝날 때 협약 당사국, 협약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대리인, 기타 입회인 순으로 발언할 수 있다. 지역 경제 통합 단체의 회원인 위원회 위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협약 27 (3) (c)항에 따라 그 단체가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그 단체 대리인에게 발언권을 허락할 수 있다.

20.2. 의장은 상황에 따라 각 발언자에게 허용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0.3. 규칙 6과 7에서 언급하는 단체와 개인, 입회인은 의장에게서 사전 승낙을 받아 그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규칙 21 – 제안의 본문

위원회 위원국의 요청이 있고 다른 두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면, 정식 동의나 결의안,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그 본문이 두 가지 통용 언어로 참석한 모든 위원회 위원국에 배포될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

#### 규칙 22 - 제안의 분할

위원회 위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안의 일부를 별도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별도의 표결이 승인된 그 제안의 일부는 이후 별개의 하나로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제안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거부되면 그 제안은 전체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규칙 23 - 개정안 표결

23.1. 제안의 개정안이 제출되면 그 개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제안의 개정안이 두 가지 이상 제출될 경우, 위원회는 의장이 사실상 원 제안과 가장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개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후 그 다음으로 원 제안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모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때까지 이를 반복해야 한다.

23.2. 개정안이 하나 이상 채택될 경우, 개정된 제안은 통틀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23.3. 발의가 제안에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경우 그것을 제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간주된다.

#### 규칙 24 - 제안의 표결

동일한 문제에 대한 제안이 둘 이상이면 위원회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그 제안들을 제시된 순서대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안에 대해 각각 표결을 한 후 다음 제안을 표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규칙 25 - 제안의 철회

제안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제안자가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제안은 다른 위원회 위원국이 다시 제시할 수 있다.

#### 규칙 26 - 의사 진행에 대한 이의 제기

26.1. 논의 중에 위원회 위원국은 의사 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장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6.2. 의장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한 항소는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하고 의장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과반수가 기각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규칙 27 - 절차 발의

논의 중에 위원회 위원국은 회의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거나, 토론을 연기하거나, 토론을 종료하는 절차 발의를 제시할 수 있다.

#### 규칙 28 - 회의의 보류나 연기

어떤 사안을 논의하고 있든, 위원회 위원국은 회의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발의가 있으면 논의 없이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 규칙 29 - 토론의 연기

어떤 사안을 논의하고 있든, 위원회 위원국은 논의 중인 항목에 대한 토론을 연기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연기를 제안할 때 그 위원국은 무기한 연기를 제안하는지 아니면 특정 기간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발의의 제안자뿐 아니라 발언자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 발의에 찬성하는 발언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 규칙 30 - 토론의 종료

다른 발언자가 논의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 위원국은 언제든지 그 토론을 종료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토론의 종료에 반대하는 발언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발언권은 발언자 2명 이하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의장은 이후 토론 종료 발의를 표결에 부쳐야 하고, 위원회가 그 발의에 찬성할 경우 의장은 그 토론을 종료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 규칙 31 - 절차 발의의 순서

규칙 26 조항에 따라, 그러한 발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회의에 상정된 다른 제안이나 발의보다 우선한다.

- (a) 회의의 보류
- (b) 회의의 연기
- (c) 논의 중인 문제에 대한 토론의 연기
- (d) 논의 중인 문제에 대한 토론의 종료

#### 규칙 32 - 결정

32.1. 위원회는 그러한 결정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권고를 채택해야 한다.

32.2. 각 결정의 원문은 의제 사항에 대한 논의가 끝날 때 채택해야 한다.

## VII. 표결

#### 규칙 33 - 표결권

위원회의 각 위원국은 위원회에서 한 표를 행사할 표결권을 갖는다.

#### 규칙 34 - 표결 중 행동

의장이 투표가 시작됨을 알린 후에는, 실제 투표 시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기하는 위원회 위원국 외에는 투표를 중단할 수 없다.

#### 규칙 35 - 단순 다수결

본 규칙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위원국의 단순 다수결로 한다.

#### 규칙 36 - 표 계산

본 규칙의 목적상,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이라는 표현은 동의나 거부 투표한 회원만을 말한다. 투표를 기권한 위원국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규칙 37 - 표결 방법

37.1. 위원회의 한 위원국이 비밀 투표를 요청하고 다른 두 회원국이 재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표결은 가수로 해야 한다.

37.2. 거수 표결 결과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의장은 두 번째로 점호 표결을 할 수 있다.

37.3. 표결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두 위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점호 표결도 해야 한다.

#### 규칙 38 – 비밀 투표로 표결 실행

38.1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의장은 행사되는 표를 면밀히 조사할 계표원 두 명을 임명해야 한다.

38.2. 표 계산이 완료되고 계표원이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표가 다음과 같이 기록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고 그 투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국의 총 수에서

(a) 불참한 회원국의 수와

(b) 기권표의 수와

(c) 무효표의 수를 제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수가 표 수로 기록될 것이다.

### VIII. 위원회 사무국

#### 규칙 39 – 사무국

39.1. 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협약 24조).

39.2. 사무총장이나 그 대리인은 표결권 없이 위원회나 그 보조기구의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사무총장이나 그 대리인은 언제든지 검토 중인 문제에 대해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성명을 할 수 있다.

39.3. 사무총장은 위원회 서기 역할을 할 유네스코 사무국 직원과, 그 밖에 함께 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할 다른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39.4. 사무국은 위원회의 모든 공식 문서를 받아서 번역하고 배포해야 하고 논의 내용을 통역할 준비를 해야 한다.

39.5. 사무국은 위원회 업무를 제대로 실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IX. 통용 언어와 보고서

#### 규칙 40 – 통용 언어

40.1. 위원회의 통용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국제 연합의 다른 공식 언어를 통용 언어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40.2. 위원회 회의에서 통용 언어로 이루어지는 진술은 다른 언어로 통역되어야 한다.

40.3. 그러나 발언자는 자기 진술을 통용 언어 중 하나로 통역할 준비를 한 경우 다른 언어로 발언할 수 있다.

40.4. 위원회 문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동시에 발행해야 한다.

#### 규칙 41 – 문서 배포 기한

각 위원회 회의의 임시 의제 항목과 관련된 문서는 두 가지 통용 언어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자식이어야 하며 늦어도 해당 회의가 시작되기 4주 전에 위원회 회원국에 인쇄물 형식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그 문서들은 규칙 6과 7에서 언급하는 단체와 개인, 입회인에게 전자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규칙 42 - 회의 보고서**

각 회의가 끝날 때마다, 위원회는 당회가 종결된 다음 달에 두 가지 통용 언어로 동시에 발표해야 하는 결정 목록을 채택해야 한다.

**규칙 43 - 요약 기록**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의 요약 기록 초안을 두 가지 통용 언어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다음 회의가 열릴 때 승인 받아야 한다. 이 요약 기록 초안은 회의가 종료된 후 늦어도 3개월 안에 전자식으로, 그리고 동시에 두 통용 언어로 발표되어야 한다.

**규칙 44 - 서류의 전달**

사무총장은 공개회의의 결정 목록과 토론의 최종 요약 기록을 위원회 회원국과, 규칙 6과 7에서 언급한 단체와 개인, 입회인에게 전송해야 한다.

**규칙 45 - 당사국 총회에 보고**

- 45.1. 위원회는 활동 및 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당사국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 45.2. 위원회는 의장에게 위원회를 대신해 이 보고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45.3. 보고서의 사본은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전송해야 한다.

## **X. 절차 규칙의 채택과 개정, 보류**

**규칙 46 - 채택**

위원회는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절차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규칙 47 - 개정**

위원회는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2/3 이상이 내린 결정에 따라 협약의 조항을 다시 만들 경우를 제외하면, 절차 규칙을 개정할 수 있고 이때 제안된 개정안은 규칙 8과 9에 따라 해당 회의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규칙 48 - 보류**

위원회는 총회에서 참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2/3 이상이 내린 결정에 따라 협약의 조항을 다시 만들 경우를 제외하면, 절차 규칙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전 진 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송 지 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문관)

오 정 은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 트랙 교수)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의 역할과 과제

발 행 인 김 정 만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8년 8월

발 행 일 2018년 8월

인 쇄 인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ISBN : 978-89-6035-718-1 93300